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

부산광역시 광역사업과

부울경합동추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 정비 용역

2022. 3. 3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 정비 용역”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3. 3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강재규 교수(인제대학교 법학과)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권욱 박사(독일콘스탄츠대학교 행정학박사)

외부연구자문 배준구 명예교수(경성대학교 법학과)

안영훈 위원(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관행 박사(강원대학교)

노기현 박사(부산대학교)

권경선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진성만 박사(명지대학교)

연구보조원 박성수 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송수정 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절 연구의 배경	12
1. 추진배경	12
2. 필요성	13
제2절 과업의 내용	14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14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안 마련	16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자치법규안 마련	16
라. 상기 규약 및 자치법규 관련 상·하위 법령 상충관계 검토	17
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분야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합동작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17
바. 구성 지방자치의회 설명회 등 개최시, 책임연구원 등 참여	18
제3절 규약(안) 초안 [전문] (2021. 3. 31.자)	19
제4절 부울경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목록	32
제1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화	38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	40
1. 의의	40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제도와와의 관계	46
(1) 개관	46
(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47
(3) 지방자치단체조합	49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의 주요 내용	1
1. 의의	1
(1) 개념	1

(2) 연혁	2
1) 2006년 개정안의 내용	2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3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원칙	5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본의 사례	8
1. 일본 광역연합제도의 연혁	8
2. 설립 방법	8
3. 국가나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권한이양 대상으로서의 광역연합	9
4. 광역계획	9
5. 의원의 선거 및 장의 선거	10
6. 규약 변경의 요청 및 주민의 직접청구 제도	11
7. 분담금 및 기타 경비에 관한 이의	12
8. 협의회	12
9. 광역연합 사례	12
10.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시사점	14
(1)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제도의 특징	14
(2)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주는 시사점	15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독일의 사례	17
1. '사무의 구성방식'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17
(1)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	17
(2)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의 비교	18
(3) 시사점과 발전방향	19
2. '사무의 대상범위'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20
(1)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	20
(2)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의 비교	23
(3) 시사점과 발전방향	26
3. '사무의 처리권한'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26

(2) 법규상 특별·지역연합 비교와 발전방향	28
(3)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 차원에서 특별연합의 발전방향	29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프랑스의 사례	31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도화와 운영 실태	31
(1) 광역(도, 지역) 수준의 협력(연합) 제도화	31
2) 레지옹(지역, 광역도)의 협력(연합)과 통합	32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의 체계와 내용	55
제1절 규약안 법적 의의	57
1. 규약의 성격	57
제2절 규약안 조문별 검토	57
1. 필수적 규약 사항	57
2)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59
□ 규약(안) 구성 체계	59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쟁점의 법적 검토	109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11
1.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의 법제적 쟁점	111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건의	115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116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117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동의	117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119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119
(7)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0
2.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감사제도	120
(1)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적용여부	120

3.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처의 기능	124
(1)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125
(2)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125
(3) 전문위원의 복무관리와 역할	126
4. 기타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한 추가 논의 사항	127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129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 방법의 법제적 쟁점	129
(1) 규약안의 내용	129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방식	130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32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32
1. 규약(안)의 특별연합 사무: 현황 및 특성	132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	135
1. 사무분장 및 행정기구의 조직: 행정부서	135
2. 선행연구에서 사무분장과 행정부서	137
(1) 특별연합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137
(2)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보고서	138
(3)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의 발전방향	139
제5절 특별연합위원회	147
1. 위원회의 구성 형태	147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147
3. 특별연합위원회 외의 위원회	153
4. 검토의견 결론	154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체계와 내용	159
제1절 규약과 조례의 관계	159
1. 규약의 법적 성격	159

2. 규약의 내용.....	159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과 조례와의 관계.....	161
제2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62
 제6장 향후 과제.....	166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관련 향후 과제.....	166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관련 향후 과제.....	169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무 관련 향후 과제.....	173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위원회’관련 향후 과제.....	174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관련 향후 과제.....	176
1. 규약에 열거된 사무의 집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	176
2. 사무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과 이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176

[부록] 규약(안) 제6조 이관 사무 관련 근거법령 및 검토사항

제 1 편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1.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해소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추진

- ‘5+2 광역경제권구축으로 글로벌 경쟁거점 마련’(08.09.)
- 범정부 차원의 권역별 메가시티(3+2+3)* 전략 수립(20.12.)

* 경제통합형: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 행정통합형: 대경권, 광주전남

* 강소형: 전북, 강원, 제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으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공공단체

[참조조문]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필요성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선도할 필요
- 광역행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 설립 필요
- 행정협의회 등 기존의 광역행정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단일 경제권으로 산업간 연계효과 기대

제2절 과업의 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1) 규약안 필수규정 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 제202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규약에 필수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에서 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필수적 규정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제1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제2호),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제4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제5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6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제8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제9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제10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제11호),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2호)임.

구분	필수적 규정 사항
지방자치법 제202조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참조조문]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 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 규약에서 제정하도록 정한 규정안 포함

(3) 규약안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조항 검토 및 조례 위임 범위 분석

- 의회 구성의원 수
- 각 시도의회별 참여의원 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 방식
- 규약상 직접 규정해야 하는 사항 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의 구분 검토
- 각 상임위원회 개수 및 구성, 특별지방의원의 임기, 특별지방의원의 선출 또는 의장단 윤번제 도입 가능성 검토, 규약과 조례 간 규정 범위 검토

(4) 유사기관 사례조사 비교분석 및 적정 규약안 도출

-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관련된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규약안에 반영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창원시법’)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7호, 2006. 1. 11.,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안 마련

(1) 기본조례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조례)

- (행정) 공무원정원, 사무전결처리, 직무대리, 사무인계인수, 복무 및 근무규정 등
- (복무) 출장, 당직, 여비 등
- (회계) 재무회계, 물품관리, 공용차량, 공유재산, 및 보조금 관리 등
- (일반) 소송사무처리, 정보공개, 공인, 민원조정 및 법제업무 운영 등

(2) 구성 자치단체 이관사무(사업) 및 국가위임사무 관련 조례안

- 국가위임사무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사업)에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자치법규안 마련

(1) 의회 구성·운영에 필수적인 자치법규안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출범과 첫 회의 운영까지 필요한 자치법규안
-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회의규칙, 사무처리관련 규정 등
- 의회사무처 직원 수 및 구성, 각종 비용 등에 관한 규정

(2) 자치법규 시행일자 및 지방자치법 등 준용 규정 마련

○ 시행일자*,

○ 지방자치법상의 의회관련 부분 준용** 검토

* 첫 회기에서 의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각종 조례안 등 의결되므로 시행일자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 또는 구성 지방의회 자치법규 준용 필요성 검토

라. 상기 규약 및 자치법규 관련 상·하위 법령 상충관계 검토

1) 조례·규칙과 상충된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2) 개정이 필요한 연합사무 관련 부울경 조례 개정안 제출

3) 부산·울산·경남 자치법규(조례·규칙) 비교분석 및 적정안 도출

4) 타시도 자치법규 우수사례 적용 검토

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분야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합동작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1)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 부분 전담연구원 2명 이상 지정

○ 한정된 기간 내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업무 분장*

* 규약안 조항별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구성·운영 관련 필수 조례안 마련

(2) 현장 합동작업 실시 : 2명 이상

○ 부울경 합동추진단 내 합동작업공간 구성

- 전담공무원과 합동작업으로 과업수행시간 절감

(3)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총 2회)

- 착수보고회 이후 1차 회의, 중간보고회 이후 2차 회의 실시

- * 전문가 Pool은 5명 이상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

- 바. 구성 지방자치의회 설명회 등 개최시, 책임연구원 등 참여

(1) 규약안 및 조례안 설명을 위한 의회 설명회 시 책임연구원 참여

- 각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특위, 의장단 등 설명회 시 참여

- * 책임연구원 설명 및 질의응답 등 형식

(2)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한 제시의견 등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제3절 규약(안) [전문] (2021. 3. 31.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

제4조(관할 구역) 특별연합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제2장 사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①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초광역 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한다.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② 특별연합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④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사무의 변경) ① 특별연합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또는 그 외에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연합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본계획 이행 및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③ 특별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9조(의회의 구성) ① 특별연합회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연합회의의원(이하 “특별연합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27명으로 하고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 9명
2. 울산광역시의회 9명
3. 경상남도의회 9명

③ 특별연합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별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의 임기) ①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연합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10조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결사항) 특별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① 특별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특별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후 1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특별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연합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특별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제1호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특별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특별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특별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특별연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가입 및 탈퇴)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1조(해산) 특별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①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사무처리개시일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특별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소집한다.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은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특별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연합 설치 후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개별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의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무</p> <p>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p> <p>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무</p> <p>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p>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p> <p>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광역 급행버스(보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p>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p> <p>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p>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수소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p> <p>라.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에 관한 사무</p> <p>마.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p>가.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나.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7. 초광역 자동차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p>가.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자동차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라.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가.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UAM 항로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에 관한 사무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존 제조산업 대 규모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무 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융합 혁신 인재양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과학기술기초법」 제4조에 따른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무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라. 「과학기술기초법」 제4조에 따른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기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나.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

구 분	처 리 사 무
에 관한 사무	<p>성·운영에 관한 사무</p> <p>나.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p> <p>다.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p>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무</p> <p>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p>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p> <p>나. 감염병병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p> <p>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p> <p>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p> <p>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p> <p>나.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무</p> <p>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p> <p>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 및 화산 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p>
17.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무</p>
18.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초광역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p>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p> <p>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p> <p>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p> <p>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p> <p>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p> <p>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p> <p>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p> <p>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p> <p>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p> <p>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p> <p>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p> <p>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p> <p>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p> <p>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p> <p>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p> <p>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p>

구 분	처 리 사 무
	<p>무</p> <p>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p> <p>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p>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p>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p> <p>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무</p> <p>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무</p> <p>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 규정에 관한 사무</p> <p>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변경 시 고시 및 관계서류 송부에 관한 사무</p> <p>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p> <p>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무</p> <p>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해제 통보·고시에 관한 사무</p> <p>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p> <p>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다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p> <p>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p> <p>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일</p>

구 분	처 리 사 무
	<p>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고시 및 관계서류 의 송부에 관한 사무</p> <p>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p> <p>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일반물류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의 설치 또는 기존 공원 및 녹지 보존 명령에 관한 사무</p> <p>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무</p> <p>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p> <p>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일 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고, 관리청 통지,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p> <p>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미착수 및 토지·시설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p> <p>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의무 이행시까지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p> <p>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의무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 수에 관한 사무</p> <p>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무</p> <p>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고시에 관한 사무</p> <p>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6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시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7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p> <p>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8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의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p> <p>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관련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처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p> <p>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 고시에 관한 사무</p> <p>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구성·관리에 관한 사무</p> <p>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일반물류단지관리계획 접수에 관한 사무</p> <p>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조치 권고에 관한 사무</p>

제4절 부울경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목록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109 건
의회	의회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공인 조례
의회	의회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
의회	의회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규칙
의회	의회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의회	의회	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의회	의회	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	의회	1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1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회	의회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	의회	1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1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	의회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의회	의회	1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의회	의회	2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2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2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포상 규정
행정	기획	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	기획	2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행정	기획	2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행정	기획	2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행정	기획	2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행정	기획	2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행정	기획	2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직제규칙 규칙
행정	기획	3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전결 처리규칙
행정	기획	3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변경 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	기획	3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조정위원회 조례
행정	기획	3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행정	기획	3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행정	기획	3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국외출장 규정
행정	기획	4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행정	기획	4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	기획	4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기 등에 관한 조례
행정	행정	4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행정	행정	4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행정	행정	4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행정	행정	4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인계인수규칙
행정	행정	4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행정	인사	4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인 조례
행정	인사	4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행정	인사	5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행정	인사	5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정보공개 조례
행정	인사	5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행정	인사	5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시험수당 지급 조례
행정	인사	5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포상 조례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행정	인사	5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행정	인사	5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행정	인사	5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5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	회계	5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회계	회계		
회계	회계	6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회계	회계		
회계	회계	6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6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용차량 관리규칙
회계	회계	6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6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회계	회계	6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회계	세정	6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세정	6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수입증지 조례
회계	세정	6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반	공보	6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보 발행 규정
일반	소통	7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	법제	7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반	법제	7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반	법제	7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반	법제	7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	법제	7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반	법제	7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반	법제	8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반	감사	8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반	감사	8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행동강령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일반	감사	8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감사 규칙
일반	감사	8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일상감사 규정
일반	감사	8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반	감사	8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반	감사	8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반	감사	8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이관사무		8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조례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		108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		109	사무이관에 관한 조례

제 2 편

본 문

제1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조 제도화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화 사례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일본의 사례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독일의 사례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프랑스의 사례

제1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화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

1. 의의

- 개정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제1항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인 ‘시·군·구’로 구성됨.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2조 제3항·제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근거를 두었고,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러한 법적 근거는 1988년 4월 6일 동법 전부개정 당시 신설했으나,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었음
-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장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2일 공포(시행 2022년 1월 13일) 되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였음

2. 지방자치법 제12장에 따른 설치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설치권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하여 정함
- 제2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특별지방자치회 조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조직에 관하여 정함
- 제3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부담, 사무처리 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의 가입, 탈퇴, 해산, 준용규정, 타법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장의 조문의 체계는 아래와 같음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199 설치	① 설치근거 및 설치절차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지방의회의결→행안부 장관 승인) ② 행안부장관 승인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인격 부여 ④ 필요시 사무위임 요청(지방자치단체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⑤ 사무위임이 포함된 규약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행안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⑥ 행안부장관의 승인 후 규약 고시
§200 설치권고 등	공익상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해산·규약 변경 권고(행안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201 구역	원칙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합한 것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202 규약 등	① 규약에 포함될 내용(목적,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사무소의 위치, 사무,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항목 등) ② 규약변경시 설치절차 준용 ③ 규약변경시 고시

§203 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 처리 ③ 기본계획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요청(특별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결→구성 지방자치단체)
§204 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②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가능 ③ 의회 의결안건 중 중요한 사항은 사전 통지
§205 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별지방자치 단체 장 겸직 가능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집행기관 직원은 규약에 따라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으 로 구성
제3절 운영	
§206 경비의 부담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에 따라 분담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 설치·운영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위임시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담
§207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장, 행안부장관에게 사무처리상황 등 을 통지
§208 가입 및 탈퇴	① 가입 및 탈퇴 절차(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결→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 ② 가입 및 탈퇴 수용 결정(특별지방자치단체장 →의회 동의) ③ 가입 및 탈퇴 절차는 설치 절차 준용
§209 해산	① 해산 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② 해산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재산처분, 사무·직원 재배치,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210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구,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시·군·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 치단체는 시·도 규정 준용 하고, 시·군·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규정을 준용
§2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용시
② 시·도, 시·도지사 인용시
③ 시·군·구, 시·군·구청장 인용시 규약이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안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장을 인용한 것으로 봄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층 간 차이를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자유롭게 설치(중앙행정기관은 설치 주체에서 제외)
- 설치목적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구성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각 구성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모두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권 등과 같이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규정임.

○ 제199조(설치) 제2항부터 제6항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승인 등이 명시된 공문서 통보시점) 효력을 가지며,
-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약으로 인한 특정사무 관할 변경 가능성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에게 공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외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이 가능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과정에 대한 절차·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
- 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지원과에 요청할 수 있으나,
- 최종적으로 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주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장이고 그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므로 위임 필요성 등을 충분히 전달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서면(공문서) 혹은 대면으로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회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등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음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규약의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여야 함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사항을 알려 원활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제208조((가입 및 탈퇴), 제209조(해산)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 필요 등에 의해 임의로 설치하는 기관이므로 구성 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나,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 사무처리 범위, 위임사무의 경우 관계 기관과의 업무체계상 변경을 초래하므로 설치절차를 준용함
- 해산 승인 시점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의회·집행기관이 소멸되며, 규약 및 조례 등의 실효성이 없어짐

○ 준용규정의 체계

법률 규정			주요내용
제1장(총강)	제1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7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8조	▶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	▶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0조
	제11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2장(주민)		제16조③	▶ 주민의 권리
제4장(선거)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조직)	제38조	▶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2절(지방의회의원)	제39조	▶ 의원의 임기
		제40조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2조	▶ 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6장 (집행기관)	제1절(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9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1조 제2호 후단, 제3호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포함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2절(보조기관)	제122조	▶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3절(소속 행정기관)	제125조	▶ 직속기관
		제126조	▶ 사업소
		제127조	▶ 출장소
		제128조	▶ 합의회행정기관
	제4절(하부행정기관)	제130조	▶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31조	▶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2조	▶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33조	▶ 하부행정기구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4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재무)	제3절(수입과 지출)	제151조	▶ 지방세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65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절(행정협의회)	제168조	▶ 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제169조	▶ 협의회의의 조직
		제170조	▶ 협의회의의 규약
		제171조	▶ 협의회의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2조	▶ 협의사항의 조정
		제173조	▶ 협의회의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4조	▶ 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3절(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5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6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77조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78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79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80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제4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제도와와의 관계

(1) 개관

- 「지방자치법」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률임. 「지방자치법」의 조문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내용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관계에 관한 규율로 대별될 수 있음¹⁾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택하게 되는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 및 사업과 사무집행상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포함됨. 이상의 제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 최봉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上),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20(3), 2020, 242.

(‘20.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이후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에 보고한 다음 규약을 고시하여야 함
- (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1.4.20.)] 제152조제2항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제169조제2항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수정하였음.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 보고절차로 대체하였음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제171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경우 필요적 사항으로 협의회의 명칭(제1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제2호),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제3호),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제4호),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제5호),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호)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법인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조직체 내지 협력체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²⁾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제174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리고 제3항에 따라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협의회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게 되며 협의회의 결정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협의회의 회장 및 위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기초하여 협의회는 독자적인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음.³⁾

2) 김해룡,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7(2). 2007. 6.

3) 김해룡,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7(2). 2007. 6.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관한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협의회가 협의회 명의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굳이 동 협의회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가 독자적인 사무처리기구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한 실례도 없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는 단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12.)] 제176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시·도의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직권한을 가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조직권한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감독기관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와 달리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감독기관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행정협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12.)] 제169조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12.)] 제200조에 근거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은 감독권한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때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점, 즉 적법성을 심사하는데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⁴⁾

4) 김해룡,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7(2). 2007. 7.

구 분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성격	법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
구성 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
처리 사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광역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
국가의 사무위임 등	-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 요청 가능
설치 절차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의결기관	조합회의	의회
	위원 선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
	조례 제정권	X
집행기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
	長의 임용권	X
	직원 구성	파견직원
주민 참여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청구 등 관련 규정 준용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주요 내용

1. 의의

(1) 개념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정의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로 구분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이와 구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유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에 관한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구별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 「지방자치법」 제199조제3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짐으로써 독립된 권한을 가지게 됨

(2) 연혁

1) 2006년 개정안의 내용

- 2006년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련의 조문이 포함되었으며, 2006년 지방자치법개정안 제142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들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164조 이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그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음. 당시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던 사항을 직접 동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종류는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설치 목적을 규정하도록 하였음⁵⁾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이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 이후 제2조제3항 후단의 조문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제12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음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5) 김해룡,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7(2). 2007. 4.

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u>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u>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치체임(Local self-polity)

- 영어로는 ‘Regional/Local self-government’임
-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즉, 지방공공단체의 한 유형으로 헌법에서 명시), 프랑스에서는 Territorial Collectivity, 미국은 city, county, town 등으로 용어를 사용함
- 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통칭함. 영어 표현으로는 Territorial/Local Authority(지방공공단체),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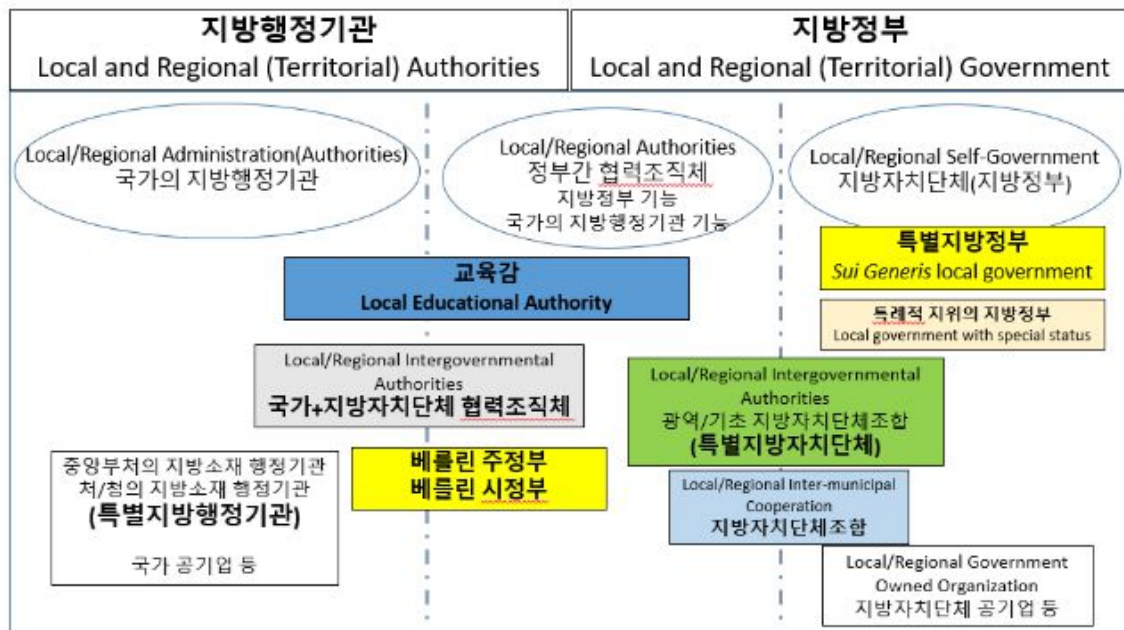
○ Territorial/Local Authority(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사례

- 국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조직체 → (직선)교육감 및 (국가기관)교육청
-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Cf.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하부)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2022년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 Local Authority=local government + local and territorial branch office of central government + local/regional intergovernmental authorities

○ (외국 사례) 런던대도시의 영어 명칭은 Greater London Authority

- 즉, 런던대도시 지역정부는 런던시장, 런던의회 등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지만, 그 집행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들(LDA, London Transport, London Police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런던시장은 그 집행기관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명령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유형임
-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정부)’의 개념, 지위
 - 한/일을 제외한 지방자치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정부’(Sui Generis local government)는, 헌법에서 언어적, 지리적, 문화·인종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별 지방정부>라고 규정한 지방정부의 한 유형임
 - 따라서 한/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란 국가 헌법이 아닌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임
 - 지방정부 자치권의 특수성(Sui Generis polity)을 인정한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통치체(Regional/Local Polity)
-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교육감(교육청), - 특별적 지위의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임
-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한 유형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한 변형임

<그림 1> 지방정부 ≠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행정조직의 유형별 구분 도식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은 <시도-시군구>(특별시, 특별도 포함) 2가지 종류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구분한다고 하였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음. 즉, 이 경우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분명 다르게 명시하고 있음

<표 1> 한국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분	지방자치 관련 조문 근거	내용 분석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만 정해야 함(헌법 제117조제2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는 2가지 종류로 구분(시도-시군구)(제2조제1항)

- 2022년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은 “특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하면 제12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하며,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창설할 수 있음
- (소결) 명확하게 특정 목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필수로 하는 협력형 또는 연합형 공법인체로서,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조직과 유사한 기구임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원칙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별성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 권한과 그 범위는 명확히 제한적이며 특정한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임
-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합의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근거하기 때문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사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가 특정사무를 위임한 경우 등에 제한하여 특정분야의 사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됨
- 이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이고 특정 기능 수행을 한다는 ‘특별성의 원칙’임. 이에 기초한 조직과 재정 운영체계가 결정됨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배타성 원칙(Principle of Exclusivity)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사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이 원칙에 따라 수행사무의 행정, 재정 및 입법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양받음
- 이처럼 구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권한이양’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 수행사무의 집행 권한 등은 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칙상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이양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집행하도록 지원체제로서 뒷받침을

하면 됨

- 이런 뜻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에 관해서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됨

(3)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약 사항

- (제한적인 조례제정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자격을 갖고 있으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적 성격의 포괄적인 자치입법권과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와 상호협약된 ‘규약’에 근거하여 특정사무 및 특정분야의 사무수행을 위한 제한된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법상 운영원칙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 설치하며,
- ② 협력규약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가 운영되어야 하고,
- ③ 특별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 ⑤ 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고,
- ⑥ 운영경비 등의 부담은 구성 자치단체들이 부담(구성 자치단체는 경비 관련 특별회계 설치·운영).
- ⑦ 재정지원은 국가 및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

(5) 지방자치법에 따른 운영 특성

- ① 반드시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② 가능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③ 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교부세법의 수혜 대상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됨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본의 사례⁶⁾

1. 일본 광역연합제도의 연혁

-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대책 등 광역적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의 사무처리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2019년 2월의 일본 총무성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 현재 116개 존재함[자료1 참조].
- 광역연합은 일부사무조합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 예를 들어 일부사무조합에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사무이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적인 권한을 일단 각 도도부현에 이양한 다음 그 도도부현이 협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일부사무조합의 권한으로 다시 이양하였음. 혹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관할하는 사무의 변경·추가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에 발의권이 없고, 조합을 구성하는 단체의 전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협의가 필요하여, 조합 자체로서의 자주성 및 주체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음. 그리고 광역에 걸친 정비계획을 책정하는 경우에 구성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반성에서 광역연합제도가 출범하였음⁷⁾

2. 설립 방법

- 보통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구는 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여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 광역연합을 설립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84조제3항). 총무대신이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중앙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동조 제4항).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도부현 지사가 관계있는 시정촌 및 특별구에 대해 광역연합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동 제285조의2제1항). 광역연합의 설립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후기고령자의료연합(後期高齢者医療廣域聯合)이 그 예임(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제48조)⁸⁾.

6) 이 절의 내용은 최우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호 21(3), 2021. 9에 따름

7) 辻山幸宜『地方分権と自治体連合』(敬文堂, 1994)244~245頁.

8) 동 법률 제48조: 시정촌은 후기고령자의료사무(보험료의 징수사무 및 피보험자의 편익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구역마다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시정촌이 참여하는 광역연합(이하,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3. 국가나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권한이양 대상으로서의 광역연합

- 광역연합이 소장하는 사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됨. 첫째는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권한이양으로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사무임(광역적 도도부현사무). 둘째는 국가사무가 이양되는 경우임
- 광역연합제도의 특색 중 하나는 국가사무의 이양 대상으로 미리 상정되기도 한다는 것임.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의 사무지만 광역연합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291조의2제1항). 즉 광역연합에게 국가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임. 더욱이 도도부현이 가입한 광역연합의 장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광역연합의 사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동조 제4항).
- 도도부현은 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사무와 관련하는 것을 조례에 따라 해당 광역연합에게 처리토록 할 수 있음(동조 제2항). 그리고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도부현에게 해당 광역연합의 사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도도부현 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동조 제5항), 상호 필요에 의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연합은 단순히 사무의 공동처리방식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강한 권한을 가진 광역적 행정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음⁹⁾

4. 광역계획

- 광역계획은 광역연합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광역연합은 해당 광역연합이 설립된 후 즉시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계획을 작성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7제1항). 이 광역계획에 기초하여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광역적인 정책이나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임. 광역계획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와 사업의 처리 및 수행 방법, 광역연합 및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각 처리하여야 할 사무,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광역연합 및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계획에 기초하여 사무 처리를 하는 것은 광역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

9) 宇賀克也, 前掲書, 90頁.

하여 중요한 것임. 따라서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계획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 7 제4항)

- 광역연합의 장은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광역계획의 실시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광역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91조의7 제5항)
- 광역연합은 광역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일체적이면서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연합의 조례로 필요한 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음. 이 협의회는 광역연합의 장(장에 대신하여 이사회를 두는 광역연합에 있어서는 이사회) 및 국가지방행정기관의 장, 도도부현지사(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지사를 제외한다), 광역연합의 구역 내의 공공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학식경험자 중에서 광역연합의 장(장에 대신하여 이사회를 두는 광역연합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자로 구성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8). 이 협의회는 광역계획에 기초한 시책과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의 시책의 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임¹⁰⁾

5. 의원의 선거 및 장의 선거

- 광역연합회의의 의원은 광역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연합의 선거인(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구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의 투표에 의하거나,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함. 그리고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연합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거나,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투표로 선출함(지방자치법 제291의5). 광역연합의 장의 선임은 일부사무조합의 집행기관(관리자)과 같이 단체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 충당할 수는 없고 선거로 결정하여야 함. 다만 광역연합회의의 의원 또는 의장 그 밖의 직원은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직원이 겸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91조의4 제4항)
- 2012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장에 대신하여 이사회를 둘 수도 있음. 이 경우 이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연합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거나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장이 투표에 의해 선출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5 제2항. 동법 제291조의4 제4항 참조). 지방분권의 추

10) 松本英昭, 前掲書, 861頁.

진에 따라 그 권한이 커져가는 광역연합의 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201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광역연합의 집행기관으로 장 대신 이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¹¹⁾

6. 규약 변경의 요청 및 주민의 직접청구 제도

- 광역연합은 그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사무조합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음
- 첫째, 규약변경의 요청권임.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광역연합의 규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3 제7항 및 제8항)
- 둘째, 주민에 의한 직접청구 제도임. 광역연합의 특색으로서 주민의 참가권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임. 광역연합에 관한 조례의 제정, 개폐의 청구, 사무 감독의 청구, 의회 해산청구 또는 의회의 의원이나 장 등의 해직청구에 관하여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의 직접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291조의6제1항, 제5항~제7항). 또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의 총 3분의1(① 그 총수가 40만 초과 80만 이하의 경우에는 그 40만을 넘는 수에 6분의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 ② 그 총수가 8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만을 넘는 수에 8분의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6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 그리고 40만에 3분의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이상의 연서로써 해당 광역연합의 장에 대하여 해당 광역연합의 규약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이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규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만 하고, 또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6 제2항~제5항)
- 광역연합에 대한 주민통제의 방안으로 주민에 의한 직접청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규약변경의 요청에 관한 직접청구도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임¹²⁾

11) 宇賀克也, 前掲書, 92頁.

12) 松本英昭, 前掲書, 863頁.

7. 분담금 및 기타 경비에 관한 이의

- 광역연합의 경비지출 방법은 규약으로 정해짐(지방자치법 제291조의4제1항제9호).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연합이 수립한 광역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락 조정 및 광역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사무의 처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구의 인구, 면적, 지방세의 수입액, 재정력 기타의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행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9 제1항). 이에 의해 정해진 광역연합 규약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9 제2항).
- 또한, 경비의 분담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 국가 또는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된 사무와 관련하여 규약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지출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¹³⁾,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연합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광역연합의 장은 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함. 그리고 규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의회의 자문을 구하여 규약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91조의12).

8. 협의회

- 광역연합은 광역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광역연합의 조례로 필요한 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91조의8제1항)

9. 광역연합 사례

- ① 도도부현과 현 내의 시정촌이 가입되어 있는 광역연합
- 도도부현이 가입하고 있는 광역연합의 예로서 ‘색의 도시 사이타마 사람 만들기 광역연합’(彩の国さいたま人づくり広域連合)이 있음. 이는 사이타마현과 현 내의 전 시정촌이 가입한 연합으로,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인재 개발, 교류 및 인재 확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¹⁴⁾ ‘오키광역연합(隠岐広域連合)’¹⁵⁾(1999년9월1일 설립)은 시마네현(島根県)과 현 내의 3町1村이 가입하고 있음. 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요양보험 및 구급의료대책사업이

13) 이런 사무는 법정수탁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필자 해석).

14) 宇賀克也, 前掲書, 91頁.

15) 일본 시마네 현 북쪽 46~93km의 동해상에 있는 제도. 약 180개의 화산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도는 도고섬이다.

주된 사무임. 2007년에는 앞서 언급한 전 도도부현 구역 내의 모든 시정촌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後期高齢者医療広域連合)이 설립되었음. 2008년 1월 설립된 시즈오카지방 세체납정리기구(静岡地方税滞納整理機構)는 현 내의 전 시정촌을 구성단체로 하는 광역연합임¹⁶⁾

② 관서광역연합

- 관서광역연합은 일본 관서지방의 경제계와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 7월30일 국가로부터의 권한이양의 수임기구로서 관서광역연합을 설치하였고, 광역방재대책, 광역관광, 산업관광, 산업정책, 구급의료의 연대, 환경 대책, 교통·물류 기반의 일체적 관리 및 정비 등에 착수할 것을 합의하였음. 그리고 2010년 12월 1일 총무대신으로부터 관서광역연합의 설립을 허가받았음. 한편 이 관서광역연합은 道州制로의 이행을 시야에 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⁷⁾

③ 특정광역연합

- 광역연합의 한 형태로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유형이 있음. 2012년 11월 15일 “국가특별행정기관 사무 등의 이양에 관한 법률안”이 각의(閣議)에서 결정되었지만, 동 법안 제출 전에 중의원의 해산으로 동 법률안은 폐기 되었음. 이 법률안은 특별행정기관 정비의 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었음. 특별행정기관의 모든 사무를 해당 광역연합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국가 특별행정기관으로 지역에 있는 경제산업국, 지방정비국 및 지방환경사무소의 사무를 해당 광역연합에 이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음.¹⁸⁾

16) 宇賀克也, 前掲書, 92頁.

17) 宇賀克也, 前掲書, 91~92頁. 일본의 도주제에 관해서는 宇賀克也, 前掲書, 37~40頁 참조.

18)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宇賀克也, 前掲書, 91~94頁 참조. 살펴보면 일본은 다양한 광역연합의 형태를 통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시사점

- 본장에서는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며 광역연합의 성공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간사이광역연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함. 간사이광역연합의 모델을 전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한 ‘메가시티’논의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을 미리 밝힘

(1)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제도의 특징¹⁹⁾

1) 구성자치단체별로 담당 사무를 정함

- 광역계획, 예·결산 등 광역연합의 운영상 중요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침을 광역연합장이 결정함에 있어 구성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음. 더불어 구성단체장이 주도하여 각 분야의 사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장이 사무 분야마다 ‘담당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집행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담당사무	지방자치단체
광역방재담당	효고현지사
광역방재부담당,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부담당	나라현지사
광역방재부담당	고베시장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담당, 2025년 오사카·칸사이만국박람회부담당	교토부지사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담당	교토시장
광역산업진흥담당, 2025년 오사카·칸사이만국박람회부담당	오사카부지사
광역산업진흥부담당, 2025년 오사카·칸사이만국박람회부담당	오사카시장
광역산업진흥부담당	사카이시장
광역의료담당	도쿠시마현지사
광역환경보전담당	시가현지사
광역직원연수담당, 농림수산진흥담당	와카야마현지사
지오파크담당, 스포츠진흥부담당	돗토리현지사

19) 간사이광역연합에 관해서는 동 기관의 공식사이트(<https://www.kouiki-kansai.jp/>)에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다. 이를 참조 바란다.

2) 연계단체

- 규약에 따라 사무수행을 위한 연계단체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고베시 등이 처음에는 연계단체로 광역연합에 참여했다가 구성단체로 발전하였음
- 우리도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연계단체 활용을 가능하게 규약 등에 길을 열어두고 점차 광역연합의 규모를 넓혀가는 것도 가능해 보임

3) 정부기관등대책위원회

- 간사이광역연합은 설립초기부터 정부기관등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해왔음. 각종 시책의 조기실현이나 시책의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특히 부현의 행정구역을 넘는 광역사무에 대해 간사이광역연합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도 설치하였음. 이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광역사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 체계를 확립한 다음 국가 파견기관의 인원 결정,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였음

4) 광역계획의 충실화

- 광역계획은 광역연합이 실시하는 사무를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말함. 간사이광역연합은 광역계획에 기초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목표로 하는 간사이의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단체, 시정촌과의 역할분담 아래 대응하고 있음
- 제4기 광역계획(2020~2022)에서는 간사이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간사이의 장래상에 대한 기본구상으로서 “국토의 양안구조를 실현하고 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간사이”, “개성이나 장점, 역사나 문화를 살려서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 “아시아·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창조 거점 간사이”의 3가지를 들고 간사이의 ‘힘’을 종합화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5) 주민참여

- 광역연합의회, 시정촌과의 의견교환회, 경제계와의 의견교환회, 간사이여성활약 추진 포럼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

(2)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주는 시사점

○ 간사이광역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임. 오랜 기간을 두고 지역의 상공계, 주민이 힘을 모으고 이에 행정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광역연합이 발전해 나갔다는 점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다운업 형식으로 전개된 점은 현재 부·울·경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론과 비슷함²⁰⁾
- 둘째, 광역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규약을 통한 철저한 사무 분담을 하였다는 점임.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 사무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도 달리 하는 등 세부적인 사무 분담을 규약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임
- 셋째, 규약을 통한 단체장, 의회 구성, 재정 분담 등 민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였다는 점임. 광역연합의 성공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 재정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사무는 어떤 사무를 수행할 것인지 등은 주요 사항으로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 특히 단체장의 선출에 대한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
- 넷째, 간사이광역연합은 내부에 대정부 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임. 우리의 경우, 재정적 지원, 사무의 위임 및 이양 등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사무위임의 요청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두어야 함
-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지역상공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임. 간사이광역연합역은 동경중심의 국가발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지역의 상공계가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으며, 그 설립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철저히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부·울·경 메가시티론 역시 지역경제의 부흥과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일선에서 느낀 부·울·경 지역의 상공계에서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2019년 설립된 ‘동남권발전협의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임²¹⁾

20) 설립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https://www.kouiki-kansai.jp/> 참조.

21) 동남권발전협의회 <https://www.onedongnam.or.kr/>. 동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플랫폼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출범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이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행정 수요를 조사하여 어떤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이들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함. ‘특별한 사무’에 대한 세부적 검증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임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독일의 사례²²⁾

1. ‘사무의 구성방식’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1)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

- 본 보고서에서 독일사례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이하: 지역연합)을 살펴보았음.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와 특별연합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음
- 지역연합 사무의 구성방식은 이양설치, 자체설치, 위임설치 등 세 가지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우선, 이양설치방식임. 각종 계획수립사무가 이양방식에 의해 설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연합 사무의 예임. 지역연합의 계획수립 사무들은 지역종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지역교통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안권욱 · 배준구, 2021). 이들 계획사무는 1973년 1월 1일 지역연합의 전신인 "네키카중류광역조합(Regionalverband Mittlerer Neckar)"으로 이양되었음. 즉, 이들 계획수립사무는 1973년 이전까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Landesregierung BW)의 사무였음(안권욱, 2011; 안권욱 2012a). 그런데 바덴-뷔르템베르크(BW)에서는 1971년 7월 26일 행정개혁법률(지역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지역계획(Regionalplanung)과 관련한 사무들이 지역연합으로 이양되었음
 - 다음으로, 자체설치방식임. 임의사무 분야가 자체설치방식에 의해 구성된 대표적인 지역연합 사무의 예임. 지역연합의 주요 임의사무는 ‘문화 · 스포츠 · 국제회의 등의 행사유치 · 조직화’, ‘박람회 행사유치 · 조직화’, ‘녹지공원운영 · 협력사무’, ‘생활쓰레기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안권욱, 2011; 안권욱 2012b). 이러한 자체설치방식에 의한 지역연합 사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무발굴권한(Aufgabenfindungsrecht)을 법률에 의해 지역연합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위임설치방식임. 위임방식에 의해 설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연합 사무는 ‘자치단체 위임계획사무’임. 자치단체 위임계획사무는 크게 두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그 하나의 분

22) 이 절의 내용은 최우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호 21(3). 2021. 9에 따름

아는 ‘자치단체 건설계획(Kommunale Bauleitplanung von Gemeinden und Landkreisen)’과 관련한 사무이며, 다른 하나의 분야는 ‘공간개발 자치단체 자문(Beratung der Gemeinden in Fragen der Raumentwicklung)’과 관련한 사무임(안권욱 · 배준구, 2021). 그런데 구성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되어 설치된 사무가 지역연합 전체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은 부분임

- 이러한 세 방식에 의해 설치된 지역연합 사무는 의무적 고유사무, 임의적 고유사무, 위임사무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의무적 고유사무는 주정부로부터 이양 · 설치한 사무임
 - 임의적 고유사무는 지역연합이 스스로 발굴 · 설치한 사무임
 - 위임사무는 지역연합의 경우, 주정부나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구성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임

(2)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의 비교

- 사무의 구성방식 차원에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을 비교한 양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특별연합의 사무구성은 위임설치방식이 유일함. 반면, 지역연합은 이양설치, 자체설치, 위임설치 등 모두를 결합하고 있음. 즉, 특별연합 사무구성은 위임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둘째, 특별연합은 구성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무의 위임으로 사무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연합은 구성자치단체로부터만 사무의 위임을 받아 지역연합 사무로 하고 있음
 - 셋째, 지역연합의 경우, 주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없는 것은 주정부가 위임의 형태가 아니라, 이양설치의 형태로 지역연합에 사무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넷째, 지역연합은 자체설치방식에 의해 지역연합 사무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연합의 경우, 자체설치방식에 의한 사무구성을 결여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특별연합이 사무변경권한은 있지만, 변경대상 사무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결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사무구성방식 · 사무유형 차원에서 특별연합 · 지역연합의 비교

구분			특별연합 (부·울·경)	지역연합 (슈투트가르트)
사무구성 방식	이양 설치		×	○
	자체 설치		×	○
	위임설치	중앙·주정부	○	×
		구성자치단체	○	○
사무유형	고유사무	의무적고유사무	×	○
		임의적고유사무	×	○
	위임사무	중앙·주정부	○	×
		구성자치단체	○	○

- 사무유형차원에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을 비교한 양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특별연합은 위임사무가 유일한 사무형태이며, 고유사무를 결여하고 있음. 반면, 지역연합은 고유사무 중심으로 사무를 구성하고 있음
 - 둘째, 특별연합 위임사무는 구성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연합 위임사무는 구성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만으로 구성하고 있음

(3) 시사점과 발전방향

- 특별연합 사무구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이양하여, 특별연합 고유사무로 설치하는 이양설치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연합과 같이, 주정부 사무의 지역연합 이양설치 중심으로 사무구성이 이루어져야 특별연합의 고유사무가 설치될 수 있는 것임
 - 내실 있는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 사무의 특별연합으로의 이양에 있음
- 특별연합이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로서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간의 협력을 내실 있게 견인해 내기 위한 필수요건은 고유사무의 비중을 가급적 크게 하는 것에 있음
- 이는 특별연합의 협력견인역량이 특별연합의 사무권한 독립성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임. 그리고 그 사무권한 독립성 수준은 고유사무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임
 - 사무체계 차원에서, 특별연합 등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독립성은 ‘고유사무의 유·무 및 비

중, ‘위임·고유사무의 설치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선행연구(안권욱, 2012a; Benz A., 2003; Steinacher B., 1998)는 주장하고 있음. 또한 고유사무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특별연합, 지역연합, 광역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함. 역으로, 위임사무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낮아짐. 이는 특별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한 기관(중앙정부·구성자치단체 등)’의 관여나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고유·위임사무 비중이 기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과학 특히 행정학에서 일반화된 견해임(안권욱·손은일, 2021)

- 특별연합 사무구성방식 차원에서 주요한 일차적 과제는 중앙정부 사무 중 특별연합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있음
- 동시에 특별연합 규약에 고유사무 규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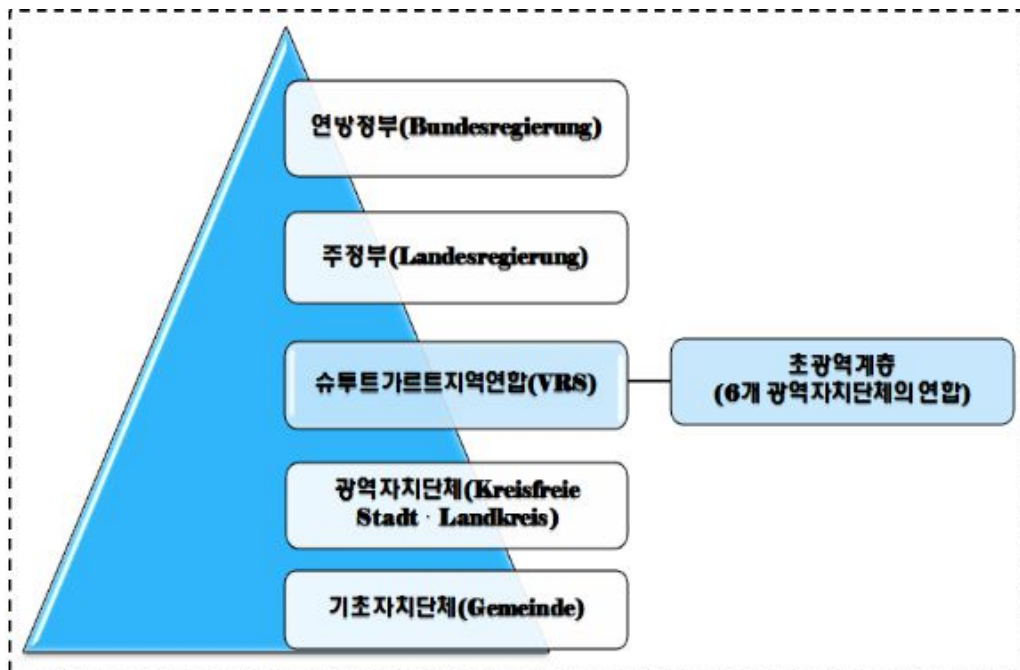
2. ‘사무의 대상범위’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1)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

- 수직적 정부계층구조 차원에서, 지역연합은 초광역수준에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임
- 독일의 수직적 정부계층은 연방정부·주정부·광역자치단체(Kreisfreie Stadt·Landkreis)·기초자치단체(Gemeinde) 등 4 계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안권욱, 2017)²³⁾

<그림 1> 독일의 수직적 정부계층과 지역연합

23) 독일의 경우, 3개 도시주(Stadt-Staat)를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일반주(Flächen-Staat)의 자치계층구조는 연방(Bund), 주(Land), 광역자치체인 자유시(Kreisfreie Stadt)·군(Kreis), 기초자치체인 게마인데(Gemeinde) 등 4 계층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독일의 수직적 정부계층구조에서, 지역연합은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7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초광역수준에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임
 - 현재 지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뱍링엔(Bäblingen), 에쓰링엔(Esslingen), 괴핑엔(Göppingen),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 램스-무르(Rems-Murr) 등임. 여기서 슈투트가르트는 자유시(Kreisfreie Stadt)이고, 나머지 5개 지역은 군(Kreis)임
- 정책영역의 차원에서, 지역연합 사무는 모두 15개 분야에 걸쳐 있음. 각 사무분야를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지역연합 사무의 영역과 분야

구분	사무영역	사무분야	참고
의무적 고유사무	계획수립	지역종합계획(1)	
		녹지기본계획(2)	
		녹지공원계획(3)	
		지역교통계획(4)	
	지역경제	경제육성(5)	
		관광마케팅(6)	
	주민편익	쓰레기처리(7)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
	대중교통	대중교통운영(8)	
		교통연결관리(9)	
임의적 고유사무	문화·스포츠·국제회의등의 유치·조직화(10)		
	박람회 유치·조직화(11)		
	녹지공원 운영·협력(12)		
	쓰레기처리(13)		가정 등 생활쓰레기 처리
자치단체 위임 계획사무	구성자치단체 위임 건설계획(14)		
	공간개발에 대한 자치단체 자문(15)		

- 의무적 고유사무는 계획수립, 지역경제, 주민편익, 대중교통 등 4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계획수립 영역은 지역종합계획(1), 녹지기본계획(2), 녹지공원계획(3), 지역교통계획(4) 등 4개 분야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지역경제 영역은 경제육성(5), 관광마케팅(6) 등 2개 분야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주민편익 영역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처리(7) 사무를 두고 있음
 - 대중교통 영역은 대중교통운영(8), 교통연결관리(9) 등 2개 분야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임의적 고유사무는 4개 사무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그 4개 분야 사무는 문화·스포츠·국제회의 등의 유치·조직화(10), 박람회 유치·조직화(11), 녹지공원 운영·협력(12), 생활쓰레기 처리사무(13)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구성자치단체 위임계획사무는 구성자치단체 위임 건설계획(14), 공간개발에 대한 자치단체 자문(15) 등 2개 분야의 사무를 설치하고 있음

(2)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의 비교

- 사무의 대상범위 차원에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을 비교하는 본 보고서의 일차적 관심은 사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에 있음
- 우선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각각 상이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무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음
 - 다음으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어떠한 사무를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1) 상이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무

-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각각 상이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무분야는 계획수립, 주민 일상생활지원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분야별로 그 상이한 사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수립 분야에서 특별연합은 지역교통계획 수립사무에 제한되어 있음. 반면, 지역연합은 지역의 공간개발·이용과 관련한 사무의 대부분을 그 사무로 설치하고 있음
 - 지역연합은 지역종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지역교통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고유사무로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연합은 자치구역 범위의 공간개발·이용을 자기 주도적·혁신적으로 구상·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 사무의 대상적 범위 차원에서 특별연합·지역연합의 비교

구 분		특별연합 (부·울·경)	지역연합 (슈투트가르트)
계획수립	지역종합계획	×	○
	녹지기본계획	×	○
	녹지공원계획	×	○
	지역교통계획	○	○
교통·물류	대중교통운영	도시철도 구축	도시철도 운영
		간선·광역버스구축	광역버스 운영
	도로·교통망관리	○	○
	물류	○	○
산업·투자유치	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친환경 조선, 디지털 신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E-모빌, 산업클러스터 관리(전기·기계·자 동차)
	투자유치	기업유치, 수출역량강화·통상환 경 공동대응	산업용지 공동투자
지역혁신	지역혁신	지역혁신플랫폼 <u>구축</u>	지역혁신플랫폼 <u>운영</u>
문화관광· 녹지공원· 먹거리	문화·관광	○	○
	녹지공원 운영	×	○
	먹거리공동체구축	○	×
보건의료· 재난·대기 환경	보건·의료	○	×
	재난	○	×
	대기환경	○	×
쓰레기 처리	산업폐기물 처리	×	○
	생활쓰레기 처리	×	○
자치단체 지원	자치단체 위임 건설계획	×	○
	공간개발 자치단체 자문	×	○

○ 주민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사무는 특별연합은 다양하고 광범하게 설치하고 있음. 반면, 지역연합은 쓰레기처리, 녹지공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그 사무로 하고 있을 따름임

- 특별연합은 주민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사무로서 먹거리공동체구축, 보건·의료, 재난, 대기환경 등 다양하고 광범하게 설치하고 있음. 이는 특별연합 정책목표 중 하나인 “생활공동체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반면, 지역연합은 특별연합과는 달리 쓰레기처리, 녹지공원운영 등의 사무만을 그 사무로 하고

있음. 쓰레기처리, 녹지공원운영 등을 지역연합의 사무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독일 지방자치단
체의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은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민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핵심 사무는 교통인데, 교통관련 사무는 특별연합이나 지역연합 모두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2)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무

- 상당 부분의 사무들은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 공통적 사무들은 교통·물류, 산업·투자유치, 지역혁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음
- 교통·물류 분야에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 사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철도와 관련한 사무는 특별연합과 지역연합 모두 주요 핵심 사무로 설치하고 있음. 다만, 특별연합은 도시철도 구축과 관련한 사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역연합은 도시철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무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연합은 도시철도 노선으로 구성자치단체 인 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지역을 하나의 생활공동체 공간으로 연결하고 있음. 또한 지역연합은 도시철도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안권욱·배준구, 2021).²⁴⁾
 - 둘째, 특별연합은 간선·광역버스 구축, 지역연합은 광역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셋째, 도로·교통망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넷째, 물류와 관련한 사무 역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 양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산업·투자유치 분야에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 사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산업·투자유치 분야는 구체적 사무의 중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별연합과 지역연합 양자 모두 주요한 사무로 설치하고 있음.
 - 산업 분야에서, 특별연합의 중점은 탄소중립, 수소경제, 친환경 조선, 디지털 신산업 등에 놓여 있음. 그런데 지역연합은 탄소중립, 수소경제, E-모빌, 산업클러스터 관리(전기·기계·자동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24) 철도의 운영 및 관리는 (유)바덴-뷔르템베르크 교통요금(Baden-Württemberg Tarif GmbH)이지만, 지역연합(VRS)은 이 유한회사 경영이사의 자격으로 직접으로 회사운영·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본 회사 경영이사는 총8명인데, 그 중 절반인 4명이 지역연합 의회의원 등 지역연합 소속원이다.

- 투자유치 분야에서, 특별연합은 기업유치, 수출역량강화·통상환경 공동대응 등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연합은 산업용지의 공동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혁신과 관련한 사항을 특별연합과 지역연합(VRS)은 주요한 사무로 설치하고 있음. 다만, 사무의 중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역혁신과 관련한 특별연합의 일차적 사무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놓여 있음.
 - 그런데 지역연합(VRS)에서 지역혁신 관련 사무 중점은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에 있음.
- 문화·관광 분야 역시 특별연합과 지역연합이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무임.

(3) 시사점과 발전방향

- 특별연합에도 역시 지역연합처럼 지역종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한 사무의 설치가 요구됨.
 - 지역연합의 지역종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지역교통계획 등은 지역의 공간개발·이용을자기 주도적·혁신적으로 구상·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주요한 제도적 수단임
 - 그러므로 이들 계획수립권한 없이는, 특별연합이 부·울·경 메가시티(Mega-City)형성,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생각임.
 - 따라서 규약(안)에서 설치하고 있는 지역교통계획 수립사무에 더하여, 지역종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의 수립 사무를 특별연합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폐기물 처리사무를 특별연합의 사무로 설치하는 것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폐기물처리를 특별연합의 사무로 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3. ‘사무의 처리권한’에서 독일사례와 발전방향

(1)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사례

1) 지역연합 관련 법규상 사무의 처리권한

- 지역연합법률 제7조 제1항과 지역연합규약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연합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결정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지역연합법률 제7조 제1항 제1문에서, 우선 “연합의회는 지역연합 행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제7조 제1항 제1문은 동시에 “연합대표, 사무총장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지역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연합의회가 결정한다.²⁵⁾”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연합규약 제2조 제1항 제1문에서도 역시 지역연합법률 제7조 제1항 제1문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연합법률이나 규약은 지역연합의 사무처리 권한 독립성·책임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의 특별연합규약(안)은 제6조 제3항에서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권한 독립성·책임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4> 법규상 사무의 처리권한과 사무유형에서 특별·지역연합 비교

구분	특별연합	지역연합
법규상 사무의 처리권한 규정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합의회는 지역연합 행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연합대표, 사무총장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지역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연합의회가 결정한다.
사무유형	위임사무	의무적 고유사무, 임의적 고유사무, 위임사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연합의 사무처리 권한 독립성 수준은 우리의 특별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연합 사무처리 권한 독립성 수준이 높은 것은 일차적으로 고유사무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 체계의 특성에서 비롯하고 있음.
 - 지역연합은 전체 15개 사무분야 중 구성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단지 2개 분야임. 즉,

25) 지역연합의 기관(Organ)은 의회, 연합대표, 사무총장 3개 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치단체 위임 건설계획, 공간개발 자치단체 자문 2개 사무분야를 제외한 13개 사무분야 모두는 지역연합의 고유사무임.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유사무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무의 처리권한 독립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음.

2) 시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

-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연합은 사무의 처리권한을 시민과 공유하고 있음.
 - 시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방식은 특정 사무분야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집행권한 시민사회단체위임’임.
 - 시민사회단체위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연합의 대표적인 사무분야는 스포츠·문화육성임. 즉, 지역연합의 스포츠·문화육성분야의 사무를 시민사회단체인 (사)스포츠협회(SpoRS e.V.), (사)문화협회(KulRS e.V.) 등이 그 집행역할을 하고 있음.
 - 시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에서, 지역연합은 스포츠·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각종 스포츠·문화 행사를 유치·개최하고 있음.

<표 5> 시민과 사무 처리권한을 공유하는 지역연합의 예

구분	단체현황	사무분야
(사)스포츠협회 (SpoRS e.V.)	38개의 분야별 스포츠협회 회원으로 구성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문화협회 (KulRS e.V.)	4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3개 협회 등 47개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	각종 문화 행사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2) 법규상 특별·지역연합 비교와 발전방향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기관들 중 하나임. 이러한 자치행정기관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권한 수준’은 사무의 처리독립성에 달려 있음. 그리고 그 사무의 처리독립성은 사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됨. 즉, 사무의 성격이 고유사무인가 위임사무인가에 따라 사무의 처리권한 독립성 및 책임성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회과학의 일반적 견해임.
- 규약(안)의 특별연합 사무는 모두 위임사무로만 구성하고 있음. 반면, 지역연합의 사무는 대부분 고유사무로 구성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의 처리권한 독립성 및 책임성 수준은 지역연합이

특별연합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음.

- 특별연합 사무의 처리권한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중앙정부 사무의 특별연합 이양’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연합으로 중앙정부 사무의 영구적 위임’임.
- 첫째, ‘중앙정부 사무의 특별연합 이양’임. 현재 전략적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 등의 형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핵심 사무권한을 특별연합으로 이양하고, 이양된 그 사무를 특별연합의 의무적 고유사무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둘째, ‘특별연합으로 중앙정부 사무의 영구적 위임’임. 이는 형식적 의미에서 여전히 중앙정부 사무로 존치한 상태이지만, 특별연합이 존재하는 동안까지 그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방식임. 동시에 그 사무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의 권한을 특별연합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음. 물론, 특별연합이 폐지되면 위임된 사무는 중앙정부로 환원되는 것임

(3)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 차원에서 특별연합의 발전방향

- 특별연합은 자치행정과정에 그 어떤 지방자치행정기관 보다 더 많은 주민참여가 요구됨. 그 당위적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되는 특별연합은 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간접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방자치기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부족함이 상당함
- 둘째, 특별연합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특별연합의 정책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특별연합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열려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특별연합이 부·울·경 지역차원의 자치행정기관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특별연합 자치행정과정에 주민의 참여임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연합과 같은 ‘주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를 구상할 수 있음. 그 기본구상을 “먹거리 공동체구축 사무”의 예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먹거리 공동체구축 사무분야에서는 “도시·농촌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농촌·도시 지역주민의 참여공간을, 특히 일반주민의 참여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러 주민단체들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읍·면·동 단위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 중 하나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임.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농촌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운영은 부·울·경 일반 주민들의 특별연합 자치행정과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도시·농촌 교류의 내용은 지역특산품, 농촌·도시농업인 교류²⁶⁾, 도시·농촌 인적자원 및 노동력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임.
- ‘도시·농촌교류 사업·사무’가 ‘주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사무처리 과정에 참여자인 일반주민과 특별연합 양자의 기능적 분담이 요구됨.
- 일반주민은 그 도시·농촌교류를 기획·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
 - 특별연합은 그 사업을 행·재정지원과 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도시·농촌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촌·도시 일반주민의 참여공간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특별연합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기관이라는, ‘특별연합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정책참여자가 일반·보통주민이기 때문에 특별연합의 존재를 ‘일반주민에게 저변확대’에 아주 효율적임.
 - 셋째, 일반주민에 저변확대는 특별연합의 민주성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특별연합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제고가 ‘특별연합 자치행정과정에 대한 주민통제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일반주민의 높은 관심·통제 하에서 운영되는 특별연합은 그 사무처리의 책임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무처리의 효율성·혁신성 등이 높아지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진정한 부·울·경 지역의 자치행정기관으로 자리하게 될 것임.
- 도시·농촌 교류 외에, ‘일반주민과 사무의 처리권한 공유시스템’ 검토를 고려할 수 있는 규약

26) 오늘날 농업인은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인도 있다.

(안)상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합 광역 환승할인·환승시스템 구축
- 둘째,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 계획수립
- 셋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업체 구성·운영
- 이들 외의 사무는 지역전문가, 지역혁신주체들의 특별연합 사무처리과정 참여를 적극 검토·실현해야 할 것임.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프랑스의 사례²⁷⁾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도화와 운영 실태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연합)체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서 코뮌협력(연합)체(intercommunalité)가 결성되고 있으며, 광역(도, 지역) 차원의 협력체는 ‘데파르트망(도)연합(ententes interdépartementale)’과 ‘레지옹연합(ententes interrégionales)’이 제도화 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실정임

(1) 광역(도, 지역) 수준의 협력(연합) 제도화

1) 데파르트망(도) 협력(연합) 규정

- 데파르트망(도) 수준의 광역협력기구는 1871년에 법인격 없는 ‘데파르트망협의회(conférences interdépartementale)’가 창설되었음. 1930년부터 ‘데파르트망연합(ententes interdépartementale)’이 도입(지방자치법 L.. 5411-1조)되었는데 이는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의 지위를 가지며 2-3개의 데파르트망이 자유롭게 협약에 의해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2) 레지옹(지역, 광역도)의 협력(연합)과 통합

* 레지옹의 설치와 개편

-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파르트망(도)보다 큰 행정구역인 레지옹(지역, 광역도)를 1959년 1월 17일 정부령에 의하여 21개 설치. 레지옹은 1964년 3월 14일의 정부령에 의해 경제사회 개발과 지역계획 영역에서의 권한 확대와 새로운 기구의 설치로 오늘날 레지옹의 기초가 됨²⁸⁾

27) 이 절의 내용은 최우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호 21(3), 2021. 9.에 따름

28) 레지옹은 평균적으로 보면 4-5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되며, 많게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8개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되며, 적게는 2개(오토-노르망디, 코르시카, 노르-파-드-칼레)로 구성됨

- 레지옹은, 신설 당시에 단순한 행정구역이었는데 1964년에 지역 단위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1972년에 지방영조물법인으로, 1982년에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된 후 권한이 점차 강화됨

<표 5> 프랑스 레지옹(지역)의 개편 과정

연도	레지옹의 개편 내용	비 고
1959	행정구역(21개) 설치	
1964	레지옹에 관선지사 임명	자문기구 레지옹행정협의회 설치
1972	레지옹 영조물법인 지위(법인격, 예산상 자치권 부여)	간접선거로 레지옹의회(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로 구성
1982	레지옹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	주민직선 레지옹의회 구성(1986년), 레지옹의회의장 의회에서 간선
2000	6개 초광역권 개편안 제시	2020년 장기발전구상 공표
2003	레지옹 헌법 명시(헌법 지위)	개헌 이전은 법률 지위
2009	레지옹 22개->15개로 축소와 권한 강화안 보고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
2015	레지옹 통합(22개->13개)과 권한 강화(2016년 1월 시행)	레지옹구역과 레지옹·데파르트망선거 및 선거일정 개정법, 신지역조직법(NOTRe법)제정

- 2008년 아탈리 보고서와 2009년 발라뒤르 보고서 등은 레지옹 수의 축소와 함께 권한 확대를 권고하였고, 2015년 1월 법률에 의하여 2016년부터 본토의 22개 레지옹은 13개로 통합되었고, 2015년 신지역조직법은 통합된 레지옹의 조직과 권한(확대)을 명시하였음
- 레지옹은 ‘지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유럽국가 지역’에 상응하는 규모로 본토 22개(평균 인구 약 300만 명)를 13개(평균 인구 약 500만 명)로 통합. 2015년 8월 ‘신지역조직법’에 따라 데파르트망 권한(도로, 중학교 관리, 도시 간 및 학교 교통, 항만 등)의 레지옹으로 이양과 레지옹계획수립(폐기물계획, 경제발전·혁신·국제화계획, 관광발전계획 등) 권한이 강화. 레지옹은 기업 지원, 직업교육 및 고용정책, 교통 지원(도로, 철도, 항공, 항만), 중고등학교 관리, 대규모 기반시설 및 정비 등에 독자적 권한을 가짐
- 이에 반해 데파르트망(도)의 역할은 지역 및 사회연대에 국한될 정도로 권한이 축소되며, 2021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있어 보류됨

<표 6> 2016년 1월부터 통합된 레지옹(본토)과 인구 (단위: 만 명)

통합 이전 레지옹	인구('15)	통합 후 레지옹('16.9.29발표)	인구('17)
Auvergne	140	Auvergne-Rhône-Alpes	782
Rhône-Alpes	656		
Nord-Pas-de-Calais	413	Hauts-de-France	601
Picardie	197		
Poitou-Charentes	184	Nouvelle Aquitaine	588
Limousin	76		
Aquitaine	341		
Midi-Pyrénées	304	Occitanie	573
Languedoc-Roussillon	279		
Champagne-Ardenne	138	Grand-Est	555
Lorraine	240		
Alsace	190		
Haute Normandie	189	Normandie	334
Basse Normandie	152		
Bourgogne	169	Bourgogne-Franche-Comté	282
Franche-Comté	121		
비통합 레지옹: Ile-de-France(1,202), Provence-Alpes Côte d'Azur(498), Pays de la Loire(369), Bretagne(328), Centre-Val de Loire(258), Corse(324)			

자료 : http://www.insee.fr/fr/ppp/bases-de-donnees/recensement/populations-legales/pages2015/pdf/joe_20151231-0303_0081.pdf;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17, 2017.

* 지방자치법전의 레지옹연합 관련 주요 규정

- 레지옹의 광역협력기구는 유럽연합 출범 후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계획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레지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2년 2월 6일 지방행정기본법에 의해 ‘레지옹연합(ententes interrégionales)’이 도입됨(Mangin, 2002: 12-13). 지방자치법전에 규정된 레지옹연합에 대한 주요 내용, 즉 레지옹연합의 설치, 레지옹연합의회와 상임위원회 구성, 레지옹연합의 권한(사무), 레지옹연합의 의결 수정, 레지옹연합의 탈퇴와 해산, 레지옹연합의 예산 수입은 아래와 같음
- 레지옹연합의 설치

- 레지옹연합은 2개 이상 여러 개의 인접 레지옹의회로 구성되는 영조물법인이며, 관계 레지옹의 회의 일치한 의결에 의하여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사원(Conseil d'Etat)의 정부령에 따라 설치됨(지방자치법전 L. 5621-1조)

○ 레지옹연합의회와 상임위원회 구성

- 레지옹연합은 ‘최고평균법에 의한 비례대표제’²⁹⁾에 의해 선출된 레지옹의회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의회가 의결기관임. 레지옹연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및 회계를 제외한 권한의 일부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전 L. 5621-2조)
- 레지옹연합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이며, 상임위원회를 주재함(지방자치법전 L. 5621-3조)

○ 레지옹연합의 권한(사무)

- 레지옹연합은 회원 레지옹 대신하여 의결한 예시된 권한(사무)을 수행하고, 레지옹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보장함. 레지옹연합은 그에게 이양된 권한 범위 내에서 연합을 구성하는 회원 레지옹을 대신하여 국가와 계획계약(한국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해당)을 체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전 L. 5621-4조)

○ 레지옹연합의 의결 수정

- 레지옹연합의 의결에 대한 수정은 회원 레지옹들의 레지옹의회 합치된 의결 후 레지옹연합의 제안으로 국사원의 정부령에 의하여 판결됨

○ 레지옹연합의 탈퇴와 해산

- 회원 레지옹은 레지옹연합의회의 만장일치 의결 후 탈퇴할 수 있음. 레지옹연합은 국사원의 정부령에 의하여 정한 조건하에 회원 레지옹의 레지옹의회 요청에 따라 해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전 L. 5621-6조)

○ 레지옹연합의 예산 수입

- 레지옹연합의 예산 수입은 다음과 같음: 회원 레지옹의 의결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예산 분담금,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부담금, 연합의 재산수입, 보조금, 차입금, 부가가치세보상기금(지방자치법전 L. 5622-1조)

29)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 배분 후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의해 획득한 의석수에 1을 더한 숫자로 그 명부가 획득한 득표수를 나눈 수와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명부에 1개의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임

○ 레지옹간 협약의 활용 현황

- 레지옹 차원의 협력은 주로 레지옹간 협약 방식이 활용되고, 1992년에 도입된 레지옹연합은 실제로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며,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레지옹통합이 단행되어 2016년 시행됨
- 1982년의 지방분권 개혁과 더불어 1982년 7월의 ‘계획의 개혁법’ 제정에 의해 도입된 계획계약제도가 1984년부터 실시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함께 레지옹간 협약이 활성화됨
- 특히 제5차 계획계약(2007-2013년)부터 강과 산악지대와 같은 레지옹을 초월한 사업계획을 위한 레지옹간 부문이 추가되면서 레지옹간 협약이 보편화되고 있음(표 7 참조)
- 본토의 대표적인 산악지대와 강 유역은 레지옹간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체결함³⁰⁾
- 알프스(Alpes), 쥐라(Jura),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 피레네(Pyrenées), 보주(Vosges)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인데 이러한 산악지대의 경우 레지옹간 협약(CIM)을 토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contrat de projets interrégional Etat-région)이 체결되고 있음
- 본토의 대표적인 5대 강(르와르, 뫼즈, 론, 센, 가론)의 경우 각 강 유역의 계획을 토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 2007-2013년의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된 산악지대 또는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에는 국가(해당 지역의 중심이 되는 레지옹관선지사가 국가 대표로서 조정 역할), 관련 지방자치단체(레지옹, 데파르트망), 공기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산악지대 레지옹간 협약에 참여한 레지옹 수를 보면 알프가 2개, 쥐라 2개, 마시프 상트랄이 6개, 피레네가 3개, 보주가 3개를 나타내고 있음.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에 참여한 레지옹은 루아르가 9개, 뫼즈가 2개, 론이 5개, 센이 6개, 가론이 4개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산악지대 및 강 유역 레지옹간 협약(2007-2013년) 현황

구 분	레지옹간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			
	국가	레지옹 (지역: 지방자치단체)	데파르트망 (도: 지방자치단체)	기타

30) (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oire_44/contrats_etat_regions_173/contrats_2007_2013_1488.html)

산악지대	알프 레지옹간 협약	PACA레지옹지사	2개(론-알프, PACA)		RMC수자원공사, ADEME
	쥐라 레지옹간 협약	프랑슈-콩테 레지옹지사	2개(프랑슈-콩테, 론-알프)	4개(앵, 두, 쥐라, 테리투아르 드 벨포르)	
	마시프 샹트랄 레지옹간 협약	오베르뉴 레지옹지사	6개(오베르뉴, 리무쟁, 부르그뉴, 랑그독-루시옹, 론-알프, 미다-피레네)		ADEME, 아두-가론수자원공사, RMC수자원공사, 루아르-브르타뉴수자원공사
	피레네 레지옹간 협약	미다-피레네 레지옹지사	3개(아키텐, 미다-피레네, 랑그독-루시옹)		
	보주 레지옹간 협약	로렌 레지옹지사	3개(알자스, 프랑슈-콩테, 로렌)	7개(오-랭, 오트-손, 모젤, 뫼르테모젤, 바-랭, 테리투아르 드 벨포르, 보주)	
강유역	루아르 계획	샹트르 레지옹지사	9개(오베르뉴, 리무쟁, 부르그뉴, 랑그독-루시옹, 론-알프, 샹트르, 페이 드 라 루아르, 푸아투-샤랑트, 바스-노르망디)		루아르-브르타뉴수자원공사, 루아르 영조물법인
	뫼즈 계획	로렌 레지옹지사	2개(샹파뉴-아르덴, 로렌)	5개(아르덴, 뫼즈, 보주)	랭-뫼즈 수자원공사
	론 계획	론-알프스 레지옹지사	5개(부르그뉴, PACA, 론-알프, 프랑슈-콩테, 랑그독-루시옹)		ADEME, RMC수자원공사, 프랑스향로국(VNF), 유역위원회
	센 계획	일-드-프랑스 레지옹지사	6개(오트-노르망디, 바스-노르망디, 일-드-프랑스, 피카르디, 샹파뉴-아르덴, 부르그뉴)		센-노르망디공사

가론-로트 계곡 계획	미디-피레네 레지옹 지사	4개(아키텐, 오베르뉴, 랑그독-루시옹, 미디-피레네)	5개(아베롱, 로트, 캉탈, 로제르, 로테 가론)	로트유역 데파르트망간협의회, 아두-가론수자원공사,
-------------	---------------	--------------------------------	-----------------------------	-----------------------------

자료: 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oire_44/contratsetat_regions_173/contrats2007_2013_1488.html의 산악지대 및 강 유역의 협약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 * CIM: 산악지대 지역간 협약(conventions interrégionales de massif)
- * PACA: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 * RMC수자원공사: agence de l'eau Rhône-Méditerranée-Corse
- * ADME: 환경에너지관리공사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itrise de l'énergie)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유형과 운영 실태

-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서 코뮌협력(연합)체(intercommunalité)가 결성됨. 코뮌은 2020년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하기에 어렵고, 공동으로 함으로써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방자치법전(L. 5111-1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협약 체결 및 권한(사무) 이전(위임)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협력체인 코뮌간협력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을 구성할 수 있음. EPCI는 법인격, 의회 및 의장(대표)을 가짐
- 코뮌간 협력의 유형은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조합형과 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합형

- 조합형은 1890년에 설치되어 코뮌의 자치권 존중과 기술적 배분 우위 인정되며, 예산 부담금((contributions budgétaires)이 주된 재원이고, 의무적 권한이 없으며, 대상지역은 코뮌 전체임. 조합형은 2020년 1월 현재 단일사무조합(SIVU) 5,212개, 복합사무조합(SIVOM) 1,291개, 혼합조합 2,803개, 대도시조합(Pôle métropolitain) 25개, 농촌지역균형조합(Pôle d'équilibre territorialet rural) 123개, 지역공공조합(Etablissement public territorial) 11개로 총 9,465개.
- 조합형은 가장 많았던 1999년에 18,504개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현재의 수는

1999년의 51%임. 코뮌조합은 재정적 자치를 갖고, 독자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독자예산의 재원은 코뮌조합에 속한 여러 코뮌의 예산분담금(contributions budgétaires)에 의하며, 그 기준은 코뮌조합이 각 코뮌에 제공할 서비스, 주민의 수, 도로 길이, 재정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표 8> 지방자치단체 (코뮌)간 협력체의 변화

유형	구분	1972	1992	1995	1999	2000	2012	2015	2018	2020
연 합 형	메트로폴(Métropole)*						1	11	21	21
	대도시공동체(CU)	9	9	9	12	12	15	9	11	14
	중도시공동체(CA)					50	202	226	222	222
	코뮌공동체(CC)**			554	1,347	1,533	2,358	1,884	1,009	999
	신도시연합체(SAN)		9	9	9	9	5	3	-	-
	디스트릭트(Districts)**	9	214	324	305	241	-	-	-	-
	도시공동체(CV)**			4	5	-	-	-		
	총 고유세원*** 협력체 수			1,102	1,678	1,845	2,581	2,133	1,263	1,254
조 합 형	단일사무조합(SIVU)	9,289	14,596	14,490	14,885	nd****	10,181	8,392	6,714	5,212
	복합사무조합(SIVOM)	1,243	2,478	2,298	2,165	nd	1,344	1,185	1,010	1,291
	혼합조합			1,107	1,454	nd	3,256	3,025	2,719	2,803
	대도시조합(Pôle métropolitain)						1	9	14	25
	농촌지역균형조합(Pôle d'équilibre territorial et rural)							55	112	123
	지역공공조합(Etablissement public territorial)								11	11
	총 조합 수	10,532	17,074	17,895	18,504	nd	16,336	12,666	10,585	9,465

주: *리옹메트로폴 제외; **99.7.12법에 따라 폐지 후 2002년에 대도시공동체(CU), 중도시공동체(CA), 농촌공동체(CC)로 변경; ***고유세원은 직접지방세(주거세, 건축세, 토지세); ****자료 없음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 Les collectivités locales 2021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연합형

- 연합형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 권한이 다양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고유한 지방세(주거세, 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 사업세와 같은 지방직접세가 주요 세원인데 2009년에 사업세는 지역경제세로 개편)와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협력체에 따라 다름
- 연합형은 대도시연합(métropole: 메트로폴)을 비롯하여 광역코뮌구(districts: 디스트릭트), 대도시공동체(CU), 중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도시공동체(CV), 코뮌(농촌)공동체(CC), 신도시연합체(SAN) 등이 설치되었는데³¹⁾ 1999년 7월 12일의 '코뮌간 협력의 강

31) 대도시와 중도시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인구 기준도 기관이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내무부와 중도시연합(FMVM)은 중도시를 2-10만 명 규모로 보며, 국토균형청(DATAR)은 1999년에 설정한 2-20만 명의 도시권(aire urbaine)을 중도시로, 20만 명 이상의 도시권을 대도시로 봄

화 및 단순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코뮌구와 도시공동체(CV)는 폐지

- 연합형은 2020년 1월 현재 대도시연합 21개,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 14개, 중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222개, 농촌(코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CC) 997개로 총 1,254개임. 연합형은 가장 많았던 2012년에 2,581개에 달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으로 줄어 2020년 현재의 수는 2012년의 약 절반(49%)임
- 2004년 대도시공동체(CU)는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지역, 중도시공동체(CA)는 5만 이상의 중간 규모 도시, 코뮌(농촌)공동체(CC)는 농촌과 소도시 관리를 위하여 고안됨. 연합형은 종전의 조합(단일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혼합조합)과는 달리 고유세원을 갖고 자체 재정을 통하여 보다 광범한 기능을 수행. 코뮌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도시공동체(CA)나 대도시공동체(CU)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정이 지원
- 고유세원을 갖는 모든 코뮌간 협력체의 대표는 2014년 코뮌선거부터 코뮌선거에서 선출됨. 이에 반해 고유세원이 없는 코뮌간 협력체(조합)의 코뮌대표는 2014년 이전의 모든 코뮌간 협력체처럼 종전과 같이 관련 각 코뮌의회에서 선출

○ 광역코뮌구(districts)

- 광역코뮌구는 조합 방식보다 통합된 형태이고, 의무적 권한과 임의적 권한을 행함. 이는 복합사무조합(SIVOM)과 매우 비슷하며, 주택이나 소방·구급 등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적 권한이 부여되며, 스스로 일정한 지방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점에서 복합사무조합과 다름
- 광역코뮌구는 해당 코뮌 임의로 사무를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 도로, 가정폐기물, 학교교통, 가스, 관광,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용. 광역코뮌구는 1959년 1월 5일에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구(district urbain)의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며, 1970년 12월 31일에 농촌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광역코뮌구는 1999년 현재 305개가 구성되었는데 1999년 7월 법률에 의해 다른 협력체로 전환되어 폐지

○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

- 대도시공동체(CU)는 광역코뮌구(디스트릭트) 방식에 의하여 도시권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여 일정 인구 이상인 도시지역 코뮌을 대상으로 설치. 대도시공동체(CU)는 1966년 12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신설 후 수 차례 개정
- 1999년 7월 12일 법률은 대도시공동체의 행정 및 재정체제를 새로이 정의하고, 인구 기준을 수정함. 즉 1999년 7월 12일 법률 이후에 신설된 도시공동체는 주민 수 50만 명 이상으로 도시

개발 및 지역계획의 공동사업에 집중되며, 협력 기간의 제한이 없음. 1999년 7월 법률 이전에 설치된 도시공동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인구 기준은 2만 명(그 이전은 5만 명)임

- 대도시공동체는 코뮌의 다른 협력체와 비교하면 의무적 권한의 범위가 도시계획사업, 소방, 도로관리, 도시교통, 상하수도, 가정폐기물, 소방구급, 묘지 등 광범함. 대도시공동체는 공동체구역의 인구나 공동체 구성 코뮌 수에 따라 50-90명의 공동체의회(conseil de communauté) 구성. 공동체의회 구성 인원은 각 코뮌의회에 의해 선출(2014년 코뮌선거 이전까지)되는 대표이지만, 공동체의회에 대표를 보내기에 지나치게 소규모인 코뮌은 적절한 선거구로 연합하여 공동 대표 선출
- 대도시공동체는 인구 규모, 지역적 제한, 인접 코뮌 포함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코뮌들은 국가대표(관선지사)에게 설치를 요구함. 국가대표는 도의 의견을 구한 후에 설치 지역의 경계를 확정
- 최종설치안은 대도시공동체에 참여할 여러 코뮌의 다수결 원칙에 의함. 즉 대도시공동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코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또는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코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함. 단 인구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코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 대도시공동체는 다른 코뮌의 참여로 지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대도시공동체의 구성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코뮌의 요구에 의해 해체될 수 있음. 즉 인구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코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와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코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
- 대도시공동체는 코뮌의 대표자와 공동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도시공동체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됨. 대표자는 코뮌의회에서(2014년 이전까지) 선출되며, 적당한 대표자가 없으면 주민들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표자로 선발할 수 있음
- 대도시공동체에 참여하는 코뮌의 수와 인구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가 결정되고, 코뮌간의 대표자 분배는 코뮌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구 4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코뮌의 반대 의사가 없어야 함. 국가대표는 공동체위원회의 대표자 배분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며, 배분에 대한 조건의 준수를 검토
- 대도시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다른 협력체와 같이 코뮌의회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공동체위원회는 의결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수행하고,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부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도시공동체는 코뮌의 장이 제안한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토

- 공동체의 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는 1명 의장과 부의장(4명-20명)으로 구성되는 사무처 설치. 의장은 공동체 대표로서 위원회 의결 사항을 집행

○ 낭트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de Nantes)의 집행기구는 <표 9>와 같음

- 공동체 의장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공동체의회(conseil de la communauté)는 시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6년 임기의 97명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이며, 매년 5 - 6회 회의가 개최
- 각 코뮌은 인구에 비례하는 몫의 의원 수(전체의 50% 한도)를 가짐. 공동체 집행위원회(bureau)는 제2의사결정기구로 의장(대도시공동체 의장), 대도시공동체의회에서 선출되는 부의장 20명(대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24개 코뮌 시장 중에서 11명), 공동체의회에서 지명되는 25명 대표(주민수 15,000명 이상인 코뮌) 등 46명으로 구성
- 대도시공동체는 교통, 연대, 도로, 환경, 경제발전, 지역정비 및 도시 대규모사업, 총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는 공동체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며, 의회 각 의원은 2개 분과위원회에 참여 가능
- 대도시공동체는 정비 및 도시계획, 교통, 공공녹지 및 도로, 환경, 물, 경제발전 및 훈련, 사회개발, 국제적 도시발전, 에너지 및 난방 생산과 배분 관리 등과 같은 9개 영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며, 대중교통의 경우 낭트도시권대중교통혼합경제회사(SEMITAN)에게 공공서비스를 위임하고 있음

<표 9> 낭트 대도시공동체 (Nantes métropole)의 집행기구 현황

설치연도	2001년
회원	24개 코뮌, 총 주민수 60만 명
집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공동체의회: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원 97명으로 구성되며, 의원 임기 6년 - 대도시공동체 집행위원회: 의장(대도시공동체의장), 부의장: 대도시공동체의회에서 선출되는 20명(대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24개 코뮌 시장 중에서 11명), 공동체의회에서 지명되는 25명 대표(주민수 15,000명 이상인 코뮌) 등 46명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교통, 연대, 도로, 환경, 경제발전, 지역정비 및 도시 대규모사업, 총무 등 8개를 두며, 대도시공동체에 자문의견 제시, 각 의원은 2개 분과위원회에 참여
사무	-정비 및 도시계획, 교통, 공공녹지 및 도로, 환경, 물, 경제발전 및 훈련, 사회개발, 국제적 도시발전, 에너지 및 난방 생산과 배분 관리 등 9개 영역

자료 출처: <http://www.nantesmetropol.fr>

○ 낭트대도시공동체의 경상수입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현재 총 6.51억 유로이고,

이 중에서 지방세가 43%(2.78억 유로), 교통세 20%(1.32억 유로), 각종 교부금 22%(1.43억 유로), 사업세 개혁에 따른 보상교부금 7%(0.49억 유로), 기타 경상수입 8%(0.50억)

- 교통세는 낭트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투자를 위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1976년 3월부터 도입됨. 교통세는 낭트시를 비롯한 24개 코뮌이 소재한 회사에서 9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월급의 일정률(1976년 당시에 1%에서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2011년부터 2%)을 낭트 대도시공동체에 납부³²⁾

<표 10> 낭트대도시공동체의 경상수입 현황(2012년)

구 분	금액(유로)	비 고(단위: 유로)
지방세	2.78억(43%)	가정쓰레기수거세 0.73억, 지역경제세 0.70억, 주거세 0.66억, 건축물토지세 0.05억
교통세	1.32억(20%)	
교부금(경상교부금)	1.43억(22%)	
사업세 개혁에 따른 경상교부금	0.49억(7%)	
기타 경상수입	0.50억(8%)	
합 계	6.51억(100%)	

자료: <http://www.nantesmetropole.fr/la-communaute-urbaine/institution/les-recettes-51366.kjsp>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중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 중도시공동체(CA)는 주민수 1만 5천명 이상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중심 코뮌 주변에 계속 연계되어 적어도 전체 주민수가 5만 명을 이루어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데파르트망(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중도시공동체의 기관은 다른 코뮌협력체처럼 의장, 집행위원회(bureau), 의회로 구성됨. 의회는 인구에 의하여 배분하며, 각 코뮌은 적어도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며 어떤 코뮌도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중도시공동체의 권한은 4개의 의무적 권한(경제개발, 공간계획, 주거의 사회적 균형, 도시정책)과 5가지 권한, 즉 도로 및 주차장, 하수처리, 상수도, 환경(보호 및 평가, 대기 및 소음방지, 가정쓰레기), 체육 및 문화시설 중에서 적어도 3가지 권한을 행함. 재원은 단일사업세(TPU), 혼합재원(직접지방세, 보조금 보조금, 기부 및 증여금, 세외수입, 교부금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32) <http://www.nantesmetropole.fr/la-communaute-urbaine/institution/les-recettes-51366.kjsp>

○ 코뮌(농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 CC)

- 코뮌공동체는 1992년 설치 당시에 농촌지역의 코뮌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으나 1993년 1월 29일 법률에 의하여 그 제한이 폐지됨. 처음에는 의무적 권한(지역정비, 환경보호, 주택, 도로, 문화, 체육, 교육시설 중에서 적어도 2개 분야)도 규정하였으나 이를 완화함. 코뮌공동체는 1992년 2월 6일의 법률에 의하여 주로 농촌지역의 정비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코뮌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위하여 ‘코뮌간 협력을 위한 데파르트망계획(shéma départemental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을 수립하고 조정함. 코뮌공동체는 지역계획 및 경제발전, 환경보전, 주택, 도로, 교육문화 중에서 적어도 1개를 의무적으로 담당하고, 해당 코뮌의 4개 직접 지방세(건축세, 토지세, 주거세, 사업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도시공동체(communautés de villes: CV)

- 도시공동체(CV)는 1992년 2월 6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대도시공동체(CU)의 새로운 형태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권이 대상지역임. 이는 각 시가 도시권의 범위를 자유로이 정하여 균형된 도시권 개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무적 권한은 지역정비, 환경보호, 주택, 도로,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 이러한 도시공동체는 1992년에 도입된 후 5개만 구성되었고, 1999년 7월 법률에 의해 다른 협력체로 전환하여 폐지됨

○ 신도시연합체(SAN)

- 신도시연합체는 수도권 및 기타 도시권의 복수 코뮌에 걸친 지역(신도시)에서 고용창출, 주택, 건설, 설비투자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0년에 설치되었으며, 명칭은 조합(연합체)이지만 고유한 세원을 갖고 있어 연합형에 속함

2. 대도시연합(메트로폴)의 설립과 제도

(1) 대도시연합의 설립 배경과 추세

- 최근에 글로벌 차원에서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당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개혁법(‘10.12.16)’과 ‘대도시연합(métropole) 승인 및 지역공공사업 현대화법(‘14.1.27)’이 제정되어 새로운 형태의 ‘메트로폴 신설

- 메트로폴은 기존 지역조직이 통합적 공공정책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도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유럽이나 국제적 도시권 간 경쟁이 지속되어 기존 대도시공동체(CU)에 비하여 보다 적합한 거버넌스가 요청됨에 따라 신설
- 2014년의 ‘메트로폴 승인 및 지역공공사업 현대화법’은 2010년 12월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서 정한 메트로폴 인정기준(고용권 인구)을 5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수정 후 2017년 2월 28일의 ‘파리 지위 및 대도시정비법’에서 기준을 25만 명 이상과 40만 명 이상의 고용권 중심지, 레지옹(지역)청 소재지까지 범위 확대함
- 메트로폴은 코뮌(도시)간 협력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도시연합 형태는 총 21개(파리, 마르세유, 니스, 릴, 툴루즈, 보로도, 낭트, 스트라스부르, 렌느, 루앙, 그르노블, 브레스트, 클레르몽, 디종, 메츠, 몽펠리에, 낭시, 생-에티엔느, 툴롱, 투르, 오를레앙)에 달함. 메트로폴은 ‘12년 1개, ‘15년 11개, ‘17년 14개, ‘18년 21개(지방자치단체인 리옹 메트로폴 제외)로 증가
- 가장 큰 3개 메트로폴, 즉 그랑파리(Grand Paris: 712만 명),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Aix-Marseille-Provence: 191만 명) 및 리옹(Lyon: 137만 명)은 다른 메트로폴과 달리 특별 지위를 가짐
 - 2016년 1월에 신설된 그랑파리 메트로폴은 파리와 3개 도의 131개 시로 구성
 -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은 3개 도의 6개 도시 간 협력체, 즉 1개 대도시공동체(CU), 4개 중도시공동체(CA) 및 1개 신도시연합을 통합한 92개 시(코뮌)로 구성
 - 2015년 1월에 설치된 리옹 메트로폴(métropole de Lyon)은 리옹대도시공동체(CU)에서 전환되었는데 메트로폴과 도(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권한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가 아님



<그림 3> 대도시연합(메트로폴)의 지리적 분포

※ 2020년 1월 현재 프랑스 전국에 메트로폴은 공통지위 21개(노란색), 특별한 지위 2개(주황색), 지방자치단체 지위 1개(자주색)

- 리옹 메트로폴(Métropole de Lyon, 흔히 Grand Lyon으로 표기)은 2015년부터 리옹시를 비롯한 59개 코뮌(시)으로 구성된 대도시공동체와 론(Rhône) 데파르트망(도)의 구역을 합병하여 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우리나라 광역시와 유사하나 한국 광역시는 시를 두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신규 론(Rhône) 도는 리옹메트로폴의 59개 코뮌을 제외한 기타 228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그 지위와 권한을 계속 유지함. 메트로폴의회(Conseil métropolitain)는 165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잠정적으로 '15년-'20년 동안에 '14년 3월에 선출된 대도시공동체의원이 직무 수행

(2) 대도시연합의 관련 법령, 사무, 기관

1) 관련 법령과 구성

- 대도시연합은 2010년 12월 16일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loi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서 처음으로 설치 규정 후 2014년 1월 27일의 '지방공공행위 현대화 및 대도시연합 승인법(loi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étropoles)'과 2017년 2월 28일의 '파리 지위 및 대도시정비법(loi relative au statut de Paris et à l'aménagement métropolitain)', 그리고 정부의 시행령들에 의해 설립이 구체화됨

- 2010년 12월 16일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
 - 코뮌 간 협력의 강화 및 단순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대도시연합(métropole) 설치 규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권의 경우 자율적으로 대도시연합 구성
 - 지위: 코뮌간협력영조물법인(EPCI)으로 고유세원(자체 세입) 보유
 - 권한: 교통(통학)업무, 데파르트망(도) 도로 및 산업단지 운영, 해외홍보 및 경제발전 등 도 권한의 일부
 - 이 법률을 적용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최초의 대도시연합 설립(니스코트다쥐르): 기존의 니스 대도시공동체에 인근 코뮌공동체 3개 통합으로 구성

- 2014년 1월 27일의 '지방공공행위 현대화 및 대도시연합 승인법'
 - 인구 40만 이상 코뮌협력체 대도시연합 설립 의무화: 2015년 1월 1일의 정부령에 따라 2015-2016년 대도시연합 설치(10개)
 - 대도시연합의회 구성 방식: 코뮌의회 의원선거 정당명부 중 대도시연합의회의원 사전지명하여 지방선거 실시. 고유세원을 갖는 모든 코뮌간 협력체의 대표는 2014년 코뮌선거부터 코뮌선거에서 선출됨
 - 2015년 1월 1일에 11개 대도시연합 설립: 10개 대도시연합(보르도, 브레스트, 그르노블-알프, 릴, 몽펠리에, 낭트, 렌느, 루앙-노르망디, 스트라스부르, 툴루즈)은 코뮌협력영조물법인(EPCI) 지위, 리옹 대도시연합은 론 데파르트망(도) 대체와 더불어 전부 권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위 보유
 - 2016년 1월 1일에 2개 특별지위 대도시연합 설립(그랑파리,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 2017년 2월 28일의 '파리 지위 및 대도시정비법'

- 2017년 2월 28일의 법률에 의한 대도시연합(당연 설치), 레지옹청 소재한 인구 25만 이상 코뮌 협력체(설치 가능)
- 파리, 리옹, 마르세유 3대 대도시연합 특별 지위 부여 및 권한배분 규정
- 2017년 2월 28일 법률의 적용 인구 40만 미만이나 레지옹청 중심도시 3개 대도시연합 설립: 투르-발드루아르(2017.3.20.), 오를레앙(2017.5.1.), 디종(2017.4.28.)

<표 11> 대도시연합(Métropole)의 구성과 인구

명 칭	소재지	신설연도	코뮌수	인구 (2020년)
Européenne de Lille	Lille	2015	85	1,185,377
Bordeaux	Bordeaux	2015	28	811,377
Toulouse	Toulouse	2015	37	793,243
Nantes	Nantes	2015	24	666,162
Nice Côte d'Azur	Nice	2012	49	545,730
Rouen Normandie	Rouen	2015	71	499,830
Strasbourg	Strasbourg	2015	28	505,916
Grenoble-Alpes	Grenoble	2015	49	451,107
MontpellierMéditerranée	Montpellier	2015	31	487,519
Rennes	Rennes	2015	43	461,166
Toulon Provence Méditerranée	Toulon	2018	12	444,829
Saint-Étienne	Saint-Étienne	2018	53	409,771
Tours Val de Loire	Tours	2017	22	300,045
Clermont Auvergne	Clermont-Ferrand	2018	21	300,131
Orléans	Orléans	2017	22	292,874
Nancy	Nancy	2016	20	261,638
Dijon	Dijon	2017	24	259,087
Metz	Metz	2018	44	225,374
Brest	Brest	2015	8	214,290
Grand Paris *	Paris	2016	131	7,125,433
Aix-Marseille-Provence *	Marseille	2016	92	1,911,657
합계			676	18,154,555
(Lyon *)	Lyon	2016	59	1,370,678

주 : *는 특수지위를 갖는 경우임. 리옹은 대도시연합과 도의회(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권한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도시 간 협력체가 아님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 2021.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21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사무

- 대도시연합은 “결속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 지역의 정비(계획)와 경제·생태·교육·문화·사회의 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유도하도록 연대 공간 내에서 여러 인접 코뮌들을 결집하는 고유세원을 갖는 코뮌협력영조물법인(EPCI)임. 대도시연합은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정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대도시의 경제 기능, 교통 네트워크 및 대학·연구·혁신 자원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지방자치법전 L.5217-1조)
- 대도시연합은 코뮌(경제발전, 지방주거정책, 상수도·하수도·묘지·도축장 등 관리)과 데파르트망(통학 교통, 도로 등) 및 레지옹을 대신하여 그 구역 내에서 일정 수의 권한(사무)을 수행함. 국가는 주거에 관한 사무를 대도시연합에 위임할 수도 있음. 그리고 대도시연합은 데파르트망이나 레지옹과 협약에 의해 사회보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제발전에 관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음.³³⁾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전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기본 원칙 : 사무 이양과 세수입
 - 대도시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이양받은 사무만을 담당하고, 이양된 사무의 내용은 법령으로 명시하며, 분장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세원 보유
 - 대도시연합의 이양된 권한 내에서 결정한 사안의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합법적인 번복이 허용되지 않음
- 코뮌(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양 사무
 - 가.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및 정비
 - 산업단지, 상업단지, 장인수공업단지, 관광단지, 항구 및 공항단지의 신설, 정비 및 관리
 -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공동참여, 기술이전활성화기금 공동출자 등 지역 경제개발
 - 대도시연합 전체와 관련된 문화, 사회복지, 교육, 체육 분야 시설의 건설, 정비, 유지 및 운영
 - 관광사업소 설립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
 -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레지옹의 고등교육과 연구 및 혁신계획 고려하여 정

33) <https://www.vie-publique.fr/fiches/20129-quest-ce-quune-metropole>

함)

나. 대도시연합 공간정비

-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SCOT) 및 부문계획, 코뮌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 PLU), 대도시연합 정비사업의 결정, 개발 및 시행, 토지보호지구 조성, 자연 및 경관 유산 가치 제고 활동
- 도시교통 조직, 도로의 건설 및 유지, 신호등, 주차 공간,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시설, 도시이동 계획
- 도시이동수단에 수반되는 공공공간의 설치, 정비, 관리
- 대도시연합 지역에 위치한 역의 정비 및 운영 참여
- 통신망과 기반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

다. 주거정책

- 코뮌주거계획
- 사회복지주택 및 취약층 주거를 위한 활동과 재정지원
- 노후 주거단지의 개량 및 정비
- 이민자 수용시설의 정비, 유지 및 관리

라. 도시정책

- 도시개발 및 경제사회통합의 계약 조치
- 범죄예방 및 권리 획득에 대한 코뮌 조치

마. 공익 서비스 분야

- 상수도, 하수도
- 대도시연합 차원의 공동묘지 및 화장장 설치 운영
- 도축장 및 국영시장

- 화재 및 구조 서비스

바.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

- 가정 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재활용
- 대기오염 방지
- 에너지 전환 기여
- 기후-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및 채택
- 전기 및 도시가스 배급의 위탁경영 계약
- 도시 난방 및 냉방망의 설치, 정비, 유지 및 관리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습지 및 홍수 지역의 관리
- 해변 백사장 관리

○ 데파르트망(도) 이양 사무

- 대도시연합은 도 또는 대도시연합의 요청에 따라 도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도 관할구역 내에서 도 대신에 아래와 같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함
- 주거를 위한 연대기금의 지원 수여
- 도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취약한 청년층 지원
- 소외 가정 및 청년 대상 특별 예방 활동
- 도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
- 산업지구 개발과 해외 마케팅

○ 레지옹(광역도, 지역)의 이양 사무

레지옹은 다음의 사무 전체 또는 일부를 대도시연합에 이양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설립,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관련 사무
- 경제발전 관련 사무

○ 국가의 사무

- 국가는 대도시연합이 요청할 때 집행되어야 하는 코뮌주거프로그램의 경우 임대주택 및 영세 민복지주택시설 및 입주대상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약을 통해 대도시연합에 위임할 수 있음
- 국가는 대규모 시설 및 하부구조의 정비, 유지 및 관리를 대도시연합에 위임할 수 있음

○ 기타 사무

- 대도시연합은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공법인(영조물법인)의 권한에 속하는 정비, 경제발전 및 혁신, 교통 및 환경,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계획 및 계획 문서의 입안과 수정에 참여하며, 그 목록은 국참사원(coseil d'Etat)의 정부령(décret)에 의하여 정해짐

3) 기관구성

(1) 대도시연합의회

- 대도시연합은 회원 지방자치단체(코뮌)의 대표로 의회가 구성됨. 대도시연합의회는 대도시연합의 의결기관이며, 대도시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을 의결함
- 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L5211-6-1)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의석은 인구 비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각 코뮌은 적어도 하나의 의석을 가짐
- 예를 들면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Aix-Marseille-Provence) 대도시연합은 제2위 규모(인구 191만 명)로 마르세유를 비롯하여 92개의 코뮌으로 구성되며, 대도시연합의원은 시의원과 구의원 중에서 시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의원 수는 240명에 달함. 니스 코트 다쥐르 대도시연합(NiceCôte d'Azur)은 46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시의회에서 선출되고, 의원 수는 128명임

(2) 집행기관

- 의장은 집행기관인 대도시연합의회에서 선출됨. 대도시연합의회는 부의장을 선출하며, 그 수는 대도시연합에 따라 다름
 - 예를 들면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의 경우 부의장은 20명이며, 여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부회장이인 구역의회(conseils de territoire: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대도시연합은 6개 구역으로 나뉨) 의장이 추가됨.
 - 니스 코트 다쥐르 대도시연합(Nice Côte d'Azur)은 집행기관(대도시연합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 15명으로 구성, 부의장 15명은 각기 소관업무 담당)
- 사무국은 회장, 부회장 및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가장 중요한 권한, 특히 예산의결, 행정회계의결, 공공서비스 위임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연합의회로부터 특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음

IV. 정책적 시사점

1. 지속적인 지방분권 개혁과 추진

- 프랑스는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확대, 권한 재배분 및 이양 등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개혁 관련 법령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및 후속 법령정비 등을 정권 변화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부는 2020년 중반에 국회에 제출될 새로운 지방분권법안을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명 3D, 즉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 차별화(différenciation), 지방이전(déconcentration) 법안을 마련하였음. 이 법안은 2021년 7월부터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중복)과 세금 부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목됨
-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 이후에 지방분권화에 따른 역기능(갈등, 중복행정, 규모 불경제 등)을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측면의 미비점 개선(협력방식의 개편, 절차 간소화, 재정 협력, 주민참여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의 수평적 유연한 관계 구축, 실질적 민관협력의 제도화, 협력수단의 연계화 및 체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2.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 유형의 제도화 및 활용

-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협력 유형(조합형, 연합형, 계약형)을 제도화하고, 활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 프랑스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연합(시, 도, 지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영조물법인(특수공법인)’으로 규정함.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칭하지 않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점(특히 지방분권, 자율성, 재정 등과 관련하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는 대도시연합을 신설할 때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통합적 공공정책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도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인구 규모, 고용권, 광역도청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 조합형은 일부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혼합조합 등을 두고, 연합형은 농촌, 중도시, 대도시, 신도시 등의 성격에 맞는 고유세원을 갖는 협력기구를 구성함. 계약형은 강제력이 적고 유연하며, 코뮌을 비롯하여 도, 지역, 국가, 공기업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
- 협력방식은 대상지역(농촌, 도시, 인구규모 등), 의무적 권한의 존재 여부 및 업무영역(주택, 소방, 도시계획, 도시교통, 문화체육, 교육시설, 환경보호, 지역정비 등), 자원(분담금, 고유세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최근에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도시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도시연합을 도입하여 활용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신뢰, 타협 및 양보에 바탕을 두는데 프랑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신뢰사회와 지역문화공동체의 구축,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시됨

3. 지역 차원의 광역권 정책과 추진조직

- 프랑스는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레지옹(광역도,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승격과 더불어 통합 및 권한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 우리나라는 지역 차원의 광역정책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제휴(협력), 광역연합(간사이 광역연합과 같은 느슨한 형태, 프랑스의 대도시연합과 같은 강력한 형태), 행정통합(프랑스 레지옹과 같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울·경 등 통합)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는 현행 지방행정구조의 경직성과 정치·경제·생활공간의 괴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광역(또는 지역) 차원의 행정체제(시·도 통합, 도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개편과 함께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개편 검토 필요

4. 권한(사무) 배분과 이양

- 프랑스는 1983년의 권한배분 관련 법률과 2003년 3월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서 권한배분 원칙과 함께 권한이양 및 재원이양을 명문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함. 다만 권한배분의 경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및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있음
- 2015년 1월에 신설된 대도시연합은 시, 도, 지역, 국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사무의 기본원칙과 세수입을 규정하고, 이양되는 사무들을 예시한 점은 주목됨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의 체계와 내용

제1절 규약안의 법적 의미

제2절 규약안 조문별 검토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의 체계와 내용

제1절 규약안 법적 의의

1. 규약의 성격

-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정
-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목적에 따른 조직·운영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명시
- 의회·집행기관의 조직, 경비부담 등(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중요사항은 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여 기관구성 형태 등 기본적인 틀의 통일성을 유지
- 규약의 변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처리의 사무 등의 증감에 따라 구역, 사무의 종류 및 자치권의 범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설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제2절 규약안 조문별 검토

1. 필수적 규약 사항

- 지방자치법 제202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규약에 필수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에서 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필수적 규정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제1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제2호),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제4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제5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6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제8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제9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제10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제11호),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2호)임.

구분	필수적 규정 사항
지방자치법 제20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참조조문]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 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 규약(안) 구성 체계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전체 6장 21개 조문 및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따른 필수적 규약사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반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02조	규약(안)
[총칙] ①목적, ②명칭, ③구성 지방자치단체, ④관할 구역	①제1조, ②제2조, ③제3조, ④제4조
[총칙] ⑤사무소의 위치, ⑥사무, ⑦기본계획	⑤제5조, ⑥제6조, ⑦제8조
[지방의회] ⑧조직, ⑨운영, ⑩의원의 선임방법	⑧제9조, ⑨제13조, ⑩제10조~제11조
[집행기관] ⑪조직, ⑫운영, ⑬장의 선임방법	⑪제16조, ⑫제16조, ⑬제15조
[재무] ⑭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경비부담, ⑮지출방법	⑭제17조, ⑮제18조
[기타] ⑯사무처리 개시일 ⑰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⑯부칙 제2조, ⑰부칙 제3조~제5조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칭)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구역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제5조(사무소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제2장 사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① 시도사무(16개 분야 58개 사무) 초광역 철도망·도로망·대중교통망 구축, 탄소중립·수소경제권·조선산업·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역혁신 플랫폼, 먹거리공동체 구축 등 ② 국가사무(3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광역물류단지 지정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5년, (내용)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제3장 의회	제9조(의회의 구성)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 각9명씩 배분
	제10조(의원의 임기)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개정 요청, 조례제정,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동의, 예결산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직원으로 구성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선출)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수입)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분담금)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 부울경 시도지사, (기능)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사무처리 준비행위 경과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4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입법 절차 진행처리
	제5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결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내 용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항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함에 있음.
- 초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사용함.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99조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u>설립</u>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u>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u>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u>설치</u>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u>등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 이유>

- 규약을 성립을 위한 법적 행위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를 명시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초광역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는 점을 명시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의에 기초하여 성립되므로,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위임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는 것처럼 규약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였음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설치 목적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점을 밝혔음
-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설립’과 ‘설치’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음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의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입,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내용을 규약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내 용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가칭)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하 “특별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 조항설명

○ 제4차 공동단장 회의 결과, 명칭은“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합의

○ 명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 행안부 가이드라인(기준) 준수하여 (지역명 전체+특별연합)을 병기함
-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명칭 공모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칭 설계안도 부울경 명칭 선정시 함께 논의함.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u>의</u>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 <u>특별지방자치단체</u> ”라 한다)라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가칭)부산울산경남 <u>특별연합</u> (이하 “ <u>특별연합</u>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수정 이유>

- 규약 조문의 문언을 간결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에서 지시어 ‘이’를 생략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과 같이 기술하였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형식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법실체로서의 특별연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공동의 설립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한 본 규약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약칭은 ‘특별연합’으로 하였음. 표준안에서 사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약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간소하게 지칭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본 규약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하 규약에서 ‘특별연합’으로 약칭하였음.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 내 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

☐ 조항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음.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확대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함.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u>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u> ○○○시, ○○○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u>특별연합을 구성하는</u>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

○ <수정 이유>

- 규약안 제2조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연합’으로 수정하였음
- 제3조 조문의 조제목이 ‘구성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문의 내용을 윤문하여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로 수정하였음

제4조(관할 구역)

☐ 내 용

제4조(관할 구역) 특별연합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 조항설명

- 구성 자치단체의 전체 구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을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함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4조(관할구역) (i)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시, ○○○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ii)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시 ○○○구 ○○○동 2. ○○○도 ○○○시 ○○○동	제4조(관할 구역) 특별연합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 <수정 이유>

-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지시어를 생략하였음
- 표준규약안의 내용은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규약안에는 각 호로 구분하지 않고, 관할 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을 본문에 기술하였음
- 현행 법령에 ‘관할V구역’은 띄어쓰기 용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본 규약에서는 ‘관할V구역’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여 조문의 내용에 기술하였음

제5조(사무소의 위치)

☐ 내 용

제5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 조항설명

-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사무소의 위치를 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효율성 및 특수한 목적 달성 등 고려하고, 실질적인 것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두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함.(부칙 제5조)
- 추진현황
 - 제1차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 '21. 11. 19.
 - (단체장·의장 회의) 청사위치, 단체장·의장 선출 등 논의
 - (위원장 회의) 의회구성(의원정수·배분·임기 등) 논의
 - 시도의회 위원장 및 합동추진단장 회의: '22. 1. 14.
 - 시도의회 위원장 회의(사무소 위치 합의): '22. 2. 10.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5조(사무소의 위치) <u>이 특별지방자치단체</u> 의 사무소는 <u>○○○시에</u> 둔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u>특별연합</u> 의 사무소는 <u>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u> 둔다.

○ <수정 이유>

- 본 규약은 특별연합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효율성 및 특수한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규약에서는 사무소의 위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특정한 위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약 제정 이후에 특별연합 조례 또는 규칙의 형식으로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임

제2장 사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 내 용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①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초광역 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한다.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② 특별연합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조항설명

- 규약에서 제1장~제6장까지 장을 분류하면서“사무”가 규약의 우위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사무”를 배치하여 “의회, 집행기관”보다 앞에 위치하도록 함.
- 규약의 핵심사항인 “사무”는 구성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정했으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분류함.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그동안 구조적·운영적 측면에서 한계성이 들어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강점이 있음.
- 처리사무 확정은 기관설치 목적과 메가시티 기본구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울경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무를 확정함.
- 제4차 공동단장 회의시 요청한 사항인 정의 조항을“초광역 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추가함.

※ 이관 : 특별연합이 수행하게 될 초광역 사무중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무를 제1항에 수록하면서 “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이관”에 대하여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보다는 특별연합의 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연합의회의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함.

○ 시도 이관사무 현황(16개 분야 55개)

구 분	사 무 명	비고
1. 초광역 철도망 구축	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변경(협의)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2. 초광역 도로망 구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②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행)	
	③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이행	
	④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요청)	
	⑤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이행	
	⑥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수립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①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②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	
	③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변경(협의)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⑤ 광역 급행버스 운영	
	⑥ 광역 급행버스(보조) 재정지원	
4. 초광역 탄소중립 기반 구축	① 기후 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	
	② 기후 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①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② 수소산업의 육성	
	③ 수소산업 기술개발	
	④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	

구 분	사 무 명	비고
	⑤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① 조선산업 육성	
	②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	
7.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① 디지털 산업 육성 종합정책 수립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	
	③ 디지털 신산업 육성	
	④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⑤ 기존 제조산업 대규모 디지털 전환 촉진	
	⑥ 디지털 융합 혁신인재 양성	
8. 초광역 메가 R&D 혁신 체계 구축	①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②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④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9.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	① 기업 유치 활동 지원	
	②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대응	
10.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①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11. 초광역 문화·관광 체계 구축	① 지역 문화예술 상호협업체 구성·운영	
	②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③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수립	
12.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② 도시·농촌 간 교류 활성화	
	③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13.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	
	② 감염병병원의 운영 지원	

구 분	사 무 명	비고
	③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④ 응급 의료 전용 헬기 도입·운영	
	⑤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14. 초광역 재난 대응체 계 구축	①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②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③ 지진 재해 원인 조사단 및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④ 지진·화산 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15. 초광역 대기환경 통 합관리체계 구축	①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②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	
16. 초광역 물류체계 구 축	① 초광역 물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위임사무 현황(3개 분야 65개)

구 분	사 무 명	비고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	
	②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	
	③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	
	④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	
	⑤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	
	⑥ 실시계획 변경 승인	
	⑦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⑧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⑨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⑩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	
	⑪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	
	⑫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	
	⑬ 운송사업 면허	
	⑭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	
	⑮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⑯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	
	⑰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	
	⑱ 운임신고 수리	
	⑲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구 분	사 무 명	비고
	20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21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	
	22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23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24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	
	25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26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	
	27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8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9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	
	30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2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	
	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4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5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 규정	
	6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변경 시 고시 및 관계서류 송부	
	7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8 일반물류단지 지정의 해제	
	9 일반물류단지 지정 해제 통보·고시	

구 분	사 무 명	비고
	10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1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다른 시행자 지정	
	12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	
	13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14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고시 및 관계서류의 송부	
	15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공공 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16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7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공원 및 녹지 보존 명령	
	18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	
	19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20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고, 관리청 통지,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21 일반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미착수 및 토지·시설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2 의무 이행시까지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	
	23 의무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24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	
	25 일반물류단지재정비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고시	
	26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27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시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	

구 분	사 무 명	비고
	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	
	29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의 일반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	
	30 일반물류단지 관련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처분 등 필요한 조치	
	31 처분 사실 고시	
	32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관리	
	33 입주기업체협의회 일반물류단지관리계획 접수	
	34 일반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조치 권고	

제7조(사무의 변경)

☐ 내 용

제7조(사무의 변경) ① 특별연합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또는 그 외에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연합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항설명

- 특별연합의 사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변경을 요청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연합의 사무변경 요청에 따라야 함.

☐ 표준안 대비표

표준 규약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7조(사무의 추가 및 변경)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무 외에</u> 구성단체의 사무 중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구성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하여 사무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성단체 간 협의한다. 국가 또는 시·도 사	제7조(사무의 변경) ① 특별연합은 <u>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또는 그 외에</u>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연합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u>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무의 위임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규약의 관련 조항을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 절차는 본 조 제1항의 절차와 같다.	
---	--

○ <수정 이유>

- 표준규약안 제7조제1항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사무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항의 사무는 제7조에 따른 변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은 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도 변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음. 그리고 전항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무는 새로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는 규약변경 절차에 따라 사무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 사무를 추가하려는 규약변경 절차에 따라 사무를 추가할 수 있음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내 용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본계획 이행 및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③ 특별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항설명

- 기본계획은 지역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전문성이 강한 특별연합의 사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국가의 발전계획수립 주기에 맞춰서 5년으로 명시함

< 제3장 의회 >

제9조(의회의 구성)

☐ 내 용

제9조(의회의 구성) ① 특별연합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연합의회의원 (이하 “특별연합의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27명으로 하고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 9명
2. 울산광역시의회 9명
3. 경상남도의회 9명

③ 특별연합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조항설명

○ 의회의 구성

- 각 구성지방단체 의회에서 특별연합의회 의원을 선임

※ 직접선출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성 확보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별 의원 배분(제9조제2항)

- 특별의회 의원 구성 조항은 정수 27명을 각 호에 명시하였음.
-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각9명씩 균등 배분으로 규정함.

○ 결원 발생시 신속한 충원(제11조제3항)

- 특별연합의회 의원 결원 발생시, 그 의원을 추천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새로운 의원으로 신속히 충원

제10조(의원의 임기)☐ 내 용

제10조(의원의 임기) ①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조항설명

○ 의원의 임기(제12조)

- 구성단체의회 의원의 임기 4년임을 감안할 때,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정하되,
- 전문성과 장기간 추진을 요하는 분야의 심의 등을 위해 연임 허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임기)는 지방자치법 제210조 준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 내 용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10조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설명

○ 의장단의 구성(제13조제1항) :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제1항과 제210조(준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단 규모와 동일하게 구성

○ 임기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한 2년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제3항과 제210조(준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

제12조(의결사항)

☐ 내 용

제12조(의결사항) 특별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조항설명

○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 지방자치법 제202조제2항(규약의 변경)에 따라, 특별연합의 장이 규약안 변경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는 개정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의 기본적 의결사항

○ 특별연합의 선출, 구성단체지방자치단체의 가입·탈퇴 동의 등 특별연합의 구성에 관한 사항

○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지방자치법 제203조)

- 특별연합의 장이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연합의회의 의결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특별연합의 사무를 이에 따라 처리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특별연합의 의결사항을 열거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연합이 행하는 사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 내 용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① 특별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특별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조항설명

- 지방자치법 제210조에서는 특별연합의회에 대하여는 시·도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47조 ~ 제56조
 - 의결사항,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 등 규정
- 지방자치법 제72조 ~ 제84조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방법, 의안발의,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제척 등 회의운영 규정
- 특별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연합의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함.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 내 용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조항설명

- 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되, 조직과 정원은 집행기관 구성과 연계하여 결정 (의회 독립적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별도 지침 필요)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제68조), 사무기구와 직원(제102조에서 제104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정책지원인력 규모도 규정하고 있으나,
- 특별연합의회 직원에 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 제41조는 법 제210조에 따라 준용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제4장 집행기관 >

제15조(특별연합의 장)

☐ 내 용

제15조(특별연합의 장) 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후 1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특별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연합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항설명

- 제4차 공동단장 회의 결과, 임기는“1년4개월”합의
-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겸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대표성을 간접적으로 확보
- 3개 시도 단체장의 운번제, 정책집행·재정지원 등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선거 후 1년4개월로 임기를 정함
 - 공석 시에는 특별연합의회에서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
 - 권한대행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4조1항(결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에 따라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함.

제16조(행정기구)

☐ 내 용

제16조(행정기구) ①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조항설명

- 특별연합의 직원은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의 적절한 구성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도모
- 특별연합의 장이 인사권을 보유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원칙적으로 소속직원과 구성 자치단체의 파견직원으로만 구성
 - ① 파견직원
 -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별 파견직원 구성 비율 등을 협의

※ 파견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205③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소속직원

- 임용 관련 규정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

※ 지방자치법 제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동등한 지위

○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과 정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정함

< 제5장 재무 >

제17조(경비부담)

☐ 내 용

제17조(경비부담) ① 특별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제1호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 조항설명

○ 재원은 기본적으로 구성단체의 분담금을 통해 조달

- 조례로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규정 할 수 있으며, 사업 수입, 보조금, 그 밖에 수입 등도 재원으로 함

※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주민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여 과세권은 부여하지 않음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할 부담, 사업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는 기준 규정함

제18조(예산·회계 등)

☐ 내 용

제18조(예산·회계 등) 특별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설명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 특별연합의 예·결산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준용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동등한 지위

< 제6장 위원회 등 >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 내 용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특별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특별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특별연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조항설명

-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기관(의회 및 단체장)구성도 간선제로 하는 등 주민의 통제 및 책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위원회를 둠

○ 협의·조정 사항으로는

- 사무의 변경(추가, 삭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특별연합위원회에서 사무변경을 협의 후 특별연합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 「지방자치법」 제210조에 따라 법 제166조에서 설치하여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지원 할 수 없음.

- 특별연합의 운영,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 사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지역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및 출석 의견 진술

제20조(가입 및 탈퇴)

☐ 내 용

제20조(가입 및 탈퇴)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 조항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므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의사로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

- 가입 또는 탈퇴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 사무처리의 범위 등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설치 절차를 준용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존중

※ ‘탈퇴’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배제하였음

제21조(해산)

☐ 내 용

제21조(해산) 특별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 조항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설치목적 달성을 등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해산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의회·집행기관이 소멸되며, 규약 및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

< 부 칙 >

제1조(시행일)

☐ 내 용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항설명

-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약승인은 내부적인 절차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지체없이 고시함으로써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함.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 내 용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①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사무처리개시일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로 한다.

☐ 조항설명

- 규약 승인 후 시도별 사무 이관 조례 제정, 이관 사업 협의 등 사무처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함
- 사무처리의 단계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는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 법령(시행령 등)의 개정 이후에 사무처리를 개시함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 내 용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특별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소집한다.

☐ 조항설명

-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임시회 소집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 특별연합의 조직중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자가 특별연합 최초 임시회를 소집하여 특별연합의 초대 의장 및 단체장 선출
 - ※ 특별연합의 최초 임시회 운영 절차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름
 -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특별연합의회 의원 선임.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초 임시회 소집 전,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중 특별연합의회 의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등 개최 필요

제4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 내 용

제4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은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특별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연합 설치 후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개별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의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조항설명

○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합동추진단에서 지원하여 특별연합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 필수 자치법규* 제정

- 합동추진단에서 조례안 마련 후,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정된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 절차** 수행

⇒ 행정기구 등 필수조례 시행 이후에는, 합동추진단이 아닌 특별연합 소속의 조직에서 사무처리 개시일 전(23.1.1.)까지의 준비행위를 수행

*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등

** 개별법령에서 정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다만, 입법예고 등 대외적 절차는 특별연합의 장의 명의로 진행)

○ 특별연합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 규약 제6조 사무(수소, 관광 등) 처리에 필요한 조례 제정(시행일: 23.1.1.)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고려하여, 기존 시도 조례에서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삭제가 필요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시도 조례 정비 필요

제5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 내 용

제5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를 결

정하기 위해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항설명

○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두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사무소 결정함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인 쟁점의 법적 검토

제1절 규약안 제정과정

제2절 규약안 조문별 검토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쟁점의 법적 검토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의 법제적 쟁점³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그 선출 방식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음.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제44조 제1항(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음
-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제119조 제3항)으로 구성되고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그 의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강력하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구의 인구편차³⁵⁾를 조정할 필요성 및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왜냐하면

34) 이하의 내용은 권경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주요 쟁점,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정비 제3차 워크숍자료 집, 한국법제연구원, 2021.11. 내용에 따름.

35)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가 속한 지역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차적으로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르되,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 등 2차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33.3%(인구비례 2:1)을 따르고 있고, 지방의회는 인구편차 60%(인구비례 4:1)에서 인구편차 50%(인구비례 3:1)로 판례를 변경한 후(헌재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 등 결정)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사례로는 헌재 2021. 6. 24. 선고 2018헌마405 결정 참조.

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118조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헌법상 “지방의회의...의원선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보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 이와 관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을 통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것에 대해서만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반적·포괄적인 지역사무 전반에 대하여 전권한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는 달리, (기존에 수행하던 사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위임한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의원들이 기존 지방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직을 겸직하더라도 의회의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³⁷⁾
-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법 제203조 제3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법 제205조 제1항)하고 중요사항을 의결·통지(법 제204조 제3항)하며,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확정 및 변경(법 제203조 제1항)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특히 기존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원들이 겸직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주민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이 저해되므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³⁸⁾

36) 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제146조 제2항)....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는바(제189조 제1항), 이러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들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는데, 이는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지만, A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를 B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간주)하는 것이 민주적 선거의 원칙(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7) 이외에도 선거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견해로는 금창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2, 243쪽; 문상덕,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9.9, 187쪽.

38) 김남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통합에 관한 법적 과제-우리나라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제17집 제2호, 한국국가법학회, 2021.6, 130쪽.

- 현재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인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상남도의회 현황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³⁹⁾

- <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의 지역별 현황 및 지방의회 의석구도

	규모	예 산(21)	인구(21)	의원	<정당별>			
					민주	국민	무소속	정의
부산시	769km ²	13조 3,010억원	3,413,415	47 (37.0%)	39	6	2	
울산시	1,062km ²	4조 5,938억원	1,153,020	22 (17.3%)	17	5	-	
경상 남도	10,540 km ²	10조 6,204억원	3,391,603	58 (45.7%)	30	21	5	1
소계		28조 5,152억원	7,958,038	127	86 (67.7%)	32 (25.2%)	7 (5.5%)	1 (0.7%)

-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와 정당비율은 달라지겠지만, 2021년 지방자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석해보면 몇가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 첫째, 선거구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선거권 및 투표가치의 불균형이 존재함. 예컨대 부산시의 인구가 경상남도보다 많지만 지방의회 의원수는 부산시의회보다 경상남도의회가 11명이 더 많고, 울산시는 부산시 인구의 1/3 수준이지만 의원수는 1/2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부산시민의 투표권의 가치가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3명이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로 나서고 지역에 기반하여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경상남도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부산시와 울산시가 연합하여 단일화를 이룬다면 부산시장 또는 울산시장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지역적인 이해관계보다 소속 정당의 사실상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⁴⁰⁾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당구도가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역관련성 내지 정당기속에 의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39) 홍중현,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9, 15쪽.

40) 이는 2022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 내 정당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장을 선출하는 의회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이를 책임정치 실현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구성된 지방의회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선거구 획정방식 하에서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역선택이 나타날 위험성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임.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지역 또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고, 작은 지역의 의사를 무시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탈퇴를 신청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속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음⁴¹⁾

-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별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단출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의 지역별 현황 및 지방의회 의석구도에서 보다시피 지방의회의원수를 모두 겸직하게 될 경우 127명의 의원이 모여 특정사무에 대해 의결하는 것은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해치므로 불가능함.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겸직을 하게 되고, 사무도 특정사무에 한정되고,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이 그 업무라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가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인구수대비와 산술적인 지역안배가 아니라, ‘특정사무와 광역적 처리’와 관련된 조율이 필요하므로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수파와 소수파의 합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특별지방의회의원 업무의 종류와 양을 일반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비교해 볼 때 회의비정도의 보상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동종의 상임위원을 겸직하게 하여 전문성을 연계하고, 특히 전문성과 열의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을 구성한다면 특별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⁴²⁾

41) 홍중현, 전계논문, 16쪽.

42) 본 절의 내용은 진성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정비 제3차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21.11. 내용에 따름.

규약(안)

제12조(의결사항) 특별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건의

- 규약(안) 제12조제1호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제119조 제1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동조에 따르면, 해당 규약의 의결 권한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있고 그의 승인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 있으므로 특별연합의회는 규약의 개정에 관한 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규약(안) 제12조제2호는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02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개정 지방자치법상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권한이 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므로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특별연합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할 수 있음.
- 특별연합 조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지방자치법 제20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의 실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 특별연합의회는 의결을 통해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 제205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동의

- 특별연합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동의를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 제208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

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가입 또는 탈퇴의 수용 여부를 특별연합의회의 결정사항으로 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 또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208조 제3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입 또는 탈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 제200조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특별연합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예산을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지방자치법 제206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고, 경비의 관리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약(안) 제8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방법, 구성 지방자치단체별 역할, 재정운용계획, 기본계획의 실효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7)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특별연합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상의 논의사항 이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감사제도

(1)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적용여부

1) 의의

- 현재 규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적용여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지방의회는 매년 1회(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함⁴³⁾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43) “법령에서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日數)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법제처 06-0332 2006. 12. 15)” 즉,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

-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는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실시 가능함
- 단, 감사대상에서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됨
 -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조사 발의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실시함

2)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지방의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준비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지 않거나, 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무효임⁴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 요구 가능함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49조제5항)

3)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유의사항⁴⁵⁾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갈등의 주요 원인
- 지방의회는 불만은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조치 미흡,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 부족, 의회

44)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12, 38-39면.

45) 대법원 1997.9.26. 선고, 97주43 판결.

와의 사전협의 부족, 의원에 대한 예우 소홀 등

- 집행기관의 불만은 과다한 자료요구 및 중복질문,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과 무리한 출석요구, 의원 집단이기주의 또는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예산요구 등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고, 공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함
- 행정사무조사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함
-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감사·조사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위원회, 단체 등은 집행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이 됨.
-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야 함

4)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

-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지방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제50조 제3항)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질의응답이 가능(행정처리 상황보고 제도)
- 행정처리 상황보고 제도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체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⁴⁶⁾

[해석례]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및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의 이사장 등 임직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의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이사장 또는 임직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례 제정 시 舊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동법 제110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해당됨
- 따라서, 舊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 등)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임직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한편, 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이사장 또는 임직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舊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저촉된다고 봄

3.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처의 기능

제16조(행정기구) ①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46)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12, 40면.

④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 규약(안) 제14조는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 제210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예시.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둘 수 있음(동법 제102조).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규약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함(동법 제103조 제1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동법 제103조 제2항).
-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이때,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을 보장함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 및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3) 전문위원의 복무관리와 역할

- 개정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함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⁴⁷⁾
-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상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원인 전문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4. 기타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한 추가 논의 사항

인사권 행사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추44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추138 판결.
행정기구 설치 관한 조례안 발의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추48 판결.
채무부담원인행위의 통제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71597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추87 판결.
의결의 효력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0. 6. 20.)
자치사무 민간위탁 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례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0. 10. 29.)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법제처 07-0444 2008. 1. 25.)
	“공유재산인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견은 받지 않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고시하였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1. 9. 16.)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전세권 취득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법제처 11-0430 2011. 9. 29)

47)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2. 2. 16.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은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예산 외의 의무부담’”(법제처 09-0192 2009. 6. 26.)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기능·권한	“협약의 체결 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협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지방의회의결사항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주요 과정마다 처리상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0. 10. 8.)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교류대상의 자격 및 행사의 규모 등을 외형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해당 사업의 중요도, 향후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정도, 주민 및 의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를 판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10. 10. 7.)
전문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회나 의원이 가지는 바, 의원 아닌 위원인 전문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9. 8. 4.)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 방법의 법적 쟁점⁴⁸⁾

(1) 규약안의 내용

- 규약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규약(안) 제15조제2항에서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규약(안)

제15조(특별연합의 장) 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48)본 절의 내용은 권경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주요 쟁점,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정비 제3차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21.11. 내용에 따름.

- ②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 ③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후 1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⑤ 특별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⑥ 특별연합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간선)”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음(법 제205조).⁴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⁵⁰⁾ 실제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할 수 있으므로 그 구역에서 지지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⁵¹⁾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와 대립하거나 의회의 협조 없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기관대립)는 줄어들고, 가급적이면 지방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보다는 순응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방식

-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념을 조화시키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가깝게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의 선거권(법 제17조 제3항)과 주민소환(법 제25조)의 준용을 배제하고(법 제

49) 2006년 당시 개정안 제169조에 따르면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권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지, 복수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아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5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출절차,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51) 의회에서 선출(간선)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직선제인 경우에 입후보자가 스스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선출권이 있는) 의회 내에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의장이 스스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는 다른 나라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형, 위원회형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210조 단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⁵²⁾ 즉,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기존의(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구조임. 이와 관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동일하므로 거의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서 규율하는 방식은 논리적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음.⁵³⁾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규약체결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주민의 참여를 요하지 않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등을 행사하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⁵⁴⁾ 이 판결에서 “공직선거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은 ‘선거’로 규정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여 온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이외의 다른 선출방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관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의회에서 간선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⁵⁾. 그리고 위 현재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선자의 결정방식은....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여 “주민간선제”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⁵⁶⁾ 즉,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법률에 유보하고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간선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⁵⁷⁾

52)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주민투표(제18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법 제19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법 제20조), 주민감사청구(법 제21조), 주민소송(법 제22조~제24조), 정보공개(법 제26조) 등은 준용된다.

53) 문상덕, 전개논문, 185쪽 참조.

54) 헌재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55) 지방자치법(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제98조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 읍, 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56) 지방자치의 구체적 입법형성과 위헌성 통제의 한계에 대하여는 조성규,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6. 45~79(50~51)쪽 참조.

57)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한 바 있다. “헌법 제118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 의원선거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18조 제2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선거’와는 구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헌재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등 결정)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의원내각제적 구성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음.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의회 다수파를 구성한 의원들로 집행부를 구성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지,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 행정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하여 간선제가 실제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현재 상황에서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 다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관 상호간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규약(안)의 특별연합 사무: 현황 및 특성

- 사무와 관련하여 규약(안)⁵⁸⁾은 특별연합 사무의 구성방식, 대상범위, 처리권한, 변경사항, 처리계획 등 5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 5개 규정에서 특별연합 사무의 현황과 특성은 다음과 같음. 우선, 규정 현황임.
 - 사무의 구성방식은 제6조 제1항에서, 사무의 대상범위는 제6조 제1항 1호에서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 사무의 처리권한은 제6조 제3항에서, 사무의 변경사항은 제7조에서, 사무의 처리계획은 제8조에서 각각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사무의 구성방식은 위임설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규약(안)은 국가 또는 구성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특별연합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⁵⁹⁾ 그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지만, 이를 두고 미국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8) 본 보고서에서 규약(안)은 12월 2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59) 규약(안)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리므로 규약(안)상 특별연합 사무는 위임사무만 있고, 고유사무는 찾을 수 없음⁶⁰⁾

○ 사무의 대상범위는 구성자치단체의 자치구역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수준의 특정분야 사무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규약(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무는 수직적 정부계층구조와 정책영역 등의 맥락에서 특징지을 수 있음.⁶¹⁾
- 우선 수직적 정부계층구조의 맥락에서, 특별연합 사무는 “초광역 수준”의 사항으로 하고 있음. 즉,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 각각의 자치구역경계를 넘어서는 사항을 특별연합사무로 하고 있음.
- 정책영역의 맥락에서, 특별연합 사무는 교통·물류, 산업·투자유치, 지역혁신, 문화관광·먹거리, 보건의료·재난·대기환경 등 15대 분야에 광범하게 걸쳐 있음.

○ 사무의 처리권한은 형식적 의미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명시하여 특별연합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규약(안)은 특별연합이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에 대한 책임 역시 특별연합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⁶²⁾ 즉, 규약(안)은 형식적 의미에서 특별연합에 사무처리의 독립적 처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무의 그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특별연합에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사무의 변경은 특별연합이 사무의 변경대상을 발굴할 수는 있지만, 변경대상 사무를 스스로 결정·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이는 특별연합 사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12월 22일의 규약(안)은 규약 변경절차에 준하여 사무를 특별연합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음.⁶³⁾ 그런데 12월 7일의 규약(안)⁶⁴⁾은 그 변경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있다.

60) 물론, 특별연합의 사무기구 및 사업소 등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과 관련한 고유사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1) 특별연합 사무의 대상적 범위는 규약(안) 제6조 제1항의 1호에서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62) 규약(안) 제6조 제3항은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3) 12월 22일의 규약(안) 제7조는 “특별연합은 규약 변경 절차에 따라 제6조의 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4) 12월 7일의 규약(안)에서는 “사무의 추가·변경·삭제할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 위임사무(제6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외의 사무를 특별연합에 설치할 경우 구성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런데 사무변경을 위한 규약 변경절차는 개정지방자치법⁶⁵⁾ 제2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본 제2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연합 사무변경은 기본적으로 구성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⁶⁶⁾ 또한 국가사무의 위임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특별연합의 사무위임 요청과 그 사무위임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있음.
- ‘구성자치단체 의회 의결’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 외에, 특별연합 차원의 사무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규약(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즉, 규약(안) 규정에 의하면, 특별연합의 사무변경은 첫째 특별연합위원회의 심의·조정(제19조 제2항 1호), 둘째 특별연합의회 의결(제12조 1호, 2호) 등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변경 의결·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가 공식적으로 특별연합의 사무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따라서 특별연합은 사무의 변경대상을 발굴할 수 있지만, 사무변경의 결정·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무의 처리계획은 기본계획의 형식으로, 특별연합장의 책임 하에 수립되며, 특별연합의회 의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특별연합위원회 역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규약(안)은 특별연합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특별연합장의 책임 하에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⁶⁷⁾ 또한 규약(안)은 사무처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5개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⁶⁸⁾ 그 5개 사항은 사무의 목표·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추진방법, 사무에 관한 특별연합·구성자치단체 간의 역할,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기간 등임.
-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안)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특별연합 의회 의결에 의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을 규약(안) 제12조 6호는 명확히 하고 있음.⁶⁹⁾

65)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법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 유효한 지방자치법은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지칭하여 구분하였다.

66) 지방자치법 제202조 제2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4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199조 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7) 규약(안) 제8조 제1항은 “특별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8) 사무처리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은 규약(안) 제8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69) 규약(안) 제12조 6호는 “특별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규

- 뿐만 아니라, 특별연합위원회 역시 사무의 처리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별연합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특별연합 관련사항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그 협의·조정 사항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사무·사무처리·경비부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합위원회 역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

1. 사무분장 및 행정기구의 조직: 행정부서

- 규약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두고, 그 행정기구의 조직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⁰⁾
 - 규약은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을 사무의 분장에 두고 있음.
 - 그러나 그 사무의 분장 즉, 행정기구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약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조례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즉, 규약에서는 행정기구의 조직인 행정부서에 대해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합 행정부서의 구상 및 설계는 조례나 규칙에 담아야 할 것임.
 - 사무분장을 통한 행정기구의 조직 즉, 행정부서의 조직 설계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사무를 기능적 차원에서 분류·구분하는 것에 있음.
- 규약에 특별연합의 사무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 하나는, 정책사업 영역의 사무들임.
 - 다른 하나는, 그 정책사업 영역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무들임.
- 정책사업과 관련한 특별연합 사무는 규약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하여 직접 명시하고 있음. 그 정책사업 영역사무는 15개 분야에 걸쳐 있음. 그 15개 사무분야는 <표 4>와 같이, 기능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정하고 있다.

70) 규약 제16조 제1항은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기구.....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약 제16조 제2항은 행정기구의 조직.....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4> 규약 제6조 제1항에서 특별연합 사무분야와 기능군분류

기능군	개별 사무분야	참고
교통 · 물류	철도망 구축	1호
	도로망 구축	2호
	대중교통망 구축	3호
	물류 체계 구축	15호
산업기반구축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4호
	수소경제권 구축	5호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6호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9호
투자유치 · 지역혁신	투자유치 체계 구축	7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8호
문화관광 · 먹거리	문화·관광체계 구축	10호
	먹거리 공동체 구축	11호
보건 · 의료 · 환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12호
	재난 대응체계 구축	13호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14호

○ 정책사업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무는 규약에서 조직 · 인사관리, 재무관리, 기본계획수립, 대외적 업무 등의 사무를 찾을 수 있음.

- 직 · 인사관리 관련 사무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제16조 제2항)”, “행정기구의 운영(제16조 제4항)”, “직원의 구성(제16조 제3항)”,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운영(제16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 재무관리 관련 사무는 “특별연합의 경비부담과 수입확충(제17조)”,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제18조) 등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 사무처리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무는 규약의 제8조에서 찾을 수 있음.
- 대외적 업무 관련 사무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사무의 처리 · 변경 등과 관련한 사무에서 찾을 수 있음.

<표 5> 규약에서 특별연합의 지원기능 사무분야

기능군	개별 사무분야	참고
조직 · 인사관리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	제16조 제2항
	행정기구의 운영	제16조 제4항
	직원의 구성	제16조 제3항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	제16조 제4항
재무관리	특별연합의 경비부담과 수입확충	제17조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	제18조
사무처리 기본계획수립	사무처리 기본계획수립	제8조
대외적 업무	특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9조
	사무의 처리 · 변경과 관련한 사항 등	

2. 선행연구에서 사무분장과 행정부서

(1) 특별연합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은 요약보고서에서 우선 ‘지원기능’과 ‘정책기능’ 두 영역으로 특별연합의 사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지원 ·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분장의 구체적 사항은 <표 6>과 같음
 -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분야는 기획예산, 행정지원, 정보전산 등으로 구분 · 포함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분야는 문화교육, 산업경제, 교통물류, 재난환경 등으로 구분 · 포함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여기서 첫째, 문화교육 분야는 관광계획, 관광개발, 관광홍보, 교육혁신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둘째, 산업경제 분야는 산업계획, 산업기반, 산업유치, 산업지원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셋째, 교통물류 분야는 교통계획, 교통시설, 교통운영, 물류운영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넷째, 재난환경 분야는 원전방재, 지진방재, 환경관리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사무분장을 전제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는 특별연합의 행정기구 즉, 행정부서를 ‘5개의 실국과 18개의 과’로 설치할 것을 구성 · 제안하고 있음.
- 동시에 보고서는 이러한 행정부서를 전제로 할 경우, 222명의 사무직원 및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하고 있음.

<표 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검토(안)

기능분야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지원기능	기획조정	○
	행재정	○
문화체육관광		○
보건복지		
산업경제		○
환경관리		○
도시주택		
지역개발		○
소방방재		○

단체장				
기획지원실	문화교육국	산업경제국	교통물류국	재난환경국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정보전산과	관광계획과 관광개발과 관광홍보과 교육혁신과	산업계획과 산업기반과 산업유치과 산업지원과	교통계획과 교통시설과 교통운영과 물류운영과	원전방재과 지진방재과 환경관리과
37명	49명	49명	49명	37명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년).

(2)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보고서

-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보고서(2021a)는 7개 분야로 사무분장을 하고 있음.
 - 그 7개 사무분야는 기획조정, 교통, 물류, 재난환경, 보건의료,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여기서 재난환경 분야는 재난관리, 환경으로 사무를 나누고 있고, 경제산업은 교육·먹거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 관광으로 사무를 나누고 있음.
-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보고서(2021b)에 의하면,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우선 ‘기획·총무 기능관련 사무’, ‘정책·사업기능관련 사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음.

- 광역연합 본부는 ‘기획·총무 기능관련 사무’와 일부 정책·사업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나머지 다양한 광범한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사업기능관련 사무는 구성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는 사무분장·행정기구 시스템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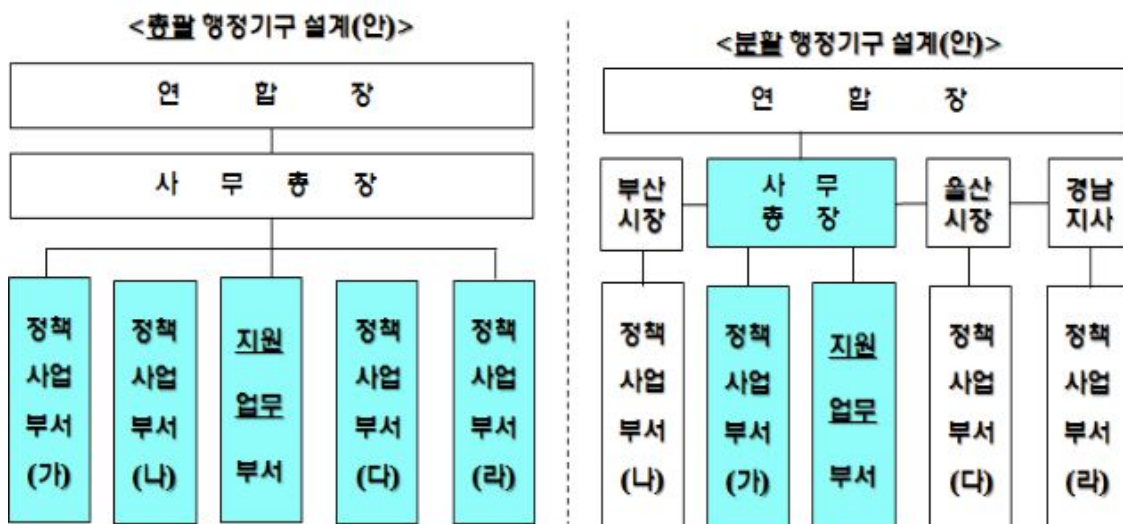
(3)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의 발전방향

1) 행정기구 및 행정부서 설계의 기본 방향

- 행정기구 및 행정부서 설계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고민해야할 사항은, 특별연합에 ‘총괄행정기구’의 형태로 또는 ‘분할행정기구’의 형태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는 생각임.

- ‘총괄행정기구’는 특별연합 본부 내에 모든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 ‘분할행정기구’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 같이, 특별연합 본부에는 소규모의 사무국만 두고, ‘정책·사업기능관련 사무들’을 구성자치단체별로 분담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체제를 의미함

<그림 3> 행정기구 및 행정부서 설계(안)



2) 수평적 분업 및 행정부서 설계

- 특별연합 사무의 수평적 분업 및 행정부서는 다양한 설계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규약에서 특별연합의 사무를 고려할 때, 5대 기능분야로 분업화하는 것을 구상할 수 있음.
- 그 5대 기능분야는 기획·행정, 교통·물류, 산업기반·육성, 투자유치·혁신, 공동체육성·안전 등으로 분업화하여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기획·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사무처리 기본계획수립, 대외적 협력업무,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함
 - 둘째, ‘교통·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철도망 구축,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망 구축, 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함
 - 셋째, ‘산업기반·육성’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수소경제권 구축,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함
 - 넷째, ‘투자유치·혁신’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투자유치 체계 구축,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함
 - 다섯째, ‘공동체육성·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체계 구축, 먹거리 공동체 구축,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함

<표 7> 특별연합 사무의 수평적 분업 및 행정부서(안)

기능별 분업	개별 사무분야(규약 규정)	참고
조직 · 인사관리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제(제16조 제2항)	기획행정 부서
	행정기구의 운영(제16조 제4항)	
	직원의 구성(제16조 제3항)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 (제16조 제4항)	
재무관리	특별연합의 경비부담과 수입확충(제17조)	
	예산 · 결산 등 재무사항(제18조)	
기본계획수립	사무처리 기본계획수립(제8조)	교통물류 부서
대외적 업무	특별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19조)	
	사무의 처리 · 변경과 관련한 사항 등	
교통 · 물류	철도망 구축(제6조 제1항 1호)	
	도로망 구축(제6조 제1항 2호)	산업기반육성 부서
	대중교통망 구축(제6조 제1항 3호)	
	물류 체계 구축(제6조 제1항 15호)	
산업기반구축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제6조 제1항 4호)	
	수소경제권 구축(제6조 제1항 5호)	투자유치혁신 부서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제6조 제1항 6호)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제6조 제1항 9호)	공동체육성안전 부서
투자유치 · 지역혁신	투자유치 체계 구축(제6조 제1항 7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제6조 제1항 8호)	
문화관광 · 먹거리	문화·관광체계 구축(제6조 제1항 10호)	
	먹거리 공동체 구축(제6조 제1항 11호)	
보건 · 의료 · 환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6조 제1항 12호)	
	재난 대응체계 구축(제6조 제1항 13호)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6조 제1항 14호)	

(4) 행정기구: 사무직원

1) 규약에서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구성 · 신분

○ 특별연합 사무직원의 구성과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약 제16조 제3항에서⁷¹⁾ 직접 명시하고 있음.

- 첫째, 직원의 구성임. 특별연합 사무직원은 자체직원과 파견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둘째, 직원의 신분임.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즉 자체직원도, 구성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파견 직원의 구성 비율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규약에서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 특별연합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특별연합 조례와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⁷²⁾

-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 광역시·도의 현행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특별연합 고위직 공무원이나 사업소의 장 등은 별도의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표 8> 규약에서 사무직원의 규정현황

구분		규정사항	참고
구성·신분	구성	자체 직원, 파견 직원	자체·파견 비율 미 규정
	신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임용·보수·복무 등은 특별연합의 조례·규칙으로 정함	

3) 선행연구에서 자체·파견 직원의 사무수행과정에서 의의

○ 자체·파견 직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무엇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협력건인역량의

71) 제16조 제3항은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2) 제16조 제4항은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음.

- 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사무직원의 구성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음(안권욱2012a; 안권욱·손은일, 2021). 자체직원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무기구의 독립성 수준이 높고, 파견직원 비중이 크면 독립성 수준이 낮아짐
- 그런데 사무기구의 독립성 수준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협력견인역량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게 됨. 즉, 사무기구의 독립성 없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협력강화를 위해 가급적 사무기구의 직원을 자체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정치행정과정에서 집행과정 역시 또 하나의 의사결정과정 즉, 세부적 사항의 의사결정과정임. 따라서 정책목표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특별연합의 사무직원은 자체직원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함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중 하나임.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협력체계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직원에 대한 선행연구(김수연, 2019; 안권욱·손은일, 2021; 조성호 외, 2019; 금창호, 2018)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조합은 사무직원을 ‘구성자치단체의 파견직원’과 ‘조합의 자체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둘째, 파견직원은 일차적으로 조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속자치단체를 위해서 일처리를 하게 됨.
 - 셋째, 파견직원은 단기간의 보직순환형태로 조합에 근무함으로 인해, 사무처리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음.
 - 따라서 협력체계의 독립성이 높은 사무기구 구성방식은 조합의 자체직원 비중을 파견직원 보다 더 크게 하는 것에 있을 것임.

(5) 특별연합 자체·파견 직원의 설치·운영

(1) 자체·파견 직원의 설치기준

- 특별연합의 사무직원을 배치할 경우, ‘어떤 경우에 자체 또는 파견 직원으로 설치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 그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이 처리해야하는 사무의 성격에 달려 있을 것임. 그런데 직원배치의 측면에서 사무의 분류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즉, 그 하나는 ‘협력·조정사무’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집행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협력·조정사무’란, 부·울·경 광역시·도간의 갈등 수준이 높아 상호간의 조정·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사무를 의미함. ‘단순집행사무’란, 광역시·도간의 이익·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를 의미함
- ‘협력·조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의 직원 즉, 자체직원으로 배치해야할 것임.
- ‘단순집행사무’의 처리를 위한 직원은 구성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임.
- 이러한 방식으로 자체·파견 직원 배치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

(2) 자체직원의 임용·직급

- 특별연합 자체직원의 임용·직급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 광역시·도의 인사규정에 준해 특별연합 조례와 규칙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사무직원의 직급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특별연합사무총장은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에 상응하는 직급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연합의 실·국장과 과장은 광역시·도의 실·국장 그리고 과장에 상응하는 직급을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5. 사업소와 연구소

(6) 사무위탁 및 사업소와 연구소의 필요성

1) 사무위탁 및 사업소

-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의 경우,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는 여러 다양한 지역혁신주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안권욱·배준구, 2021).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육성 및 혁신사무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유)지역경제육성(WRS)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음.
 - 관광마케팅사무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유)마케팅·관광(RSMT)에 위임해서 수행하고 있음.
 - 전철·지역철도 운영 사무는 (유)바덴-뷔르템베르크 교통요금(BWT)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 교통계획·요금계획·노선계획 등의 사무는 (유)교통·요금연대(VVS)에 위임해서 수행하고 있음.
 - 국제박람회 관련 사무는 (유)박람회프로젝트(ProNM KG)에 위임하여 구체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특별연합의 사무들 중에서 특별연합이 그 사무를 직접 추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 사무⁷³⁾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무들 중 광역급행버스 운영 사무(바 문)
 - 친환경 산업 공동육성 등과 관련한 사무들 중 광역 조선산업육성 사무(가 문)
 - 관광체계 등과 관련한 사무들 중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사무(나 문)
 - 먹거리 공동체 등과 관련한 사무들 중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가 문)
 - 예를 들은 이들 사무는 특별연합이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센터나 본부 등 특별연합의 사업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73) 규약[별표 1]에 준한 것이다.

2) 연구소

- 특별연합의 많은 사무들은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하고 있음. 그런데 계획의 수립은 그 계획과 관련한 전문적 연구와 검토 없이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임. 따라서 각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합 직속의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전문적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 특별연합 사무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철도망구축 관련 분야에서는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무는 전문적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 사무임.
 - 도로망구축 관련 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요청’,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사무임.
 - 수소경제권구축 관련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등의 사무임.

3) 사업소와 연구소 설치·운영

- 사업소는 특별연합 직속의 센터나 본부 등의 형식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과 부·울·경 지역에 있는 기존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소는 특별연합 직속으로 ‘(가)특별연합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특별연합의 전문적 사항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3개 광역시·도 연구원은 각자 소속 광역시·도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러므로 3개 광역시·도 전체 차원에서 중립적인 전문적 자문 및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부·울·경 전체의 이익 즉, 중립적 차원에서 정책개발과 전문적 지원을 위해 독립된 ‘(가)특별연합연구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제5절 특별연합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형태

○ 규약(안)에 따른 ‘특별연합위원회’의 성격

- (안 제19조)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
- 이는 실질적인 단체장들의 ‘집행기구’이면서 ‘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려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음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의장 + 부의장 등의 구성 방법
- 회의는 정례회의 + 임시회의 운영방법
- 회의 성립요건
- 회의 결과 및 기록의 관리 방법

○ 위원회의 기능(협의·조정의 효력)

- 규약(안)은 위원회 기능을 “협의·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협의·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이 행정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규명이 필요한바, 자문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우 권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것임.

○ 협의·조정의 대상적 범위

- 규약(안)상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검토
- 규약(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되어야 할 협의·조정 사항은?

※ 위 질의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들을 제시하여 정리함

2.1 <구성 제1안> : 3개 광역시·도지사

— 각자가 소속한 구성자치단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협의·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 구성 자치단체의 장들로만 구성되는 ‘특별연합위원회’의 2가지 조직 형태

- (1안)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의 추진단의 성격과 같이 3개 광역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시장·도지사만으로 구성된 3명 중심의 ‘집행위원회’가 되는 경우를 고려함
- (2안)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들도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연합기구에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는 회원일 경우, 부산시 15개 자치구와 1개 군, 울산시 4개 자치구와 1개 군 그리고 경상남도 8개 시와 10개 군 등 기초단체장들도 모두 포함한 구성 자치단체 회원으로서 실질적인 최고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인(혼합형) 특별연합위원회의 위원들로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사례

- (사례 1) 영국 맨체스터 대도시연합기구(GMCA)의 경우, ‘맨체스터(GMCA) 헌법(Constitution, 2019년)’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함. ‘연합의회’는 별도로 없으나, 10개 구성 자치단체 장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leaders of the ten councils)는 실질적인 연합의회의 역할도 수행하고 집행기관의 역할도 수행함
- 이 집행위원회의 의장이자 11번째 위원인 연합장은 10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지방선거(2017년 5월, 2021년 5월)를 통해서 직선한 대도시 시장(metro mayor)임(현재 연합장은 재선의 Andy Burnham 전 국회의원). 직선 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리더)들로만 구성된 영국 맨체스터 GMCA ‘집행위원회’는 의장 뿐만 아니라 10명의 대표위원(리더 또는 단체장)들도 각자 분야별로 맡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분담형 업무책임제로 운영함

<표 3> 집행위원회 10명 (리더/단체장)위원들의 수행업무 및 권한

정치리더 이름	지방정부 대표리더	분담기능 및 책임
Mayor Andy Burnham	GM Mayor 대도시시장	Strategy, Transport & Reform (전략, 광역교통, 개혁정책)
Baroness Beverley Hughes	Deputy Mayor 부시장	Safe & Strong Communities

		(안전, 지역사회 단결)
Cllr David Greenhalgh	Bolton 시 정치리더	Culture (문화)
Cllr Eamonn O'Brien	Bury 시 정치리더	Young People & Cohesion (청소년 및 시민협동)
Sir Richard Leese	Manchester 시 시장	Health & Care (보건의료)
Cllr Sean Fielding	Oldham 시 정치리더	Employment, Skills & Digital (고용, 기술교육, 디지털)
Cllr Allen Brett	Rochdale 시 정치리더	Community Co-ops & Inclusion (지역사회 협력 및 사회복지)
Mayor Paul Dennett	Salford 시 정치리더	Housing & Homelessness (주택, 무주택자 보호)
Cllr Elise Wilson	Stockport 시 정치리더	Economy (지역경제)
Cllr Brenda Warrington	Tameside 시 정치리더	Age-Friendly GM & Equalities (노인정책, 성평등정책)
Cllr Andrew Western	Trafford 시 정치리더	Green City Region (지역발전)
Cllr David Molyneux	Wigan 시 정치리더	Resources & Investment (자원개발 및 공공투자)

※자료: GMCA, Annual Governance Statement 2019-20.

- (사례 2)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위원회도 구성 자치단체의 장들로만 구성되어서, 광역연합의 운영상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처리 방침 등을 직접 책임지고 대표성을 갖고 결정하고 있음
- 주요 기능/권한은 예규 및 광역계획, 예산·결산 등을 주도하고, 구성 자치단체의 다양한 주민의 견을 직접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집행책임도 갖기 때문에 효과적임
- 뿐만 아니라 연합장만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 타협 등을 통해서 독임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합의제 형태의 조직운영 방식으로 거치기 때문에 업무의 분담, 전문성 활성화 및 보장 그리고 그에 따른 개별적 때로는 합의에 의한 공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처럼 간사이 광역연합은 일본의 다른 광역연합과 달리, 그러나 영국의 맨체스터 GMCA의 집행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구성 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분야마다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설치·운영되고 있음⁷⁴⁾
- 단점으로는, 단체장들의 권한이나 정치적 무게감이 클 경우 연합회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거나, 사무총장 이하 전문직 공무원들의 정책적 조언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강력한 집행력으로 독자적 정책집행 행보를 추구할 수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합 규약’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들을 사전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가령, (1) 반드시 연합회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는다거나 또는 해당

74)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rengoiinkai/238.html>.

상임위원회의 2/3 찬성을 규정하거나, 더 영향력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2) 부울경 전 지역주민 및 해당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찬성의견 등의 절차적 승인 단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함

2.2 <구성 제2안> : 광역시 · 도지사(+ 전문가 + 주민 · 시민사회 등)

- 위원회를 단체장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구성한 ‘확대위원회 모형’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 ‘확대위원회 모형’에서 (1)위원의 구성원과 (2)구성방식은?

- 구성 자치단체의 장과 임명직(부연합장, 사무총장), 중앙정부 대표(주무부처에서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주민대표·민간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구성되는 확대형 ‘특별연합위원회’ 조직 형태
- (사례 1) 2014년 4월 1일 출범한 리버풀 대도시 지방정부연합(LCRCA, Liverpool City Region Combined Authority)은 Halton, Knowsley, Liverpool, Sefton, St. Helens, Wirral 등 6개 지방정부들이 구성 지방자치단체이며, 나머지 Warrington UA, West Lancashire DC, 리버풀 지방공사협회(LEP) 등은 비회원 지방정부(non-statutory members)로 유관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⁷⁵⁾
 - 리버풀 대도시연합(LCRCA)의 대표자는 선출직의 대도시 시장(Metro mayor)이고, ‘집행위원회’가 있음. 이 집행위원들은 리버풀 시장과 5개 지방정부 정치리더(단체장)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직선 대도시 시장과 함께 대도시연합(LCRCA)의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행사함. 동시에 대도시 시장의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또 대도시 시장에 대한 정책적 책임성을 감독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함
 - 이 ‘집행위원회’에 단체장이 아닌 다른 대표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음. 예를 들면, 리버풀 대도시연합(LCRCA) 집행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 리버풀시의회 대표의원, 리버풀 지역 지방공사협회(LEP) 대표위원,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 부시장 겸 리버풀 지역경찰위원 등 나머지 4명의 위원들(non-voting, appointed councilors)도 참여함. 그리하여 ‘집행위원회’는 총 9명이고 직선 대도시 시장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임

75) <https://www.liverpoolcityregion-ca.gov.uk/>.

-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⁷⁶⁾

<표 4> 리버풀 연합의 집행위원 간 업무배분 및 수행사무(2020)

주요 담당업무	정치리더(단체장)
(리버풀 대도시권 정책, 개혁, 자원활용) Policy, Reform and Resources	리버풀 대도시 시장(Metro Mayor) Steve Rotheram
Education, Employment & Skills (교육, 고용, 직업교육훈련)	리버풀 시 시장(Mayor of Liverpool)
Business Support & Brexit (기업지원 및 브렉시트 정책지원)	리버풀 지방공사협회(LCR LEP) 대표위원
Criminal Justice (경찰행정, 범죄퇴치, 사법)	부시장 겸 지방경찰위원
Transport & Air Quality (대중교통, 대기질)	리버풀 시의회를 대표한 시의원
Inclusive Economy & Third Sector (포용경제 및 제3섹터)	Wirral 지방정부 정치리더
Culture, Tourism and The Visitor Economy (문화, 관광, 방문경제 등)	Seftton 지방정부 정치리더
Low Carbon & Renewable Energy (저탄소정책 및 재생에너지 활용)	Halton 지방정부 정치리더
Housing & Spatial Framework (공용주택 및 공간개발)	Knowsley 지방정부 정치리더
Digital Connectivity & Inclusion (디지털산업 및 사회부조)	St. Helens 지방정부 정치리더

- 이 집행위원회는 연합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산하기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상임위원회에 각 집행위원들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직접 집행에 참여하고 있음
- 산하 상임위원회들은 감사조사위원회(Overview & Scrutiny Committee), 내부감사위원회(Audit & Governance Committee), 인사위원회(Appointments & Disciplinary Committee), 교통위원회(Transport Committee) 등임

- (사례 2) 미국 워싱턴DC 대도시권 지방정부협의회(MWCOG)의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Board of Directors)에는 다양한 대표들이 구성위원으로 참여함. 대표위원들을 보면 24개 구성 지방정부들의 대표 이외에도 관할 주를 대표하는 메릴랜드(Maryland) 주와 버지니아(Virginia) 주의 의회대표 그리고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위원 등임: (1) 워싱턴DC 지역 대표위원(4명), (2) 메릴랜드 주에 속한 지방정부 대표위원(16명), (3) 버지니아 주에 속한 지방정부 대표위원(14명) 등 총 34명임⁷⁷⁾
- 이와 같이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한 확대형 ‘집행위원회’의 경우, 본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연합장이 되고, 연합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복수의 부연합장들을 선출하여 보조함. 동시에 전문경영인으로서 임명직의 사무총장(수석행정관)을 임용하여 일상업무 등 management를 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직체계를 활용함
 -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확대된 ‘집행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전문분야별 상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집행력을 더 한층 확보하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워싱턴DC 대도시권 지방정부협의회(MWCOG)는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미국 수도권 교통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Region Transportation Planning Board, TPB), 워싱턴 대도시권 대기질위원회(Metropolitan Washington Air Quality Committee, MWAQC) 등 2개를 설치·운영하면서 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확대된 ‘집행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출직/임명직) 공무원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성과 무관한 위치에 있는 위원들인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종의 ‘옵저버’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에 MWCOG는 집행위원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이 6명 있으며(이때에 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음), 이러한 위원들은 “(외부)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수도권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수도권공항공사(Metropolitan Washington Airports Authority), 연방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민간부문(Private Providers Task Force) 등의 유관 집행기관들의 대표로 참가하고 있음
- (사례 3)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도시권 연합기구 엑스마르세유 프로뱅스(Métropole Aix-Marseille-Provence)도 각 지방정부의 시장(의장)들을 포함한 240명 연합의원으로 구성되었

77) <https://www.mwcog.org/committees/cog-board-of-directors/>. (위 내용 참조)

으며, 연합장(Président)과 부연합장(vice-présidents élus)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의회에서 선출 임명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있음

- 엑스마르세유(Métropole 연합은 농토, 산업단지, 도심지 등을 포함한 프랑스 남부 대도시권 지역을 관할하고 런던대도시권 보다 2배, 베를린과 뉴욕 보다는 3배나 더 큰 면적을 구성하고 있음(100개 이상 도시를 포함). 연합의회는 엑스마르세유 메트로폴의회(conseil de la métropole)이고 240명 대표의원들로 구성.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회의기구인 '메트로폴 시장 회의회(conférence métropolitaine des maires)와 함께 연합의회가 연합장인 대표(Président)와 20명 부대표(vice-présidents élus)를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함. 산하에 지역별 의결기구로서 6개 지역의회(conseils de territoire)도 조직하고 있음
- (소결) 주요 사업결정을 최종적으로는 '단체장' 중심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집행하도록 하고, 하위 조직으로 실무형 분과위원회로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조사' '인사' 그리고 주요 광역사무 분야인 '교통' '지역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세부적인 논의 후 갈등을 해소하고 협의·조정을 대부분 마무리한 후에 최종심의·의결을 확대형 '집행위원회'에서 단체장 중심으로 최종검토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면 확대 집행위원회의 운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특별연합위원회 외의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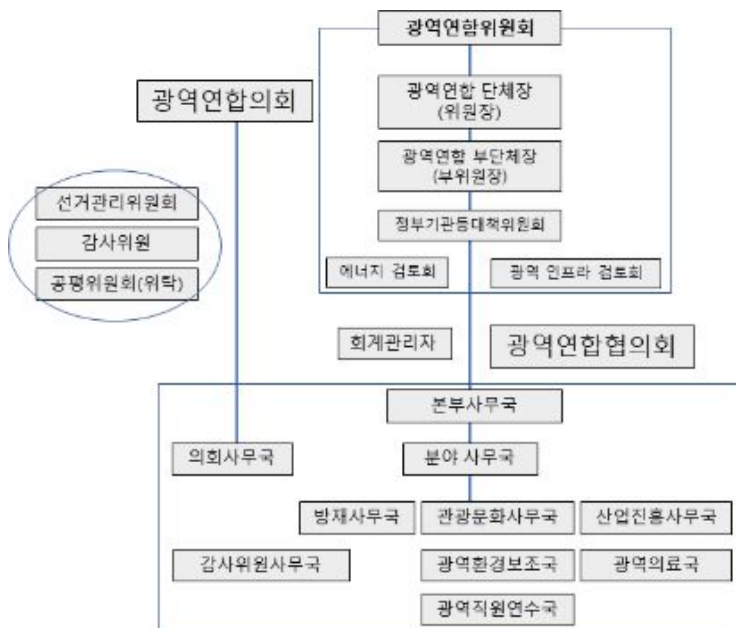
-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 특별연합에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주체들의 참여공간을 만들어서 정책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

- 확대형 '집행위원회'와 유관 자치단체들과의 연계 협력체제 활용 방안
- (사례 1) 맨체스터 대도시연합 GMCA의 경우, 광역권 쓰레기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분야는 10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쓰레기처리를 위한 예산분담(GM Waste Disposal Budget)은 9개 구성 지방정부만 참여하고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다른 구성 지방정부의 하나인 Wigan 기초정부는 9개 구성 지방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쓰레기처리사무를 관리하고 있음

- (사례 2) 간사이 광역연합의 규약 제15조제8항 규정에 의하면 「연계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음. 즉, 간사이 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과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연계 자치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 직·간접 참여도 독려하고 있음

<그림 4> 간사이 광역연합의

집행기관(광역연합위원회)과 산하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 간사이 광역연합의 집행기관 산하의 대책위원회 역할: 간사이 광역연합은 정부기관 이전 기본 방침 등에 근거한 각종 시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간사이 지역의 부현 관할 행정구역을 넘는 광역사무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에 관여하려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
 - 한편, 간사이 광역연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총무 상임위원회, 산업환경 상임위원회, 방재의료 상임위원회로 구성됨
- (사례 3) 오키 광역연합의 집행기구: 구성 자치단체장들 간 투표를 통해서 광역연합의 장 1명을 선출하고, 광역연합 부단체장은 구성 자치단체의 장, 직원, 외부인사 등 중에서 5명 이내로 선출함

- 한편 오기 <광역연합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상임위원회는 총 3개 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5명), 총무소방상임위원회(7명), 의료개호상임위원회(7명) 등임

4. 검토의견 결론

- (소결) 단체장 중심의 ‘특별연합위원회’는 단독형과 확장(혼합)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책임성과 신속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독형으로 단체장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 채택이 유리함. 이 경우에 회의 방식과 회의 개최 시기 등도 유연하게 운영 가능하고, 필요시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개최하기가 편함
- 그러나 확장(혼합)형의 ‘특별연합위원회’(집행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숫적인 구성인력이 많아 의사결정이 느릴 수 있으나, 신중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단계가 느릴 수 있으나,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집행력과 수용성은 그만큼 더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수준과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음.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다수의 구성위원들일 경우 월 1회 개최 등도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산하기관으로 분야별, 업무별 담당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집행력을 높일 수 있고, 외부의 집행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집행을 직접 수행하고 단체장과 연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운영해도 사업추진 효과는 담보할 수 있음
- 특히 ‘집행위원회’와 ‘연합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연합기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법정 필수 운영(상임)위원회의 유형은 “감사(평가)위원회, 선거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임
- (사례 1) 간사이 광역연합의 법정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즉, 선거관리위원회, 공평위원회 및 감사위원 등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이 광역연합의 선거와 직접 청구(조례의 제정·개폐 사무 집행에 관한 감사, 의회 해산, 장과 의회 의원 등의 해직, 약관 변경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공평위원회는 직원의 권리·이익의 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설치하였음. 즉, 간사이 광역연합 직원들의 근무에 관한 조치요구·불이익 처분심사 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감사위원은 광역연합의회에서 선출하며 광역연합(장)의 사무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무관리, 사업경영관리, 기타 행정운영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1인과 광역연합의회의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례 2) 오키 광역연합에는 독립된 3개 법정 위원회가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4명으로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진 주민 중에서 광역연합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함. 감사위원은 2명으로 광역연합의회가 1명 선출하고, 외부전문가 1인 등 총 2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례 3) 맨체스터 GMCA는 내부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선출직 대도시 시장의 업무를 감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지침(Home Office Financial Management Code of Practice)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한편 맨체스터 GMCA를 대표하는 대도시 시장도 내·외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동감사위원회’(Greater Manchester Joint Audit Panel)를 설치하여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찰활동에 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윤리위원회(GMCA Standards Committee)을 통해서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윤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소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의 하나는 ‘특별연합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들과 ‘연합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별도로 또는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동시에 <연합의회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사무총장’의 관할 하에 사무국의 한 과에서 <연합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리
 - 현행법상 운영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할 수 있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집행부)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소위원회 등이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1) 집행부가 총괄 운영하는 방식 (2) <연합의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으로 설치하여 대표의원들이 직접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함
 - 집행위원회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소위원회 활용 방안: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집행부)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소위원회 등이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 내부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 사무분야 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구성 자치단체의 소위원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표의원으로서 참여하는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주관하도록 하여, 구성 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간 쌍방향 소통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과 사전 갈등해소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 자치단체 의회를 대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의회 내 분야별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본래의 구성 자치단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사전 갈등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절차적인 감독과 모니터링등에 기반을 둔 사전 사후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자치법규의 관계

제1절 규약의 법적 성격과 내용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과 조례의 관계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자치법규의 관계

제1절 규약의 법적 성격과 내용

1. 규약의 법적 성격

- 규약을 공법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해당 규약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특정한 사무의 범위나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되는 규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구속함. 따라서 계약적법 효력이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는 의미는 규약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조례가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함⁷⁸⁾
- 이에 대해 규약의 성격과 공법상 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규약은 지방자치법상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공법상 계약과 규약은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수행에는 국가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공법상 계약은 주민에게 해당 계약의 규범적 효력을 요구하기는 그 성격상 어렵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범성이 인정되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제3자나 주민에 대해서도 규범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논거로, 규약을 특별조례(법률과 조례의 중간 정도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의 개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⁷⁹⁾

2. 규약의 내용

78) 김태호, 조례의 규범적 위상,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9, 190면.

79) 최우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9, 85-86면.

- 개정 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법령의 범위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사무소의 위치, 사무,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 방법,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사무처리 개시일,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규약의 내용이 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형식적 측면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약이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자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보는 이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역시 주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대신하여 규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논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행정법상 권한의 위임의 법리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위임하고, 그것을 위임받은 관청은 그의 명義와 책임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따라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사무를 특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게 되면 그에 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수임기관)는 그 명義와 책임으로 이를 처리할 권한을 행사하게 됨. 즉, 사무의 위임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법 제206조) 및 권한도 함께 위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해 재위임할 수 없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약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법 제199조 제2항), 국가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법 제199조 제4항),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06조 제3항)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⁸⁰⁾

80) 홍종현,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9, 12면.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과 조례와의 관계

- 규약 제7조 제1항은 “특별연합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사무 외에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하여 사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추가·변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의 충돌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음. 규약에 의거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4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규약 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하는 조례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별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모색되어 왔고, 현실적으로 다기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단정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기란 용이하지 않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정책상 특정한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할구역 및 구성원(수개의 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으로 구성됨)을 갖고 자치권도 특수목적의 수행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특색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개념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기능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특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임
- 지방적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은 일반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증설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함임
 - 둘째,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셋째, 사무 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넷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으로 향후 한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방식에 따른 규약과 조례의 관계 구분
- 2022년 1월 13일에 법적 효력을 갖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장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규약과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제199조부터 제211조)
 - 동남권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틀은 각각의 단체장과 의회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3(부울경) + 1(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광역연합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3절 지방자치법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준용 제외 조문

-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준용하는 조문과 준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 5. 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아닌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 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 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 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 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 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 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 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 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 4. 1., 2010. 4. 15., 2011. 7. 14.,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 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0. 4. 15., 2011. 7. 14.,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 4. 1.>	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p> <p>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p> <p>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p> <p>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p> <p>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p> <p>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 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p>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p>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p> <p>[본조신설 2009. 4. 1.]</p>	<p>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p>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p>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p>
<p>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p>	<p>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 4. 1.></p> <p>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p>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p>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p>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p>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p>〈신 설〉</p>	<p>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p>
<p>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p>	<p>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p> <p>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p> <p>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p> <p>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p> <p>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p> <p>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p> <p>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p>	<p>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p> <p>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p> <p>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p> <p>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p> <p>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p> <p>차. 주민등록 관리</p> <p>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2. 주민의 복지증진</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p> <p>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소류지(小溜池)·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p> <p>다. 농업자재의 관리</p> <p>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p> <p>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p>바. 농가 부업의 장려</p> <p>사. 공유림 관리</p> <p>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p> <p>자. 가축전염병 예방</p> <p>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p>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p> <p>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p> <p>다. 농업자재의 관리</p> <p>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p> <p>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p>바. 농가 부업의 장려</p> <p>사. 공유림 관리</p> <p>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p> <p>자. 가축전염병 예방</p> <p>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p> <p>타. 중소기업의 육성</p> <p>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p> <p>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p> <p>타. 중소기업의 육성</p> <p>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p> <p>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개발사업</p> <p>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p>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p> <p>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p> <p>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p> <p>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p> <p>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p>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p>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p> <p>가. 지역개발사업</p> <p>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p>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p> <p>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p> <p>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p> <p>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p> <p>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p>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p> <p>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p> <p>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p> <p>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신 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p>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p>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장 주민	제2장 주민
<p>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p>	<p>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p>
<p>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p> <p>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p> <p>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p> <p>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p> <p>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4. 1.></p> <p>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p> <p>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p> <p>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p> <p>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p>	<p>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p> <p>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p> <p>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제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2021. 10. 19.></p> <p>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p> <p>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p>	
<p>제15조의2(주민청구조제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제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p>	<p><삭 제></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7. 14.]</p>	
<p>〈신 설〉</p>	<p>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p> <p>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p> <p>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p> <p>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p> <p>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p>
<p><신 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p> <p>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p>	<p>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 4. 1.>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p>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p>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p>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p> <p>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p> <p>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p>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p> <p>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p> <p>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p> <p>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p>	<p>2. 제1항제2호: 해당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3. 제1항제3호: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p> <p>4. 제1항제4호: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p>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p> <p>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p> <p>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p> <p>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p> <p>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 <p>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p> <p>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⑮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p> <p>⑯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p>	<p>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p> <p>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p> <p>⑮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 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⑯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p> <p>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 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⑱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p>
<p>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p>	<p>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개정 2021. 10. 19.>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목개정 2021. 10. 19.]	
제19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신 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p> <p>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p> <p>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 7. 14.></p> <p>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p>	<p>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p> <p>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p> <p><삭 제></p>
<p><신 설></p>	<p>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p> <p>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p>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4. 1.></p> <p>③ 삭제 <2009. 4. 1.></p> <p>④ 삭제 <2009. 4. 1.></p> <p>⑤ 삭제 <2009. 4. 1.></p>	<p>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p>	<p>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4장 선거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지방의회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1절 조직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 21.>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p> <p>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검입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p> <p>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p> <p>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p>	<p>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검입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p> <p>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p> <p>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p> <p>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p> <p>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p> <p>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p> <p>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p>	<p>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p> <p>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3절 권한	제3절 권한
<p>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p> <p>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p>	<p>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p>	<p>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p> <p>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p> <p>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p> <p>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p> <p>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p>	<p>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7. 14.]</p>	<p>보고하여야 한다.</p>
<p>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p>	<p>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p>
<p>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제4절 소집과 회기	제4절 소집과 회기
<p>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p> <p>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p> <p>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p>	<p>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p> <p>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 7. 14.>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7. 14.>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關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關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14.>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절 위원회	제6절 위원회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신 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4. 1.]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p> <p>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p>	<p>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p>
<p>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7. 14.]</p>	<p>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7. 14.]</p>	<p>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p>	<p>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절 청원	제8절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한다.</p> <p>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p>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p> <p>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p> <p>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p> <p>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p>	<p>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p> <p>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p> <p>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p> <p>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p>
<p>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② 피심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결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절 질서	제10절 질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절 징계	제11절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0조(징계의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위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관 지위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 개정 2011. 5. 30.>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p>	<p>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p>
<p>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p>
<p>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p>	<p>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져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p>	<p>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져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p>
<p>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p> <p>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p> <p>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p>	<p>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p> <p>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p> <p>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p>
<p>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p>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제2관 권한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관 지방의회의와의 관계	제3관 지방의회의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p>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1. 5. 30.></p> <p>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p>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p> <p>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 5. 30.>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1. 궐위된 경우</p> <p>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p> <p>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2011. 5. 30. 법률 제10739호에 의하여 2010. 9. 2.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함.]</p>	<p>1. 궐위된 경우</p> <p>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p> <p>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p>	<p>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 지방</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에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p>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p>
제2절 예산과 결산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p>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p>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p>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p>	<p>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수입과 지출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0. 3. 31., 2016. 12. 27.></p>	<p>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p> <p>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제5절 보칙
제145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⑤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p>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p>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p>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p>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2절 행정협의회
<p>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p>	<p>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수 있다.	있다.
<p>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p>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p>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p>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p>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p>	<p>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p>
<p>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p>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p>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p> <p>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p>	<p>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14.></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4.></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p>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p>	<p>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p> <p>④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p>	<p>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③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의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 주무부장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p> <p>⑤ 주무부장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p>	<p>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p> <p>2.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p> <p>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0. 6. 8.]</p>	<p>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p> <p>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p> <p>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p> <p>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p> <p>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p>	<p>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p> <p>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제10장 국제교류·협력
	<p>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11.5.30>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p>
	<p>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p>
	<p>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절 운영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p>
	<p>제209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p> <p>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p>
	<p>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 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 다른 법률에서 시·도 또는 시·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③ 다른 법률에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7893호, 2021. 1. 12.></p> <p>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을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p> <p>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p> <p>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p> <p>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p> <p>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p>따른다.</p> <p>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p> <p>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① ~ <69></p> <p>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p>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체계와 내용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의의

제2절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특별연합 조례 목록 비교

제3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목록

제4절 위임사무 관련 근거 법령 및 검토 사항

제5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체계와 내용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의의

1.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의 의의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임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¹⁾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적인 조례제정권을 가짐

○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입법의 한 형식임

-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⁸²⁾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짐

2.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의 범위

8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2018. 5.

82)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2018. 6.

- 조례는 위임근거 유무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함. 위임조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무수행권한을 가지며, 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짐.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3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조례의 위임이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법제처 16-0305 회신, 2016.12.6. 의견제시)⁸³⁾

제2절 지방자치법상 필수조례 목록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반드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서 다음과 같은 조례 목록의 특별연합의 조례안 제시(15개 조례, 1개 규칙)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법 제21조제1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법 제40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법 제42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법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안」(법 제44조제5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법

83)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2018. 7.

제51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법 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76조제1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규칙안」(법 제74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법 제78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안」(법 제102조제1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법 제118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법 제125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안」(법 제125조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법 제130조제1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제168조제2항, 제2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법 제159조제2항)
-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법 제41조, 제105조,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4조, 제166조)
- 해당없음(제117조, 제141조, 제161조)

조문	해당 조례안
<p>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p>○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p>

조문	해당 조례안
② ~ ⑭ (생략)	
<p>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p>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p>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p>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 ② (생략)</p> <p>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 ⑦ (생략)</p>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p>제44조(의원의 의무) ① ~ ④ (생략)</p> <p>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안」
<p>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조문	해당 조례안
② (생 략)	례안」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53조(정례회) ① (생 략)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4조(임시회) ① ~ ② (생 략)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최다선의원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생 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 7. (생 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규칙안」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 ⑤ (생 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조문	해당 조례안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 ③ (생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안」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안」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없음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문	해당 조례안
③ ~ ⑥ (생략)	조례안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수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141조(회계의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해당없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조문	해당 조례안
③ (생략)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제161조(공공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해당없음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⑦ (생략)	○ 해당없음(법 제210조 준용배제 규정)

제2절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특별연합 조례 목록 비교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목록 109건(기본 88, 이관(위임) 19, 구성 지방자치단체 2)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109 건					
의회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공인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공인 조례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공인 조례안	
의회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울산광역시의 회 위원회 조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회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교섭단체 조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의회	의회	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의 회 회의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회의규칙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회의 규칙안	
의회	의회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의회	의회	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부산광역시의 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의회	의회	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	의회	1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회	의회	1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의 회 윤리특별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윤리특별위원 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 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 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시 출범시 조례	비고
의회	의회	1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회	의회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청원심사 규칙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청원심사규칙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회	의회	1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회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회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	의회	1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의원신분증 규칙	경상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회	의회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부산광역시의 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의회	의회	1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의 회 재무회계 규정	경상남도의회 예산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의회	의회	2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의 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2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구분	연 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 고
의회	2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포상 규정		울산광역시의 회 포상 규정	경상남도의회 포상 규정		
행정	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행정	2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행정	2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	2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행정	2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행정	2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 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행정	2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회 직제규칙 규칙		울산광역시의 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행정	3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전결 처리규칙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행정	3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3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행정	기획	3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약 제19 조에 따른 위원 회
행정	기획	3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변경 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	기획	3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조정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 회 조례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 회 조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 회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시정조정위원 회 조례안	
행정	기획	3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 조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행정	기획	3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행정	기획	3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국외출장 규정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경상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행정	기획	4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행정	기획	4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4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기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울산광역시 시기 조례	경상남도 등에 관한 조례		

구분		연 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 고
행정	행정	4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행정	행정	4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공무원 근무 규칙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행정	행정	4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행정	행정	4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인계인수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행정	행정	4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행정	인사	4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인 조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경상남도 공인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공인 조례안	
행정	인사	4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행정	인사	5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세종특별자치 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행정	인사	5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정보공개 조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정보공개 조례안	
행정	인사	5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행정	인사	5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시험수당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행정	인사	5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포상 조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경상남도 포상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포상 조례안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행정	인사	5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행정	인사	5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행정	인사	5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 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계	회계	5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	회계	5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회계	회계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물품관리 조례안	
회계	회계	6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회계	회계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회계	회계	6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청 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규정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6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용차량 관리규칙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회계	회계	6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 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계	회계	6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회계	회계	6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 원 재정보증 조례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 원 재정보증 규정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 원 재정보증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회계관계공무 원 재정보증 조례안
회계	세정	6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계	세정	6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수입증지 조례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수입증지 조례안
회계	세정	6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반	공보	6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보 발행 규정	부산광역시보 조례	울산광역시 공보 발행 규정	경상남도 공보 발행 규정	세종특별자치 시 시보 조례안
일반	소통	7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	법제	7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법제업무 운영 규칙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 회 운영 규칙	
일반	법제	7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일반	법 제 7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반	법 제 7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일반	법 제 7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반	법 제 7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회 고문변호사 조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일반	법 제 7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 회 조례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	법 제 7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경상남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반	법 제 7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반	법 제 8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폐기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일반	감사 8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감사 청구 조례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반	감사 8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행동강령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자치 출범시 조례	비고
일반 감사	8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감사 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반 감사	8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일상감사 규정	부산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울산광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일반 감사	8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 원회 조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세종특별자치 시 공직자윤리위 원회 조례안	
일반 감사	8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반 감사	8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반 감사	8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에 관한 규정			
이관사 무	8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조례					

구분	연 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시 출범시 조례	비 고
이관사 무	9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9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10 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10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10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10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 무	10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 무	10 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조례					

구분	연 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부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세종특별시 출범시 조례	비 고
국가 위임사 무	10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 무	10 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조례					
구성 지방자 치단체 제정 조례	10 8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구성 지방자 치단체 제정 조례	10 9	사무이관에 관한 조례안					

제3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목록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109 건
의회	의회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공인 조례
의회	의회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위원회 조례
의회	의회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의 규칙
의회	의회	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의회	의회	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의회	의회	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	의회	1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1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1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회	의회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	의회	1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1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	의회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의회	의회	1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의회	의회	2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	의회	2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	의회	2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포상 규정
행정	기획	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	기획	2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행정	기획	2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행정	기획	2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행정	기획	2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행정	기획	2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행정	기획	2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직제규칙 규칙
행정	기획	3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전결 처리규칙
행정	기획	3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변경 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	기획	3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기획	3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조정위원회 조례
행정	기획	3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행정	기획	3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행정	기획	3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국외출장 규정
행정	기획	4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행정	기획	4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	기획	4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기 등에 관한 조례
행정	행정	4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행정	행정	4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행정	행정	4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행정	행정	4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인계인수규칙
행정	행정	4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행정	인사	4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인 조례
행정	인사	4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행정	인사	5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행정	인사	5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정보공개 조례
행정	인사	5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행정	인사	5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시험수당 지급 조례
행정	인사	5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포상 조례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행정	인사	5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행정	인사	5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행정	인사	5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5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	회계	5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회계	회계		
회계	회계	6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회계	회계		
회계	회계	6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6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용차량 관리규칙
회계	회계	6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회계	6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회계	회계	6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회계	세정	6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	세정	6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수입증지 조례
회계	세정	6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반	공보	6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보 발행 규정
일반	소통	7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	법제	7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반	법제	7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반	법제	7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반	법제	7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반	법제	7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	법제	7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반	법제	7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반	법제	8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반	감사	8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반	감사	8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무원 행동강령

구분		연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일반	감사	8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감사 규칙
일반	감사	8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일상감사 규정
일반	감사	8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반	감사	8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반	감사	8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반	감사	8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이관사무		8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9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이관사무		10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 위임사무		107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조례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		108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		109	사무이관에 관한 조례

제4절 위임사무 관련 근거 법령 및 검토 사항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 무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가철도망구축계획 의 수립·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 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 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 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 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조례의 범위와 한계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21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 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 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 도의 조례 필요 불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중 “관계 시·도지사와 의 협의”, 제7조제3항 중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 협의사무가 조례제정을 필 요로 하는 사무인지에 관해 의 문 ○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	<p>「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p> <p>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p>	<p>○ 의견제출사무가 조례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무인지에 관해 의문</p> <p>○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p> <p>○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교통부장관을 대 상으로 한 의견제 출에 관한 사무	<p>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p> <p>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p>	<p>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2. 초광역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에 관한 사무		○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이행에 관한 사무	<p>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0. 6. 9.></p> <p>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p> <p><u>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전문개정 2012. 1. 17.]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p>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u>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u>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4. 7.]</p>	<p>○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무인지에 관해 의문</p> <p>○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p> <p>○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p> <p>-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p> <p>-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p> <p>-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p>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무	<p>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p> <p>① <u>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 	<p>○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p> <p>○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p> <p>-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p> <p>-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p> <p>-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의 확충 및 개선</p> <p>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계획</p> <p>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4. 7.]</p>	<p>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p> <p>특별회계 설치 조례</p>
	<p>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p> <p>② 건설·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p>	<p>○ 관련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함</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⑦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⑧ 이미 수립된 건설·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4. 7., 2021. 1. 5.> ② ~ ③ (생략)	○ 기본계획 수립시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의견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없음 ○ 대중교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제3조는 지방자치체를 포함한 행정주체의 책무에 관한 일반조항이며, 제12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 대중교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p> <p>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p> <p>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p> <p>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p> <p>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p> <p>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p> <p>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p> <p>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p>	<p>의 증진에 관한 조례</p> <p>-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p>「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 <p>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p>	<p>○ 종합계획 수립시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없음</p> <p>○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사무	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0.> ⑤ ~ ⑦ (생략)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⑥ ~ ⑦ (생략)	○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동수립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일반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u>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u>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 12. 2., 2012. 11. 23., 2013. 3. 23., 2019. 10. 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p> <p>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23., 2014. 7. 29.></p> <p>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p> <p>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p> <p>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p>	<p>원 설치 및 운영 조례</p> <p>-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p> <p>-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 무 면제 조례」</p> <p>-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p> <p>-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p> <p>-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p> <p>-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관할 시·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p> <p>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9., 2019. 10. 1.></p> <p>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p> <p>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p> <p>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9. 10. 1.></p>	
	<p>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광역 급행버스(보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p> <p>② <u>시·도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u>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p> <p>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p> <p>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p> <p>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p>	<p>○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조례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p> <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p> <p>-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p> <p>-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p> <p>-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p> <p>-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 ⑨ (생략)	무 면제 조례 -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9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⑧ (생략)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 중 초광역 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검토 필요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녹색기술·녹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촉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생략)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시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후위기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 4.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 ③ (생략)</p> <p>「경상남도 환경 기본조례」</p> <p>제4조(도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략)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② ~ ③ (생 략)
	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중 초광역 사무로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차별성이 있는 사무가 어떤 것인지 검토 필요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5. 초광역 수소경제 권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수소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p> <p>라.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에 관한 사무</p> <p>마.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없이 수소관련 사무를 이관 받은 사무로 규정</p> <p>-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되어 있음</p> <p>- 부산, 울산, 경남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제정하고 있음</p> <p>- 특별연합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필요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소산업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이관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정</p> <p>「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 기업 등의 유치, 제14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p> <p>「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p> <p>「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p> <p>제5조 수산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6조 수산산업의 육성,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기업 등 유치,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p>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p>가.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나.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없이 조선산업 관련 사무를 이관받은 사무로 규정</p> <p>○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로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는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전라남도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p> <p>-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p> <p>-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1장 총칙</p> <p>제2장 조선·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p> <p>제3장 조선·해양산업 육성 지원</p>
7. 초광역 디지털산업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과학기</p>		<p>○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적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무의 특정이 없음</p> <p>-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부존재</p> <p>-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에 관한 사무</p> <p>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p> <p>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존 제조산업대 규모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무</p> <p>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융합 혁신 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p>		<p>-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의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3조제3호에서 사업의 하나로 ‘정보통신산업 육성’ 규정</p> <p>「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8. 초광역 메가 R&D 혁신 체계에 구축에 관한 사 무	<p>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나.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따른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무</p> <p>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1. 26.]</p> <p>「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p>	<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무의 특정이 없음</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따른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무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8. 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8. 27.> [전문개정 2010. 2.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1.> [전문개정 2011. 6. 7.]	
9. 초광역 투자유치	가. 기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 초광역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는 구체적 법률의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사무		위임없이 기업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및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사무로 규정
10. 초광역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22.]</p> <p>「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p>	<p>○ 대학과 지역의 협업에 관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p>「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p> <p>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p> <p>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6. 1.]</p>	
11. 초광역 문화·관광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p>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p> <p>나.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p>	<p>「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p> <p>「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p>	<p>○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를 직접적 근거로 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되는 조례로 아래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사무 다. 관광개발계획 수립 에 관한 사무	<p>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p>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p> <p>○ 관광진흥법 관련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12.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 무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절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p>	<p>○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는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없이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무</p> <p>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p>	<p>2018. 9. 18.></p> <p>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시설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5. 6. 22.]</p> <p>「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p> <p>-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농축수산물품 지역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p> <p>-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13. 초광역 보건·의 료 통합 관리 체 계 구축 에 관한 사무	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u>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감염병병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2., 2020. 9. 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존재함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2020. 12. 15.></p> <p>1. (생 략)</p> <p>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3. 이하 생략</p>	<p>제13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들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p> <p>「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p> <p>「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p> <p>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경우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관련 사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p> <p>「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p> <p>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p> <p>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p> <p>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u>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p>	<p>설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p> <p>2.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p> <p>3.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p> <p>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u>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u></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p> <p>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12. 2.]</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산, 울산, 경남 각 각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p> <p>○ 다만, 항공구조구급대에 관해서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경우에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음. 항공대는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본부장이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p> <p>-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p> <p>②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7. 12. 1.></p> <p>③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 12. 1.></p> <p>④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신설 2015. 8. 19., 2017. 12. 1.></p> <p>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 8. 19., 2017. 12. 1., 2021. 9. 24.> [제목개정 2015. 8. 19.]</p> <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0. 6. 26.></p> <p>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p> <p>1.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안전장치·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p>	<p>-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p> <p>-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p> <p>○ 특별연합에는 소방본부를 두지 아니하므로 119항공대는 설치하지 아니함</p> <p>○ 부울경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구급구조대에 관한 업무와는 별개로 특별연합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초광역사무로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도입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여 초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하는 것임</p> <p>○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구조구급대 사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특별연합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사업이 추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관련 규칙 제정.</p>
구분	내용		
가. 기종	<p>1) 항공기의 기령(機齡)이 15년 이하일 것</p> <p>2) 8인승 이상으로서 동시에 2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p> <p>3) 최대 이륙중량이 2,500킬로그램 이상일 것</p> <p>4) 항속거리가 600킬로미터 이상일 것</p> <p>5) 쌍발엔진(Twin Engine)을 장착할 것</p> <p>※ 2)부터 4)까지에 따른 기준은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내용으로 판단한다.</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div>나. 안전장치</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헬기 위치 추적 장치 2)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 (ELT) 3) 항공기 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4) 조종실 음성기록장비 (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FDR) 5)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6)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Flotation Device for Helicopter Ditching). 다만, 해상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div>다. 의료장비</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들것 2개 2) 고정식 및 이동식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3) 인공호흡기 4) 환자감시장치 및 심장충격기 5)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흡인기 6) 경추고정장비, 견인부목, 척추고정판 및 골반고정기 7) 주입속도의 설정과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주입펌프 2개 8) 수액걸이 4개 9)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10) 화학검사장비 및 심장효소검사장비 11) 자동흉부압박장비 12) 청진기, 펜라이트, 후두경 세트, 마질 겸자, 하임리히 펌프, 백벨브마스크,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을 포함한 구급가방 	
		<div>라. 의약품</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2) 심폐소생술 및 부정맥처치를 위한 약물 3) 혈압상승제 4) 주사용 항고혈압제 5)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6) 진정 및 항경련제 7) 근육이완제 8) 뇌압강하제 9) 50퍼센트 포도당액 10) 부신피질호르몬제 11)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12) 항구토제, 진경제 및 제산제 13)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14)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15) 소독제 	
		<div>2. 환자인계점의 선정과 관리</div> <div>가. 환자인계점의 선정</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인계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이 호에서 "헬기"라 한다)를 배치한 병원, 헬기 조종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2)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헬기의 하강풍(下降風)에 의한 비산물(飛散物)이 적은 편평한 지면이어야 한다. 4) 헬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5) 헬기를 운영하는 지역 내에 환자인계점이 적정하게 분포하도록 그 개수가와 간격을 조정하여야 한다.</p> <p>나. 환자인계점의 관리</p> <p>1)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없는 곳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3)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4)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선정·취소·일시적 사용중지 및 관리자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과 헬기를 배치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5) 헬기 조종사가 운항 중에 환자인계점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항이 종료된 즉시 해당 시·도지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 및 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p>「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p> <p>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음</p> <p>○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직접적 조례로는 경기도만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정 운영</p> <p>○ 규약안 제6조에 따른 별표1의 13호 마목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임</p> <p>○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사업) 위임 현황」의 관련사업 내용(210-214페이지)은 위 위임범위와는 다른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14. 초광역 재난 대 응 체 계 구 축 에 관한 사 무	가. 지역방호협의회 구 성·운영에 관한 사 무	<p>「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p> <p>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둔다.</p> <p>② 시·도 방호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방호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p> <p>③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④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 3. 17.]</p> <p>「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p> <p>제14조(지역방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방호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행정부지사 2. 해당 시·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p>○ 법률의 위임 근거 규정 없음</p> <p>○ 지역방호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7조에 따름</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4. 해당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p> <p>5. 해당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p> <p>6. 해당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p> <p>7. 해당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중에서 시·도방호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p> <p>② (생 략)</p> <p>③ 시·도방호협의회 및 시·군·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p> <p>④ 지역방호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지역방호협의회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p> <p>⑥ 지역방호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지역방호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p> <p>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p>	
	나.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무	<p>「재해구호법」</p> <p>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u>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 관련 조례 없음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8. 4.]</p> <p>「재해구호법 시행령」</p> <p>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2.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본조신설 2016. 7. 7.]</p>	
	다. 지진 재해원인조사단	<p>지진·화산재해대책법</p> <p>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p>	<p>○ 법률의 위임 근거 규정 없음</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p>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p> <p>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p> <p>⑤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5. 7. 24.></p> <p>[제목개정 2015. 7. 24.]</p> <p>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p> <p>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p>	
	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진 및 화산 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p>○ 지진 및 화산 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초광역사무 여부에 관해 의문</p> <p>「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화산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7. 24., 2017. 3. 21., 2017. 7. 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8. 6., 2017. 3. 21., 2017. 7. 26.></p> <p>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5. 7. 24.]</p>
15. 초광역 대기 환경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p>	<p>○ 법률의 위임 근거 규정 없음</p> <p>○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관련 규정 있음</p> <p>○ 구성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시행계획 수립 사무에 관한 조례는 없음</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무</p>	<p>「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p> <p>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 대기오염경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p> <p>○ 다만, 경보의 확대시행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설정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설정된 내용과 범위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폐에 관한 논의 가능</p> <p>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p> <p>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p> <p>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p> <p>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p> <p>1. 미세먼지(PM-10)</p> <p>2. 초미세먼지(PM-2.5)</p> <p>3. 오존(O3)</p> <p>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2019. 2. 8.></p> <p>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p> <p>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p> <p>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p> <p>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p> <p>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p> <p>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p> <p>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p>	
16. 초광역 물류 체 계 구축	가. 초광역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	<p>○ 법률의 위임 근거 규정 없음</p> <p>○ 다만, 「물류정책기본법」</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에 관한 사무		<p>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p> <p>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6.></p> <p>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p> <p>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p> <p>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p> <p>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공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p> <p>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p> <p>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p> <p>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p> <p>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p> <p>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p> <p>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p>	<p>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p> <p>○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있음</p> <p>-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p> <p>-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p> <p>-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p> <p>○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무를 완전히 이관할 경우에는 위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가능</p> <p>「물류정책기본법」</p> <p>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p> <p>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물류정책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등) 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물류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p>

구 분	처 리 사 무	근 거 법 령	검 토
		<p>필요한 사항</p> <p>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20. 10. 20.></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p>	<p>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장(이하 “특별연합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6장 향후 과제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관련 향후 과제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관련 향후 과제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향후 과제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과제와 제언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관련 향후 과제

1. 특별연합의회 구성의 쟁점 및 검토

○ 쟁점 : 특별연합의회 의원 선임방법과 의원정수 배분방법

- 규약안 제9조(의회의 구성)는 특별연합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제1항)
- 의원정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회 9명, 울산광역시의회 9명, 경상남도의회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제2항)

○ 선임 방법의 검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특별연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출이 아니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각자 선임하는 방식임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됨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⁸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호)와 기초지방자치단체 (2호)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84)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권한의 일반성 또는 특수성에 차이가 있음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구성요소로서 주민이 필수적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고 간접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연합의회 의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은 적절함

○ 의원정수 배분의 검토

-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균등 배정하고 있음
-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법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별 균등 배분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른 차등 배분이 있음
- 균등배분과 차등배분의 어느 하나의 배분방식이 법령에서 정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는 특별연합의 규약에서 정할 사항임
- 규약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각9명씩 균등배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함

2. 의원의 임기의 쟁점 및 검토

○ 쟁점 : 특별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허용

- 규약안 제10조(의원의 임기)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1항 전단).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제1항 후단)라고 규정
- 동조 제2항, 제3항에서 임기개시와 만료시점, 잔임 등을 규정

○ 검토

- 특별연합의회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신분을 가지므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후 4년의 임기를 가짐
- 그런데 특별연합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
- 임기를 2년으로 한 취지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에게 특별연합의회의 의원으로 선임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연임을 허용한 것은 전문성과 장기간 추진을 요하는 분야의 심의 등을 위한 것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임기와 특별연합의회의 의원임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의원임기에 관한 규정(4년)을 동법 제210조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

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제2항)고 규정

○ 검토

- 특별연합의회 사무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독립적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서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처 내지 사무국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연합의회 직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에서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이른바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10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정책보좌관도 채용할 수 없게 됨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초광역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능력이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관련 향후 과제⁸⁵⁾

1. 집행기관의 쟁점 및 문제점

○ 쟁점 1 : 구성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연합의 장 겸직

- 규약 제15조 제2항은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지사 중 한 명이 됨. 즉, 규약에 의하면, 광역시·도지사 중 1인이 광역자치단체장과 특별연합의 장을 겸직하게 되는 것임.

○ 쟁점 1에 따른 문제점 1 : 특별연합장의 중립성·협력견인 리더십 문제

- 특별연합의 사무는 3개 광역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사무수행과정에서 어느 특정자치단체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직 광역단체장이 특별연합장을 겸직함으로써 그 중립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음.

85) 안권욱,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관한 향후 과제, 최종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22.3.15.

- 특별연합장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3개 광역시·도간의 협력전인 리더십임. 이는 특별연합이 보통자치단체와 같은 통치기능보다는 협력기능이 크게 기대되는 자치단체간의 협력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그런데 그 협력이나 협력전인 리더십은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중립성 한계문제가 특별연합장의 협력전인 리더십 한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쟁점 2 : 구성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연합의 사무총괄

- 규약 제15조 제1항은 “특별연합의 장은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연합장은 광역단체장의 기능과 특별연합장의 기능 양자 모두를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쟁점 2에 따른 문제점 2 : 특별연합장의 업무부담 과다 및 업무처리 합리성 저하

- 광역단체장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업무상의 기능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그것에 특별연합장의 기능적 역할이 더해지면서 업무량이 과다·과중될 수밖에 없음
- 특별연합장의 이러한 업무부담 과다는 사무 처리의 합리성 저하 문제로 이어질 있음

○ 쟁점 3 : 특별연합장의 1년 4개월 임기

- 규약 제15조 제3항은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년을 조금 넘어서는 임기는 지극히 짧은 공직기간임.

○ 쟁점 3에 따른 문제점 3 : 정책 및 업무의 단절성·불안정성·예측가능성 저하문제

- 사무총괄을 하는 특별연합장의 지극히 짧은 단기적 임기는 일차적으로 특별연합 정책 및 업무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 그 단절성 문제는 다시 특별연합 정책·업무의 불안정성, 예측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낳게 됨
- 결론적으로 1년4개월이라는 지극히 짧은 특별연합장의 임기는 정상적인 특별연합기능의 작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음

○ 쟁점 4 : 특별연합장의 공석·권한대행

- 규약 제15조 제5항은 “특별연합의 장이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특별연합장이 공석인 경우 연합의회에서 **새로이 특별연합장을 선출**한다는 의미임.

○ 쟁점 4에 따른 문제점 4 : 3개 광역시·도간의 경쟁·갈등

- 새로운 특별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3개 광역시·도간의 경쟁 및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2. 쟁점 1·2·3·4 문제의 대안

○ 대안의 기본방향

- 첫째, 사무처장(22년2월 합동추진단 집행기관 조직·정원 검토안)의 권한을 강화
- 둘째, 특별연합장의 선출방식 간소화
- 현 규약(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현 규약(안)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임.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한 규약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규약상의 근본적 한계극복을 위한 **규약 개정**은 특별연합 출범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1) 사무처장의 기능강화 및 특별연합장의 기능제한 방안

○ 특별연합장의 기능적 권한 제한 방안

- 기능적 권한 제한의 기본방향 : 특별연합장의 권한을 **조례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음. 그 기능적 권한제한의 **예시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별연합 대표기능**(중앙정부·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자치단체, 해외 공공기관·민간 기관 등과의 협력·갈등 등의 문제 및 사안처리)
- 둘째, **특별연합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설치·폐지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여
- 셋째, **파견 사무직원**과 관련한 사항
- 넷째, **특별연합위원회** 관련 사항

○ 사무처장의 기능적 권한 강화 방안

- 첫째, 조례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합장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적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채택.
- 둘째, 특히 특별연합 행정부서 **자체 사무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의 권한으로 부여·보장**.

○ 사무처장의 기능적 권한 강화를 위한 **임명·모집방식** 방안

- 첫째, 사무처장은 특별연합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회 임명동의**를 거쳐 특별연합장이 사무처장을 임명.
- 둘째, 직급은 1급, 사무처장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들 중 **개방형 공모제** 방식으로 모집.

○ **사무처장의 임기**는 연합장보다 더 길게 해야 할 것임.

- 그렇게 해야만, 연합장의 단기적 임기로 인한 특별연합 사무 및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예측 가능성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2) 특별연합장의 선출방식 간소화 방안

- 집행기관인 특별연합장의 선출은 **한 번에 4년간, 3명의 특별연합장 모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이러한 선출방식은 실질적으로 3개 광역시·도지사의 특별연합장 취임 순번을 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임.
- 특별연합장의 유고시에는, 나머지 광역시·도지사 중에서 취임 순번에 따라 특별연합장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3. 행정기구의 쟁점 및 문제점과 대안

○ **쟁점 5 : 파견 지방공무원**

- 규약 제16조 제3항은 “특별연합 직원은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성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당수가 **특별연합의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파견 직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사무직원의 교체 및 인사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어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특별연합 **업무추진상의 애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쟁점 5에 대한 대안**으로

- 첫째, 파견 공무원의 특별연합 **최소 근무기간 규정** 설치
- 둘째, 특별연합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규정의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무 관련 향후 과제⁸⁶⁾

4. 재무의 쟁점

○ 쟁점 6 : 특별연합 수입원의 구분 및 종류는 적절함

- 규약 제16조 제1항은 특별연합 수입원을 제1호에서 제5호까지 5개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5개 수입원 분류 및 종류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제5호의 “그 밖에 수입” 규정 역시 적절한 표현의 규정으로 판단됨. 본 규정은 제1호 ~ 4호까지의 수입원 외에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 수입’이라는 표현의 규정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판단됨

○ 쟁점 7 : 운영비 균등부담과 사업비 구성자치단체간 협의·결정 규정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규약 제1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운영비의 3개 광역시·도간 균등부담 규정은 적절함.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운영비는 특별연합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경비에 해당함. 동시에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부담금은 3개 광역시·도가 특별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부담금임. 그러므로 운영비는 균등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3개 광역시·도 구성원의 연합의회 균등의석배분 임. 즉, 의회의석 균등배분을 통해 특별연합 자치행정과정에서 3개 광역시·도의 권한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그러므로 권한의 균등배분에 따른 부담의 균등배분 원칙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운영비의 3개 광역시·도간 균등부담 규정은 적절함

○ 다음으로, “사업비 구성자치단체간의 협의 결정” 규정 역시 적절함

-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이나 집단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짐
- 그러므로 그 사업의 수혜지역·집단의 규모에 따라 그 수혜에 상응하는 응의부담 원칙을 적

86) 안권욱,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관한 향후 과제, 최종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22.3.15.

- 용하여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3개 광역시·도의 차등부담의 수준은 구성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사업비 구성자치단체간의 협의 결정” 규정 역시 적절함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위원회’ 관련 향후 과제⁸⁷⁾

5. 위원회의 쟁점 및 문제점과 대안

○ 쟁점 8 : “구성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가 유일

- 규약 제19조 제1항은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규약은 3개 광역시·도지사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연합위원회 외에는 다른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 쟁점 8에 따른 문제점 : 주민 및 주요 지역주체들의 참여 결여
- 특별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방자치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경제인, 시민사회, 전문가 등 주요 지역주체들이 특별연합의 자치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함
- 이처럼 주민 및 주요 지역주체들이 특별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합이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지역에 연착륙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효율적 지방자치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쟁점 8 문제점에 대한 대안 : 민관협력기구, 감사위원회, 주민조례청구·청원 운영

- 관관협력기구인 현 특별연합위원회에 더하여 민관협력기구, 감사위원회, 주민조례청구·청원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구상할 수 있음

○ 우선, ‘민관협력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규약상의 특별연합위원회는 3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관관협력기구임. 관관협력기구 특별연합위원회에서 3개 광역시·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쟁·갈등 사안 및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협의·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특별연합위원회

87) 안권욱,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관한 향후 과제, 최종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22.3.15.

의 갈등합의·조정 한계는 그 위원을 각 광역시·도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민관협력기구는 주민·경제인·시민사회·전문가·특별연합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회** 설치를 구상할 수 있음
- **민관협력기구는** 특별연합 정책·사업의 심의·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감사위원회는 특별연합 의결·집행기관 모두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필요함

- 연합의회가 당연히 연합집행기관을 감시하겠지만, 연합의회 의원들의 주된 관심·이해 중점은 각자 자신이 소속된 광역시·도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연합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구조로 인해 특별연합 전체이해의 차원에서 연합의회 견제·감시 기능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특별연합 전체이해의 차원에서 특별연합 의결·집행기관 모두를 견제·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주민조례청구·주민청원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함

- 이들 제도를 운영해야하는 일차적 필요성은 주민의 의견을 특별연합 자치행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임. 주민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적 조치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특별연합 기관구성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 특별연합 기관구성의 핵심 특성은 주민이 직접 선출·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음. 즉, 특별연합의 의결기관도 집행기관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음
- 주민이 기관구성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조례청구나 주민청원까지 할 수 없다면, 주민의 참여공간이 특별연합 내에 전무하게 됨
- 그런데 특별연합의 운영비용이나 사업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주민임. 비용 부담자가 비용만 부담하고,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 자치기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경우임.
- 따라서 특별연합이 주민조례청구제도와 주민청원제도를 운영해야하는 당위적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임.

○ 특별연합 기관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의견제시도 있지만, 그 제도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임.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주민이 기관을 직접 선출·구성하는 것을 요구함. 그런데 특별연합 의결·집행기관 모두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구성하고 있음. 그러므로 주민소환제의 도입

이 쉽지 않은 제도적 환경임.

- 둘째, 특별연합은 그 구성원을 주민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구성원이 아닌 주민이 특별연합 기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

6. 맺음말 : 검토·제안 사항의 처리

※ 본 글에서 검토·제안하고 있는 사항의 처리는

- 현 규약(안)을 직접 수정하기 보다는, 조례나 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현 규약(안)의 한계를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임.
- 물론, 조례나 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규약(안)의 한계를 보완·수정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적 소견으로, 최소한 4월쯤에 특별연합이 출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임. 이러한 시간·일정을 고려할 때, 규약(안) 수정으로 인해 특별연합출범이 4월을 넘어서게 하는 지연은 곤란하다는 생각임.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관련 향후 과제

1. 규약에 열거된 사무의 집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

- 법령뿐만이 아니라 세부 시행규칙이나 세칙 등 원활한 사무 집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관련 세칙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이를 통한 관련 법제의 신속한 정비 및 입법 개선 요구

2. 사무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과 이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규약에 따르면 특별연합이 수행하는 사무는 위임사무를 제외하고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등 총 16개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어떤 사무를 우선 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사무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사무에 따라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무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무 집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금의 사전 조정 등 사무 집행 시 우려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사무의 성격에 따른 구성 지방자치단체 별 주된 담당 사무의 결정

○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위 사무별로 주된 집행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16개의 사무를 그 사무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배분의 기준과 원칙의 사전 결정이 필요
- 사무에 따라서는 그 집행 과정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무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둘 필요가 있음

○ 주된 사무가 배분된다면 그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사무에 따라 사무소의 위치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에 따라 유연한 사무소의 운영을 해 나간다면, 주된 사무소 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도 피해 나갈 수 있음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와 중첩하는 사무의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초광역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와 중첩되는 사무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탄소중립, 신소재, 환경 등의 경우에는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단위 사무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의 분석이 필요
- 국가사무의 이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무이양의 요구가 필요하고,
-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특별연합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봄

5. 사무처리를 위한 특별연합 권한의 독립성과 책임

- 규약에 따르면,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 권한의 독립성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 그 권한에 근거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책임의 종류와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사무감사와 사무조사 및 기타 감사에 관한 일반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특별연합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사무감사와 사무조사 등의 규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연합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감사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사무감사에 대한 규범의 정비는 대 주민, 대 정부 등 특별연합의 신뢰성의 확보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안권욱(2017),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발전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특별시.
- 안권욱(2012a), "광역연합형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201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575~618, 한국지방자치학회.
- 안권욱(2012b), "동남광역경제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와 발전방안", 「2012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517~545, 한국지방정부학회.
- 안권욱(2011),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안에 대한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정책적 함의", 「경남발전」 통권 제114호, pp.24~42, 경남연구원.
- 안권욱·배준구(2021), 「균형발전·지역혁신 관련 해외사례 프랑스·독일(지역혁신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동진문화사, 안권욱(독일), 배준구(프랑스).
- 안권욱·손은일(20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독일·스위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8권, 제4호, pp.155-180.

[독일 광역연합 제도]

- Benz A.(2003), "Regional Governance mit organisatorischem, Das Beispiel der Region Stuttgart", in: Information zur Raumentwicklung, Heft 8/9, pp.505-512.
- Steinacher B.(1998), "Der Verband Region Stuttgart", in: Der Bürger im Staat, Stuttgart: L&B. 1-17.

[프랑스 광역연합 제도]

- 배준구. 2004. 『프랑스의 지방분권』. 도서출판 금정.
- _____, 2014. 『프랑스 지역발전정책』. 부산: 도서출판 금정.
- _____, 2016. 『프랑스 도시 및 지역정책연구』. 창원시정연구원.
- _____. 2012. 프랑스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 특징: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제24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 69-95.
- _____. 2017.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방분권정책 및 지방분권 개헌 실현방안 모색 워크숍』.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22-41.
- _____. 2019.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개혁과 함의. 『2018년 한국지방정부학 회동계학술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181-204.
- _____. 2020. 부산거점 메가시티로의 전망. 부산행복연구원 6차 전문가 초청간담 회. 109-128.
- _____. 2021a. 메가시티 논의의 국내 추진 동향과 과제. 『메가시티와 지역재생심 포지엄』. 울산연구원 · 경남연구원 · 부산연구원 ·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 83-92.
- _____. 2021b. 프랑스의 지방분권 동향과 시사점.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한국 공법학회. 181-204.
-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Locales. 2010. Il est temps de decider,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5 mars 2009. Assemblée Nationale, Texte adopté No. 472, Projet de loi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CGET). 2015. Pour une république au service de l'égalité et d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 DATAR. 2013. 5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e Gaulle J. 2004. L'avenir du plan et la place de planification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reyfus Bernard. 2001. Vademecum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territoriale. Paris: Ed. afarnaud franel.
- Fonrojet Sévrin. 2005. Les nouve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regards sur l'actualité No 308.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Isaia Henri. 1999. L'évaluation des nouveaux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Paris: L.G.D.J. Le Lidec Patrick 2008. La réforme des institutions locales. Politiques publiques. La France dans la gouvernance européenne sous la direction de Olivier Borraz et Virginie Gurraudon. Sciences Po Les Presses. 259-261.
- Luchaire Yves et Luchaire François. 2003. Décentralisation et constitution. Paris: Economica.
- Madiot Yves et Le Mestre Renan. 2007.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Armand

Colin.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2016-2020.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16-2020.

Marshall Tim. 2009.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Franc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planning. Oxford Brookes University.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06. La politiqu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en France, 22-23.

Monod Jérôme et De Castelbajac Philippe. 2016.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PUF.

Moreau Jacques. 2002. Administration régionale, départementale et municipale. Paris: DALLOZ.

Perben Dominique. 2010.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sur le projet de loi(No 2280) adopté par le Sénat,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ai 14 2010. Tome 1.

Piron Michel. 2006. Rapport d'informa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sur l'équilibre territorial des pouvoirs No 2281.

Pissaloux Jean-Luc. 2014. Planification, développement durable et action publique locale, Paris: L'Harmattan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rapports/r2516-tl.asp>

http://www.dgcl.interieur.gouv.fr/workspaces/members/desl/documents/clench/4162/clench2007_06/downloadFile/file/CLENCH2007_c05.pdf.

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oire_44/contrats_etat_regions_173/contrats_2007_2013_1488.html

<http://www.nantesmetropol.fr>

http://www.nantesmetropole.fr/la-communaute-urbaine/institution/les_recettes-51366.kjsp

<http://www.nicecotedazur.org/la-metropole/organisation>

<http://www.interieur.fr/section/reforme-collectives/actualites>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3239624>

<https://www.vie-publique.fr/fiches/20129-quest-ce-quune-metropole>)

2022. 3. 7. 공동연구진 제2차 화상회의 19:30 ~ 20:50 <회의>

참석자: 강재규 교수(인제대), 안권욱 교수(고신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왕승혜 박사(법제연구원)

- ◇ 규약안은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3개 시도에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안○○) 집행기관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규약안 보완되었으면 하는 방향은 2가지인데, 하나는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임. 사무처장은 규약안에는 없지만, 집행기관 검토안에는 사무처장이 포함되어 있음.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집행기관을 보완할 필요에 대한 논의와 연관됨. 연합장의 선출방식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임. 우선 사무처장의 권한 강화를 해야겠다는 이유는 단체장이 연합장이 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이와 같이 단체장이 연합장이 되는 구조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연합장의 업무가 과다함. 과부담 문제가 발생함. 단체장은 할 일이 많기 때문임. 특별연합의 일까지 하게 되면, 업무 과부담이 발생하게 됨. 그리고 업무수행에서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안정성 문제, 지속성 문제도 있음. 정책자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으면서 특별연합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의 경제주체, 사회활동 주체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임.
- ◇ 중립성, 정책의 지속성, 미래 예측가능성 문제 때문에,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연합장의 권한 제한 예시를 하면, 특별연합의 대표기능을 하고, 특별연합 기구, 설치, 폐지할 때 관여하는 권한, 인사에서 파견 사무직원과 관련되는 사항, 특별연합위원회 관련 사항만 기능적 권한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사무처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지방협력회의, 협력 및 갈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을 대표기관으로서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대정부 관계에서의 활동이 중요할 것임. 3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들이 필요할 것임. 요컨대 대표기능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역할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른 하나는 연합 자체를 설치 또는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연합의 행정기구

를 설치 폐지할 때 관여하는 기능, 파견직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줌. 특별연합위원회 운영기능을 가짐

- ◇ 특별연합 소속 인사권은 사무처장이 갖도록 함. 이렇게 조례 내에서 연합장의 권한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대부분의 권한은 사무처장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단체장이 구성과의 협력의 문제, 구성의 일처리 내용에 대한 지식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사무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무처장 이외에 단체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순번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부산시장>경남지사>울산시장이 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선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물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단체장을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2명의 단체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임기를 정해야 할 것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때에도 권한대행에서, 새롭게 뽑을 때, 단체장이 공석일 때, 의회에서 새롭게 뽑으면 가능하다, 3개 시도 간 의회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임.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음. 한 번에 4년 간 3명을 선출하고, 단체장이 유고시에는 나머지 단체장들이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약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파견직원과 자체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파견직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40% 이상이 되면, 특별한 규약이 아니라, 조례에서 최소한의 파견직원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잦은 인사교류가 있으면, 사무직원 교체가 있으면, 사실은 업무집행상의 애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음. 그래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파견직원은 최소한 2년 또는 24개월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파견직원이 중앙정부에 파견갈 수도 있는데, 승진에 유리한 반면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승진에 불리할 수도 있음. 파견직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지 의심이 됨. 그래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정하고,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강제로 가게 되면, 직무 몰입도, 직무 동기부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상에 반영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인사규정 조례에서 첫째, 파견직원들의 최소근무기간 규정 두어야 함.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야 함. (그럼 특별연합의 인센티브 규정에 구성은 구속되는가 ? 그렇다고 보아야 함
- ◇ 운영비 균등문제, 운영비는 균등부담이 원칙이어야 함. 운영비의 균등은 적절하다

고 생각함. 운영비는 회비의 성격을 가짐. 지방세 중에서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주민세가 대표적인데,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회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제17조에서 운영비 균등부담에 대해서는 바람직함. 회비적 성격이 강함. 두 번째 논거는 권한이 동등하면 부담도 동등한 것이 원칙인데, 의결기관의 의석배분을 볼 때, 의석 배분을 볼 때, 균등한 권한, 균등한 부담으로 함

- ◇ 사업비는 차등 부담하되, 차등의 내용은 서로 논의하도록 함. 행정학에서 재정학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으므로, 사업에서는 기본원칙이므로, 소득재배분도 있지만,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하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함
- ◇ (최○○) (위원회) 관련하여서는 현재 규약안은 그대로 유지가 바람직함. 규약안에서의 특별연합위원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임. 관관기구임. 그렇다면, 민관협력기구도 필요한데, 규약안에 넣게 되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민관협력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둬. 기능은 심의 또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사전적인 심의기능, 사후적인 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부울경 전문가 시민사회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음. 여기에 주민이라는 내용이 단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음. 특별연합이 자치기관이라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기 필요함. 주민협력기구,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임. 인사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소환제도 고려해서, 소환제도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조례규칙청구제도가 가능할 수 있음. 주민청원제도라도 가능할 것임. 지금 현재, 특별연합의회도 있고,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서,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이 전면 적용 될 것임
- ◇ 규약안에는 사무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무처장에 관한 내용은 규약안에는 없는데, 합동추진단 집행기관 사무기구 검토안이 있음. 사무기구 표에 있어서 사무처장이 1급 아니면 2급으로 할 예정임. 사무처장을 의회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규약이 만들어지는 절차에서 복잡해 질 수 있음. 지방의회에 사무처장 임명 동의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임. 사무처장에게, 연합장이 임명하게 되

면, 그만한 권한을 줄 수 없음. 여기 굳이 왜 뺐을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듦. 전략상 출범을 시켜야 하고, 사무처장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면, 임명과정에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최○○) 사무처장은 공무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특자체 성공여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중앙관료출신을 넣으면 안 될 것임. 사무처장의 지위는 너무나 중요할 것임. 지역의 사정을 알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 처음에 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임
- ◇ (강○○) 사무처장이나, 국장, 연합장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하는 형태가 있던데, 규약을 마련할 때, 반영하지 못하였는지, 표준규약안 때문에 그랬는지, 의문임. 연합장은 구성 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함.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임
- ◇ 행정기구와 직원을 둬. 형식적으로는 광역행정형으로 운영할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됨. 광역자치형으로 운영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 ◇ 행정기구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처장을 둘 수 있음. 사무처장의 임기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제, 임기제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무처장을 임기제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총장의 임기는 독일의 경우 8년임. 전문가로 구성함. 공무원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선출도 연합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선출함. 임기는 연합장의 임기와 사무처장의 임기가 다름. 임기는 길게함. 연합장의 지위가 위에 있기는 한데, 중앙정부나, 대외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은 연합장이 수행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이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함
- ◇ 사무처장이 정책안정성이 담보할 수 있게 됨. 특히나 초기 단계에서 특별연합의 초기사무를 예로 들면, 광역교통망인데, soc 분야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상당히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그런 업무들을 정책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정책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무처장이 임기가 상당히 길어야 함
- ◇ 그리고 사무처장은 개방형이어야 함. 이 또한 가능한 제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제19조와 관련하여 특별연합위원회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구성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둬.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협의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무와 관련한 것, 경비부담에 관한 것, 가입탈퇴와 관련된 것. 3개 시도지사의 협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될 일이므로 필요한 기구임. 사무처리 분쟁,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

은 복잡한 것이 될 것임. 만약 분쟁 관련된 내용은 광역단체장이 이해당사자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3명이 분쟁이 해결될지 문제되는데, 관관-협력기구이 있다면, 민관 협력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 대표기구협의체와 주민참여기구는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함. 여기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임
- ◇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부산, 경남, 울산처럼, 보통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규약안에서 주민이 빠져 있는데, 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서, 개정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음. 행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정되었음.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 주민발안, 요건에 관한 내용은 별개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주민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주민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보완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정책의 효용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현재 의회가 보통지방자치단체 의회 기능보다 실제에서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됨. 따로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듦. 특별연합의회는 일반의회보다는 기능이 떨어질 것임. 따라서 감사기능 수행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 회계감사위원회는 주민이 직성하는 규정도 있음. 스위스의 경우. 주민들에 의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있을 때 자치기관으로서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주민소환은 직접선출의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임. 다른 일반적인 제도에도, 주민조례청구문제, 청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 (최○○)(소환제도 관련) 직접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환할 수 없음. 비례대표는 소환이 되지 않으므로, 하물며 특별단체장 소환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음. 소환이 청구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소환권자도 특정하기 어려움. 청구권을 3개 자치단체 포함하여 몇 %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임. 일정한 연서를 받게 하여도 불가능 할 것임
- ◇ 사무처와 사무기구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이자는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규약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구성함. 사무처의 국장이나 과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개방형으로 모시고 오려면, 제16조를 모두 다 개정

해야 하는 상황임.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됨. 지금은 공무원으로 하게만 되어 있음.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명예직이 되는 것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보면, 여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구성 단체장으로 한다는 말은 없음. 그러면 사무처장 사무국장 조문이 어렵다면, 여기 조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음

- ◇ 사실상 사무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사무를 나열하면서 목록을 정하고 있는데, 34개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지방자치법 조문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음. 지방자치법은 특정한 사무 말하자면 교통..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것인데, 운용상은 바람직한데, 가능한 조례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만드는 것이 맞음. 포괄적으로 주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야 함. 사무처리에서 재량과 활용의 측면이 넓도록 해야 할 것임. 사무에 관한 내용 관련하여 사무는 초광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 사무관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생각해 보시면 광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가적인 사무로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 광역적인 업무와 관할의 중복 때문에 광역 사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정의 규정과 연결하였음. 균특법도 관련이 있지만, 목적과 취지가 지방자치법과 다르고, 개발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제199조 광역적으로 초광역이라고 하는 순간, 부산과 경남에 관한 물공급에 관한 사무는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행정청이 있고, 권역수준의 광역수준, 기초수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데, 권역이 있는데, 초광역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사무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 (안○○) 그 밖의 수입이라는 용어는 적정함.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주요 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라고 할 때, 통계자료를 낼 때 기타수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용은 이미 주요 수입원을 열거한 상태이므로 그 밖에 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수입으로 해야 함